

연구보고서 2025-02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정은희
강신욱·이원진·오욱찬·신재동·이주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전문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5-02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81-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02>

발|간|사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25년 현재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20주년을 돌아보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전에 한국복지패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검토 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표본의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복지패널에서 표본의 대표성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영역 중 하나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인구 변화와 패널 탈락을 반영한 가중치 조정을 통해 대체로 대표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전국 대표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문제를 진단했다. 진단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초기 조사에서의 불안정성, 추가표본 도입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장기 가중치 산정에서 오는 잠재적 편향 등이 그것이다.

조사 문항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은 사회정책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문항은 신속하게 반영해 왔다. 이는 정책의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실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여가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영역, 특히 소득보장 분야의 문항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반면에 복지서비스 정책의 대상자 및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문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 연구는 소득보장 영역의 문항에서 응답 빈도가

낮고 영향력이 미미한 문항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타 데이터 대비 경쟁력이 낮은 문항 역시 개선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조사 단위와 문항 구성과 관련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운영 체계는 숙련된 조사 인력의 고령화,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패널조사 사례를 검토하여 복지 패널의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원에서는 정은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 오욱찬 연구위원, 이원진 연구위원, 이주미 부연구위원, 신재동 선임전문원이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에 유용한 자문 의견을 주신 본원의 이현주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유빈 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0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 및 발전 방향	13
제1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	15
제2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쟁점 검토	29
제3절 소결	57
제3장 소득보장 조사 내용 현황 및 발전 방향	61
제1절 조사 항목 개편의 필요성	63
제2절 소득 관련 항목	64
제3절 부채, 이자, 재산 항목	89
제4절 생활비 항목	99
제5절 소결	109
제4장 사회서비스 조사 내용 현황 및 발전 방향	111
제1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검토 방향	113
제2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변화 및 현황	114
제3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쟁점	129
제4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발전 방향	137

제5장 패널 운영 국내외 사례 검토	141
제1절 국내 패널 운영 사례	143
제2절 해외 패널 운영 사례	151
제3절 패널 운영 효율화 방향	168
제6장 결론 및 제언	175
제1절 연구 결과 및 제언	177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81
참고문헌	183
Abstract	189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한국복지패널조사 및 다른 조사들의 표본 개요	15
〈표 2-2〉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20
〈표 2-3〉 2012년 추가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유지율	21
〈표 2-4〉 2022년 추가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21
〈표 2-5〉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전체 표본	31
〈표 2-6〉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원표본	35
〈표 2-7〉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 추가표본	36
〈표 2-8〉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17차 추가표본	37
〈표 2-9〉 성·연령 집단별 18차 조사 패널 생존 확률	38
〈표 2-10〉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전체 표본, 가중치 적용	41
〈표 2-11〉 18차 조사 패널 생존 로짓 분석	49
〈표 3-1〉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활용변수	67
〈표 3-2〉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68
〈표 3-3〉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	69
〈표 3-4〉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정부보조금 1	70
〈표 3-5〉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정부보조금 2	71
〈표 3-6〉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정부보조금 3	72
〈표 3-7〉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3
〈표 3-8〉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소득	74
〈표 3-9〉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사적 이전소득	75
〈표 3-10〉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1(가중치 미적용)	78
〈표 3-11〉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미적용)	79
〈표 3-12〉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1(가중치 적용)	80
〈표 3-13〉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적용)	81
〈표 3-14〉 가구 경상소득 대비 비중(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1% 이하인 항목)	83
〈표 3-15〉 가구 경상소득 대비 비중(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5% 이하인 항목)	84
〈표 3-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관련 조사 항목 개요(18차 조사 기준)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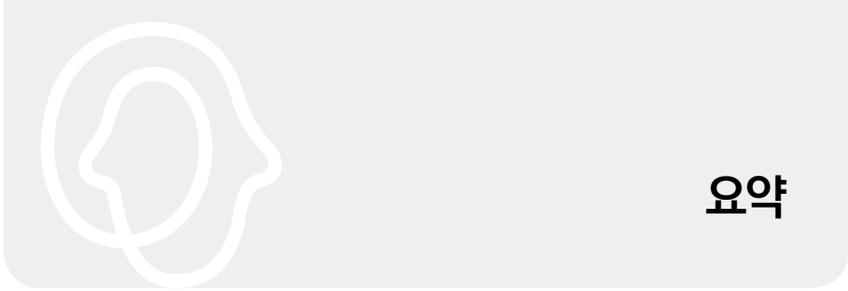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표 3-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주기별 응답 가구 수	87
〈표 3-18〉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조사 항목(18차 조사 기준)	88
〈표 3-19〉 한국복지패널 부채 및 이자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90
〈표 3-20〉 부채 및 이자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가중치 미적용)	92
〈표 3-21〉 재산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미적용)	93
〈표 3-22〉 부채 및 이자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가중치 적용)	94
〈표 3-23〉 재산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적용)	95
〈표 3-24〉 특정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항목의 부채 비중	96
〈표 3-25〉 특정 자산이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항목의 자산 비중	98
〈표 3-26〉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1	100
〈표 3-27〉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2	101
〈표 3-28〉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3	102
〈표 3-29〉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4	103
〈표 3-30〉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소비지출(가중치 미적용) ..	104
〈표 3-31〉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이전지출(가중치 미적용) ...	105
〈표 3-32〉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소비지출(가중치 적용) ..	106
〈표 3-33〉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이전지출(가중치 적용) ..	107
〈표 3-34〉 특정 생활비 지출이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항목의 지출 비중	108
〈표 4-1〉 한국복지패널의 사회서비스 조사 구조	115
〈표 4-2〉 한국복지패널의 사회서비스 조사 내용 변화	116
〈표 4-3〉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 조사 내용 변화	117
〈표 4-4〉 바우처 서비스 조사 내용 변화	117
〈표 4-5〉 장기요양보험급여 조사 내용 변화	118
〈표 4-6〉 가구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	120
〈표 4-7〉 바우처 서비스 항목의 변화	121
〈표 4-8〉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	123
〈표 4-9〉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	126



〈표 4-10〉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	128
〈표 4-1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서비스 영역 분류 체계	133
〈표 5-1〉 패널별 조사 목적과 표본 단위	144
〈표 5-2〉 패널별 표본 구성 및 관리	146
〈표 5-3〉 패널별 조사 방식과 운영 구조	149
〈표 5-4〉 조사 방식별 장단점	162
〈표 5-5〉 저소득층 과대표집과 인구비례 표본 방식 비교	169
〈표 5-6〉 조사 수행 방식별 장단점	173
〈표 6-1〉 소득보장 영역 조사 문항 검토 결과	179

그림목차

[그림 2-1] 성·연령 집단별 비율, 인구총조사 대비 한국복지패널조사 전체 표본	33
[그림 2-2] 15세 이상 고용률	43
[그림 2-3] 1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44
[그림 2-4]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분포	47
[그림 2-5] 66세 이상의 가처분소득 분포	48
[그림 2-6] 1차 가처분소득분위별 1~18차 가처분소득 중위값	53
[그림 2-7] 7차 가처분소득분위별 7~18차 가처분소득 중위값	54
[그림 2-8] 가중치 적용 여부별 가처분소득 중위값	56
[그림 5-1] PSID의 패널의 흐름도	153
[그림 5-2] Understanding Society 패널의 흐름도	159



요약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발전을 위해 표본의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개인을 추적 조사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널조사 응답 대상자의 노화, 사망, 이사 등으로 인해 추적 불가능한 가구가 발생하며, 장기간 반복 조사에 따른 응답 피로 등으로 패널 탈락 문제가 발생한다. 패널 탈락은 표본의 대표성과 분석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복지패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 유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표본을 구축해 대표성을 보완해왔으나, 이로 인해 표본 설계와 가중치 체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2년에 추가패널을 구축한 통합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검토하고, 유사 패널과의 비교를 통한 횡단적 대표성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대표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가 모집단의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패널 탈락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외부 집계 자료와 비교하여 횡단적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이 두 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로 관찰한 경제활동 상태 및 소득분배 추이를 비교한 결과, 2010년대 여성 고용률의 증가, 상용근로자 비율의 증가, 중위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감소 같은 사회적 변화의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차 초기 조사에 불안정성이 있고, 일부 영역에서 세부 시계열 패턴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표본 추가로 인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시계열 대표성이 완전

2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 방향 연구

하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현재의 종단가중치가 소득이나 재산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패널 탈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대표성과 횡단면 대표성의 검증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표본 설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표본 설계는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여 빈곤층, 공공부조 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소득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인과관계 분석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때 내생적 표본추출로 인한 추정량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 시간에 따른 소득의 확률적 변동으로 인해 패널 차수가 축적될수록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효과가 일정하게 희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유용성은 낮아질 수 있다.

조사 문항은 정책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다. 이는 패널에게 응답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패널 탈락 위험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의 문항은 확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응답의 정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응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온 측면이 있어서, 문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조사 문항의 적절성은 응답 부담과 연구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영역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소득보장 관련 조사 항목의 특징은 1) 소득 관련 항목의 수가 다른 조사에 비해 많고, 2) 특히 공적 이전 항목에 대한 항목의 수가 많으며, 3) 자영업 가구의 소득 조사 방식이 조사 항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응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조사 항목 중 관측 빈도가 낮고, 해당 항목의 상위 항목과의 관계에서 그 비중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안했다. 또 관측 빈도가 낮고, 복지패널 문항보다 행정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 문항의 적절성은 조사의 활용 가능성과 연구 수요 측면을 기준으로 조사 단위,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구분, 조사 내용, 인구학적 구분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첫째, 사회서비스 영역의 문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 단위를 개인 단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 개인 단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연구 수요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기능별 조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기능별 조사에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별 조사와 제공기관 단위의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조사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 사회서비스 항목, 사업별 조사, 제공기관 단위 조사에서 필요한 이용 경험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구학적 구분을 유지할 경우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 더해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인구집단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업별, 제공기관 단위의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구학적 구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의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다.

현재 개별 조사원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조사 운영 체계는 우수한 조사원의 확보와 교육을 통한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숙련된 조사원의 고령화, 신규 조사원 확보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널 사

4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 방향 연구

례를 검토하여 복지패널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패널조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용어: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 대표성, 조사 문항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단기 및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 표본의 대표성, 2) 조사 문항의 적절성, 3) 조사 운영의 효율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널조사는 매해(또는 일정 주기로) 동일한 가구(원)를 추적 조사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패널의 노화, 노령으로 인한 사망, 이사 등으로 인한 추적 불가 가구가 발생한다. 또 장기간 반복적인 조사 참여로 인한 응답 피로도 증가 등의 이유로 패널이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복지패널은 패널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널 유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때 추가표본을 구축하고 있다.

패널 유지율 하락으로 인한 반복적인 표본 추가는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를 복잡하게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여 빈곤층을 심층 분석하는 데 필요한 표본 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가표본 구축 시 소득을 파악한 후에 표본을 선정해야 하는 2단계 표본추출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신규 표본을 구축하기 위해 가구당 소득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표본들을 구축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의 7차 및 2022년의 17차 두 차례에 걸쳐 추가표본을 구축했다. 2006년 당시, 복지패널의 표본 설계는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1:1로 구축했고, 추가표본 구축 시 원표본 표본 설계를 동

일하게 유지했다. 추가표본의 구축 기준과 시기는 합의된 것은 없지만 대체로 표본 유지율이 75% 전후로 낮아질 때 구축되었다. 2011년도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약 75%로 하락했으며, 2012년도 7차 패널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과 일반 가구를 900가구씩 추가했다.

이후 2020년 15차 패널 구축 당시 원표본 가구와 추가표본 가구를 통합한 패널 유지율이 72.8%로 하락하여(정은희 외, 2022), 두 번째 추가표본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21년 당시 추가패널 구축을 위해 마련한 예산으로 저소득과 일반 가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차년도 추가표본 구축을 위한 7,000가구 규모의 표본틀을 구축하는 데 활용했다. 추가표본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1년에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2022년 17차 패널 구축 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각각 1,000가구씩 추가표본을 구축했다.

신규 표본이 추가되면, 추가된 패널을 통합한 가중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표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복지패널은 원표본 가중치 외에 1차 통합 패널 가중치, 2차 통합 패널 가중치 등 표본을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통합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어, 가중치 체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1차적 목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표본 대표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조사 문항의 분량과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분량의 적절성은 복지패널의 조사 문항이 과도하여 응답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과 관련이 있다(노대명, 2015; 이현주 외, 2017). 조사 문항이 길면 조사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응답자 입장에서는 응답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패널 이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패널 가구의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문항은 2012년 7차 때 대폭 수정된 바 있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조사 문항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노대명, 2015; 이현주 외, 2017). 조사 문항 분량이 과도하게 된 배경을 보면, 문항을 설계할 때 우리나라 일반 가구 및 빈곤층의 생활실태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길어진 점에 원인이 있지만, 사회정책과 관련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문항을 추가해 온 점 또한 원인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연구진과 원내 협의회는 제도 변화 및 문항의 유용성 등을 검토하여 해마다 문항을 일부 수정하지만, 해당 문항들의 유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 2024년도 현재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매뉴얼에 정리된 연도별 문항 삭제 및 추가 관련 변동사항을 보면, 다른 조사 문항 영역에 비해 기초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생활비 지출 등과 관련된 항목과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의 조사 문항의 변동이 가장 많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영역별로 살펴보면, 소득 영역, 생활비 등 응답자의 경제적 생활실태와 관련된 문항은 추가되는 경향이 현저한 반면,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은 제도가 지속적인 확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된 측면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영역의 학술연구 및 정책 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활용도, 응답 부담, 연구 수요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문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현재의 조사 운영 체계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사 운영 체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별 조사원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조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별 조사원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방식은 패널조사 경험이 있는 우수한 조사원 모집과 교육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첫째, 매해 우수한 조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신규 조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매해 50명에 가까운 조사원을 모집하여 계약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행정적 부담이 크다. 물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하는 여러 조사를 동일한 조사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의 규모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매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규모와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상승 등으로 인한 조사 난이도가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숙련된 전문 조사원 유지 및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최근의 조사 환경 변화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사 운영 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¹⁾ 첫째, 추가표본으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응답자의 부담 완화 및 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한 조사 문항의 개선 및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사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1)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와 관련하여 조사 문항 구성, 문항 구성 순서, 조사 단위, 표본 설계 등 조사의 설계에서 생산, 제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적지 않다.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의제는 위의 세 가지로 제한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표본의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위의 연구 목적을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내용 및 방법을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먼저, 두 차례의 표본 추가로 인한 표본 구성의 변화와 시계열 대표성 변화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표본 이탈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 왜곡을 완화하는 중단가중치 설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설계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설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3장과 제4장은 조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조사 문항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소득 영역, 생활비 등 가구의 경제적 생활실태와 관련된 문항은 추가되는 경향이 있어, 제3장에서는 소득보장 조사 내용에 대해 데이터 활용도와 의의를 검토하여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내용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소득보장 영역의 조사와 달리 사회서비스 영역은 관련 제도는 확대되어 왔으나 조사 문항은 축소되어 왔다. 이는 응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조사의 효율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주요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제5장에서는 개인정보 민감성 증가에 따른 조사 난이도 증가 및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위한 숙련된 패널 전문 조사원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내외 패널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 운영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

6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안정적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품질 개선을 위한 문헌 및 국내외 패널조사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 표본의 대표성 검토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중치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표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의 집계치와 비교했다. 조사 문항의 적절성 검토는 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매뉴얼 등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조사 운영 체계 현황은 해당 패널에 대한 보고서 및 사용자 매뉴얼 등 문헌 검토 외에도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을 활용했다. 전문가 자문은 최근에 해당 패널조사를 담당한 이력이 2년 이상 된 연구자 4인을 심층 인터뷰하여 해당 패널 운영 현황 및 조사 방식에 따른 쟁점을 정리했다. 포럼은 패널 연구와 관련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서베이 데이터와 행정데이터 연계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두 차례 진행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행정데이터를 연계하는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



제2장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 및 발전 방향

제1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

제2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쟁점 검토

제3절 소결



제 2 장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 및 발전 방향

제1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²⁾

1. 표본 설계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서,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태동했다. 조사는 이들의 규모와 상태의 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 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했다. 패널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이들의 다양한 복지실태와 욕구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표 2-1〉 한국복지패널조사 및 다른 조사들의 표본 개요

조사명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90%)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2006년 복지패널조사
조사구	23만여 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 수	1,400만여 가구	3만 가구	7,000가구
추출 방법	-	2단계 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2)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에 대한 내용은 1~19차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표본추출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 완료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추출 과정은 2중 추출(double sampling 또는 two-phase sampling)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모집단에 관한 보조 정보를 얻기 위해 24,700여 가구의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7,072가구를 추출하여, 2단계에 걸쳐 추출한 형태이다.

가. 표본추출(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 설계 당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자료는 조사구별 가구 수, 조사구 형태, 주택 형태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구당 평균 60가구인 약 30,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500개 조사구의 기초 자료를 집계하여 지역별(광역시 및 도 지역), 조사구 유형별(일반, 아파트), 읍면동별, 주택 형태별(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했다. 이후 읍면 지역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 17개 조사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총 517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하였다.

1) 1단계 표본추출

517개의 표본조사구에서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 기준 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 형태(2), 주택 유형(3) 등을 사

용하여 총 96개 층으로 나누어 각 층별로 확률비례 추출하였다. 이 중 수해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제주도를 포함하였다.

2) 2단계 표본추출

1단계 표본자료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패널 가구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3,500가구씩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공공부조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하였다.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 대해 지역별, 조사구별로 표본 가구를 확률비례 계통 추출에 의해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추출하였고, 패널 가구 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 가구와 동일한 수준인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나. 표본추출(2012년 1차 추가표본)

2011년 6차 조사 이후에 원표본 손실에 따른 표본 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소득층 가구 및 가구원의 분포가 어느 정도 치우침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역별 표본 규모는 잦은 이주와 탈락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12년 7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패널 규모를 유

지하고자 약 1,800가구를 추가하여 신규 패널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1차 조사 당시에 인구주택 총조사구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고,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으로부터 이중 추출 방식으로 추출했는데, 7,072가구를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신규 표본의 추가를 위한 표본추출 방법도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했다. 이때 활용 가능한 표본으로 2010년 차상위 실태조사(15,000가구)에서 소득 자료를 이용했는데, 이를 활용하면 저소득 및 일반 가구를 1단계 표본으로 파악하여 1차 조사와 동일한 속성의 패널 자료로 구축이 용이하며, 현재 패널 가구의 가중치 조정에 맞추어 조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지역별 표본 배분의 경우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10년 차상위 실태조사에서 일반과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지역별 가구 분포에 따라 1,800가구를 비례 배분하였다.

다. 표본추출(2022년 2차 추가표본)

한국복지패널 17차 조사에서 신규 패널 가구를 추가하였다. 추가표본은 1~16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마모된 패널 표본의 통계 분석 유의성을 확보하고, 복지패널로부터 산출되는 통계의 신뢰성 보장 및 복지정책 대상자의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패널 가구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일반 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를 파악

하기 위해 이중 추출 방법으로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조사가 필요했다. 즉 1단계에서는 2020년 통계청 조사구 리스트를 사용하여 2021년도에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가구로부터 소득을 파악했다. 2022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소득을 기반으로 패널 가구를 선정하여 최종 패널 가구를 구축하는 과정을 따랐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22년 신규 표본 추가를 위한 표본 규모 산정은 기본적으로 기존 패널의 특성별 응답률(또는 탈락률), 패널의 유지 기간 동안의 예상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표본 규모 산출 방법을 고려하였다. 2022년 신규 표본의 특성과 패널 유지율을 고려하여 1단계 7,000가구, 2단계 2,000가구의 표본 규모를 결정하였다. 2021년도 1단계에서는 시도별 동부, 읍면부로 층화한 후 제곱근 비례배분에 의한 700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2022년도 2단계에서는 17개 시도 및 동부와 읍면부별 표본 규모에 2,000가구를 먼저 소득 수준별(저소득/일반)로 배분하였고, 이후 지역별로 비례 배분하였고, 이 결과 2,011가구를 조사 완료하였다.

라. 1~19차 패널 유지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06년 원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패널 유지율을 파악하면 <표 2-2>와 같다. 19차 조사에서 1차 조사 표본인 원표본의 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48.60%, 가구원은 49.05%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조사 19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 외에 2012년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패널 1,800가구와 2022년 신규 표본 2,011가구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였는데,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표 2-2〉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2006)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조사(2007)	6,511	92.07	13,264	91.71
3차 조사(2008)	6,128	86.65	12,399	85.73
4차 조사(2009)	5,935	83.92	11,902	82.29
5차 조사(2010)	5,675	80.25	11,379	78.68
6차 조사(2011)	5,336	75.45	10,670	73.77
7차 조사(2012)	5,271	74.53	10,566	73.06
8차 조사(2013)	5,104	72.17	10,274	71.04
9차 조사(2014)	4,896	69.23	9,867	68.22
10차 조사(2015)	4,760	67.31	9,656	66.76
11차 조사(2016)	4,560	64.48	9,244	63.91
12차 조사(2017)	4,398	62.19	8,934	61.77
13차 조사(2018)	4,266	60.32	8,686	60.06
14차 조사(2019)	4,124	58.31	8,444	58.38
15차 조사(2020)	3,865	54.65	7,913	54.71
16차 조사(2021)	3,816	53.96	7,819	54.06
17차 조사(2022)	3,664	51.81	7,552	52.22
18차 조사(2023)	3,529	49.90	7,268	50.25
19차 조사(2024)	3,437	48.60	7,094	49.05

출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태진 외, 2024. p.38.

먼저, 2012년 추가패널의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3차 조사(2024)의 가구 유지율은 62.33%이고, 가구원 유지율은 58.0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2년 추가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유지율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2022년 추가패널의 3차 조사(2024년)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은 각 90.45%, 88.88%로 나타났다.

〈표 2-3〉 2012년 추가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2012)	1,800	100.00	3,375	100.00
2차 조사(2013)	1,690	93.89	3,146	93.21
3차 조사(2014)	1,594	88.56	2,932	86.87
4차 조사(2015)	1,534	85.22	2,791	82.70
5차 조사(2016)	1,478	82.11	2,681	79.44
6차 조사(2017)	1,426	79.22	2,566	76.03
7차 조사(2018)	1,392	77.33	2,482	73.54
8차 조사(2019)	1,343	74.61	2,390	70.81
9차 조사(2020)	1,281	71.17	2,265	67.11
10차 조사(2021)	1,239	68.83	2,162	64.06
11차 조사(2022)	1,188	66.00	2,080	61.63
12차 조사(2023)	1,159	64.39	2,027	60.06
13차 조사(2024)	1,122	62.33	1,959	58.04

출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태진 외, 2024. p.40.

〈표 2-4〉 2022년 추가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2022)	2,011	100.00	3,525	100.00
2차 조사(2023)	1,908	94.88	3,315	94.04
3차 조사(2024)	1,819	90.45	3,133	88.88

출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태진 외, 2024. p.41.

2. 가중치 체계 현황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개인 가중치와 가구 가중치로 구분된다. 가구 가중치는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해 가구의 개념

이 1차 조사의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2차 조사 이후의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중심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37. 재인용). 또한 가구는 개인과 달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면과 횡단면의 구분이 모호해져 이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구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가중치를 부여하며, 개인 가중치만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 1차 조사의 가구 및 개인 가중치

1차 조사의 가구 가중치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가중치인 W_{ij} 와 더불어, 7,000가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추출 확률과 조사 가구에 대한 응답 확률을 고려한 W_{ph} 를 사용하여, 조사구별 추출 확률의 역수인 조사구별 가중치 W_{ij}^* 를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 가구에 대한 소득층별 가중치 W_{st} 와 2006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이용한 사후층화 가중치 W_{pst} 를 사용하여 패널 가구의 최종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지역별, 조사구별 사후층화 과정으로부터 W_{pst} 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가중치 조정을 수행하였다.

$$W_H = W_{ij}^* \times W_{st} \times W_{pst}$$

이와 함께 복지패널의 가구원은 “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가구원 중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이들에게 1차 조사에서 부여된 가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가구 조사에서 응답한 가구의 15세 이상(학생 제외)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므로, 각 가구원의 응답 확률이 가구 응답 확률과 동일하게 되고, 따라서 가구 가중치를 해당 가구원에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W_{PW_k} 는 k 번째 조사 대상 가구의 응답 가구원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가구원 가중치에 대한 사후층화 가중치 조정은 이미 가구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원래의 패널 가구 가중치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다.

$$W_{PW_k} = W_H$$

나. 2차 조사 이후의 가구 및 개인 가중치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차 연도 이후 가중치 산정 절차는 우선 전 차수에 부여된 개인 가중치(종단면: 1차 연도는 종단면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사용)를 베이스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2차 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패널 가구의 가구원 변동사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변동 상황에 따라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후,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산정했고, 마지막으로 가구 가중치를 산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요약하자면 2차 연도 이후에는 $t-1$ 차 연도 종단면 개인 가중치를 베이스 가중치로 고려하여 t 차 연도 원표본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무응답 및 개인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t 차 연도 기본 가중치를 조정한 이후 사후조정 및 극단값 조정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했다.

1) 개인 종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먼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해, t 차 조사 종단면 응

답 여부 변수와 t-1차 조사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설명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2범주), 연령(5세 단위, 16범주), 지역(16범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교육 수준(5개 범주), 경제활동 상태(9개 범주) 변수를 사용하였고, 응답 여부 변수는 t차와 t-1차에 응답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더미화하여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t-1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베이스 가중치에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된 응답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t-1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베이스 가중치를 조정하며, t-1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베이스 가중치를 $w_{\text{베이스 } t-1\text{차}}$,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된 응답 확률을 $\hat{p}_{t\text{차}}$ 라고 하면 무응답 보정으로 얻어지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_{t\text{차}} = w_{\text{베이스 } t-1\text{차}} \times \hat{p}_{t\text{차}}^{-1}$$

그리고 개인별 변동사항에 따라 t차 종단면 개인 가중치를 조정한 뒤, 지역(17개 범주)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2개 범주, 연령별 5세 단위 17개 범주)에 따라 해당 차수 조사 기준 연도의 인구 추계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다.

한편 응답자 개인에 대해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게 되며, 복지패널의 개인별 변동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의 종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6차의 개인별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표본 가구원이 아닌 신규 가구원 진입 시 $w_{t\text{차}}$ 에 0을 부여(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 가구원 진입)
2. 원표본 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다가 t차에 복귀하면 $w_{t\text{차}}$ 에 해당 가구의 평균값(분모에 1을 더한)을 부여(군 입대, 장기 여행 등)

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가 t차에 복귀)

또한, 7차~19차 개인별 변동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가구원(t차)인데 원가구에 속하지 않으면 $w_{t차}$ 에 0을 부여(분가한 가구에서 출생,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 가구원 진입)
2. 원가구에 원가구원이 복귀하면 $w_{t차}$ 에 해당 가구의 평균값을 부여(군 입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t-1차에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이 t차에 원가구에 복귀)
3. 원가구에서 출생(입양)하여 신규 가구원 진입 시에는 $w_{t차}$ 에 해당 가구의 평균값(분모에 1을 더한)을 부여(원가구에서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4. 원가구에 출생을 제외한 신규 가구원 진입시에는 $w_{t차}$ 에 해당 가구의 평균값을 부여(결혼 등의 사유로 원가구에 진입한 신규 가구원)
5. 1~4번을 제외한 다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w_{t차}$ 에 지역별 평균값을 부여(기존에 탈락되었다가 재시도를 통하여 가구가 재진입(복원), 분가 가구에 원가구원이 복귀 등)

t-1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존재하는 가구원은 베이스 가중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변동사항에는 포함(원가구에서 분가, 합가 등)되지 않았고, t-1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0인 가구원은 그대로 0으로 부여하였다. 레이킹 비 조정을 통한 사후 조정(성별, 연령, 지역) 후 극단 가중치(상위 5%)를 절단하고, 이를 가중치 층별 평균으로 대체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2) 개인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t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

되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 후 해당 차수 조사 기준 연도의 인구 추계값(성별 2개 범주, 연령별 5세 단위 17개 범주, 지역별 17개 범주)을 이용한 레이킹 비 조정 방법으로 사후 조정 후에 극단 가중치(상위 5%)를 절단하고, 이를 가중치 층별 평균으로 대체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3) 가구 가중치 산출 과정

t차 조사의 가구 가중치는 t차 조사 개인 횡단면 가중치의 해당 가구 내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t차 조사에서 새롭게 생성된 신규 가구는 신규 가구 내에 원표본 가구원들의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원표본 가구원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이들의 평균으로 가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계산된 가구 가중치를 해당 차수 조사 기준 연도의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17개 범주)과 가구원 수(5개 범주)를 적용하여 사후 조정하고, 극단값을 조정된 뒤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극단값 조정은 레이킹 비 조정을 통한 사후 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상위 5%)을 층별 중앙값으로 대체한 후 재조정하였다.

다. 패널 추가(7차: 2012년, 17차: 2022년)로 인한 통합가중치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12년 신규 패널, 2022년 신규 패널은 기존 2006년 조사에서 구축된 패널 표본과 2012년, 2022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규 표본 패널을 병합하여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

2006년의 기존 패널 표본은 t차 조사의 응답률을 로지스틱 회귀 모형으로 응답 확률을 추정하고, t-1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에 기초하

여 t차 조사에서 조사된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2012년 7차 조사에서 추가된 신규 패널은 2011년 복지 욕구 실태조사의 최종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였으며, 1,800가구에 대한 추출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설계 가중치를 조정하였으며, 이후 t차 조사까지 응답한 개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 및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이용하여 종단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신규로 구축한 패널은 한국복지패널 추가표본추출을 위한 2021년 시범 조사의 최종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였으며, 2,011가구에 대한 추출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설계 가중치를 조정하였으며, 이후 t차 조사까지 응답한 개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 및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이용하여 종단가중치를 조정하였다(t-1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아서 개인 횡단면 가중치 이용).

1) 가구 통합 가중치 산출 과정

t차 조사의 가구 통합 가중치는 2006년, 2012년 추가패널, 2022년 추가패널의 가구 가중치를 결합한 새로운 통합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중치 계산식으로 구한다.

$$w_{hik}^{CBH} = \begin{cases} \lambda_{1h} w_{ahik}, & hik \in s_a \\ \lambda_{2h} w_{bhik}, & hik \in s_b \\ (1 - \lambda_{1h} - \lambda_{2h})w_{chik}, & hik \in s_c \end{cases}$$

여기서 w_{ahik} 는 2006년 패널의 가구 가중치를, w_{bhik} 는 2012년 추가패널의 가구 가중치, w_{chik} 는 2022년 추가패널의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λ_{jh} ($0 < \lambda_{jh} < 1$)는 가구 통합 가중치를 정의하게 되며, 이는 기존 패널

과 2012년 및 2022년 추가표본의 추정량을 선형 형태로 결합하게 된다.

최적의 혼합계수 λ_{jh} 는 혼합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비율 추정을 기준으로 σ_{ah}^2 와 σ_{bh}^2 , σ_{ch}^2 이 각각 2006년, 2012년, 2022년 표본에서의 비율 추정량의 분산이라면, 혼합계수 λ_h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ambda_{1h} = \frac{\sigma_{ah}^2}{\sigma_{ah}^2 + \sigma_{bh}^2 + \sigma_{ch}^2} \approx \frac{n_{ah}}{n_{ah} + n_{bh} + n_{ch}}$$

최종적으로 가구 통합 가중치는 3종의 가중치를 선형 결합한 형태의 가중치 w_{hik}^{CBH} 에 대해 해당 차수 조사 기준 연도의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 가구원 수별 레이킹 비 조정을 통해 구한다.

2) 개인 통합 가중치 산출 과정

t차 조사의 개인 통합 가중치는 2006년 패널의 개인 가중치, 2012년 추가패널의 개인 가중치, 2022년 추가패널의 개인 가중치를 통합한 개인 가중치인데, 이 통합 개인 가중치의 산출 과정은 가구 통합 가중치 산출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된다.

$$w_{hik}^{CBPL} = \begin{cases} \lambda_{1h} w_{ahik}, & hik \in s_a \\ \lambda_{2h} w_{bhik}, & hik \in s_b \\ (1 - \lambda_{1h} - \lambda_{2h})w_{chik}, & hik \in s_c \end{cases}$$

최종 개인 통합 가중치는 w_{hik}^{CBPL} 의 값을 해당 차수 조사 기준 연도의 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레이킹 비 조정

을 통해 구한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추가패널이 들어오는 시기와 다음 차수까지만 이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2차 조사 이후의 가구 및 개인 가중치 산출 과정을 따르고 있다.

제2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쟁점 검토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체 가구 및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출생 및 사망, 분가 및 합가를 고려하여 가구를 추적하는 가구패널조사이다. 둘째, 저소득층 및 공공부조 수급자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다. 셋째, 시간에 따른 표본 손실에 대응하여 2012년과 2022년에 표본을 추가하였고, 이때 원표본과 동일하게 추가표본에서도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다. 넷째, 가중치 세트는 가구 가중치, 개인 종단가중치, 개인 횡단가중치로 구성되고, 원표본에 대해 원표본 가중치를, 추가표본을 포함한 전체 표본에 대해 통합표본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중치는 표본추출 확률, 저소득층 과대표집, 사후층화를 반영하여 작성되고, 추가적으로 패널 탈락, 가구원 변동, 모집단의 인구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에 따라 수정된다.

궁극적으로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는 시간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첫째, 전체 가구 및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설계하였고, 둘째, 출생 및 사망, 분가 및 합가를 고려하여 가구를 추적하므로 표본 내에서 모집단 대표성이 유지되는 형태로 표본의 탈락과 진입이 이루어지며, 셋째, 시간에 따른 체계적인 패널 탈락을 반영하여 종단가중치와 횡단가중치를 작성하므로 가중치를 적

용한 분석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본이 설계되고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차수가 축적되고 표본 추가가 반복되면서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고,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1. 표본 구성의 변화 분석

가중치 체계가 저소득층 과대표집, 시간에 따른 체계적인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편의를 일정하게 교정하지만,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의 구성이 모집단과 지나치게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아동 같은 특정 인구집단의 패널 탈락 확률이 유독 높아서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무응답과 사후층화를 반영한 가중치 조정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 인구집단의 표본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지면 해당 하위집단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지고, 가중치의 분산이 증가하여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의 안정성이 감소하게 된다.

시간에 따라 표본의 구성이 적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출생 및 사망, 분가 및 합가를 반영하여 모집단에서 관찰되는 인구 및 가구 변동이 표본 내에서도 충분히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특정 집단의 패널 탈락 가능성이 크거나 작은 체계적인 패널 탈락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패널 차수가 축적되면서 표본과 모집단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5)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전체 표본

(단위: %, 비율, 명)

구분	인구총조사 (A)		한국복지패널조사 (B)		(B ÷ A)		
	2005	2022	2005	2022	2005	2022	
남성	15세 미만	10.3	6.0	9.7	4.9	0.94	0.81
	15~19세	3.2	2.1	2.9	1.9	0.89	0.89
	20~24세	2.9	2.4	1.8	1.9	0.62	0.79
	25~29세	3.8	3.6	2.7	2.0	0.71	0.56
	30~34세	4.4	3.4	3.9	2.1	0.88	0.63
	35~39세	4.5	3.4	4.0	2.0	0.89	0.60
	40~44세	4.5	4.0	3.7	2.8	0.83	0.68
	45~49세	4.2	4.0	3.1	3.1	0.73	0.78
	50~54세	3.1	4.5	2.5	3.3	0.82	0.73
	55~59세	2.4	4.0	2.4	2.8	0.97	0.70
	60~64세	2.0	4.1	2.7	3.4	1.37	0.84
	65~69세	1.6	3.0	3.2	3.4	1.93	1.12
	70~74세	1.1	2.1	2.3	3.0	2.03	1.44
	75~79세	0.6	1.4	1.2	3.4	2.03	2.45
	80~84세	0.3	1.0	0.7	3.0	2.36	3.10
85세 이상	0.1	0.5	0.3	1.9	2.16	3.88	
여성	15세 미만	9.3	5.7	9.2	4.6	0.98	0.80
	15~19세	3.0	2.1	2.7	2.0	0.88	0.98
	20~24세	3.6	2.6	2.7	2.1	0.74	0.81
	25~29세	3.9	3.3	3.0	2.2	0.77	0.67
	30~34세	4.4	3.1	4.2	2.0	0.95	0.63
	35~39세	4.5	3.2	3.8	2.1	0.85	0.64
	40~44세	4.4	3.9	3.5	2.8	0.78	0.72
	45~49세	4.2	4.0	3.4	2.9	0.80	0.73
	50~54세	3.1	4.5	2.7	3.1	0.87	0.68
	55~59세	2.5	4.0	3.2	3.3	1.27	0.81
	60~64세	2.2	4.2	3.7	4.2	1.70	1.00
	65~69세	2.0	3.2	4.2	4.6	2.08	1.42
	70~74세	1.6	2.3	3.2	4.8	1.99	2.07
	75~79세	1.1	1.8	2.0	5.2	1.83	2.94
	80~84세	0.6	1.5	1.1	5.5	1.78	3.67
85세 이상	0.4	1.1	0.7	3.8	1.80	3.50	
계	100.0	100.0	100.0	100.0	-	-	
사례 수	-	-	18,856	15,931	-	-	

주: 전체 인구에서 성·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구총조사는 일반 가구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전체 표본을 집계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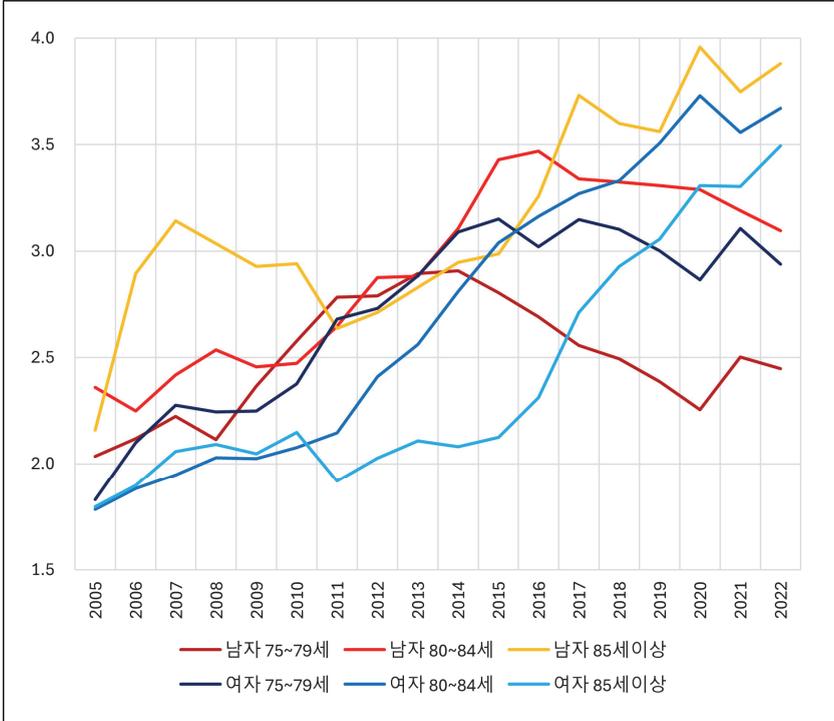
2)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집계자료," 통계청, 2025a,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구성이 시간에 따라 모집단과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2-5>에는 인구총조사와 비교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 전체 표본의 성·연령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수치는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을 모두 포함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한국복지패널조사 15세 미만 남성 비율은 2005년 1차 조사의 9.7%에서 2022년 18차 조사 때는 4.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모집단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아동 비율 감소를 모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총조사 일반 가구원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남성 비율이 2005년 10.3%에서 2022년에 6.0%로 감소하였다. 2005년 15세 미만 남성 비율이 인구총조사에서 10.3%,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9.7%였으므로, 2005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5세 미만 남성 비율이 모집단의 94%(9.7%÷10.3%)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15세 미만 남성 비율은 2005년에 모집단의 94%였으나, 2022년에 모집단의 81%로 감소하였다. 즉,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15세 미만 남성 비율이 모집단보다 빠르게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5년의 연령집단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인구총조사에 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에서 50대 이하 집단이 과소하였고, 60대 이상 집단이 과대표하였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저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과대표집에 따라 고령자 역시 과대표집된 것이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총조사 집단 비율 대비 한국복지패널조사 집단 비율이 75세 이상 남성과 70세 이상 여성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에서 고령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집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1] 성·연령 집단별 비율, 인구총조사 대비 한국복지패널조사 전체 표본

(단위: 비율)



주: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집단 비율을 인구총조사의 집단 비율로 나눈 값이다. 인구총조사는 일반 가구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전체 표본을 집계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인구총조사는 2005년, 2010년, 2015~2023년 집계치가 존재하는데, 집계치가 부재한 2006~2009년, 2011~2014년은 2005년, 2010년, 2015년 집계치를 활용하여 선형보간법으로 추정하였다.

-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2)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집계자료,” 통계청, 2025a,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그림 2-1]에는 <표 2-5>의 인구총조사 집단 비율 대비 한국복지패널조사 집단 비율($B \div A$)을 75세 이상 집단에 대해 연도별로 보고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85세 이상 비율은 대체로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고, 75~84세 비율은 대체로 201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복지패널 조사 표본의 고령화 현상이 고령 노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5〉에서는 1차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추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 2-6〉, 〈표 2-7〉, 〈표 2-8〉에는 각각 1차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표 2-6〉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1차 원표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표본에서 고령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이와 같은 표본 고령화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체 표본의 경우 2022년 85세 이상 남성 비율이 인구총조사의 388%로 증가하였지만, 1차 원표본의 경우 2022년 85세 이상 남성 비율이 인구총조사의 356%로 증가한 데 그쳤다. 이는 7차와 17차의 표본 추가가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고령화를 그다지 완화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7차와 17차의 추가표본을 추출할 때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추가표본에서도 저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가 과대표집되었다.

또한, 〈표 2-7〉과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차와 17차 추가표본 역시 시간에 따라 표본에서 고령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집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7차 추가표본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율이 2011~2022년에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 추가표본의 85세 이상 남성의 비율은 2022년 2.7%로 인구총조사의 541%였고, 85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2022년 5.5%로 인구총조사의 499%였다.

(표 2-6)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원표본

(단위: %, 비율, 명)

구분	인구총조사 (A)		한국복지패널조사 (B)		(B ÷ A)		
	2005	2022	2005	2022	2005	2022	
남성	15세 미만	10.3	6.0	9.7	5.3	0.94	0.87
	15~19세	3.2	2.1	2.9	2.3	0.89	1.08
	20~24세	2.9	2.4	1.8	2.2	0.62	0.93
	25~29세	3.8	3.6	2.7	2.3	0.71	0.66
	30~34세	4.4	3.4	3.9	2.6	0.88	0.77
	35~39세	4.5	3.4	4.0	2.0	0.89	0.59
	40~44세	4.5	4.0	3.7	3.0	0.83	0.75
	45~49세	4.2	4.0	3.1	3.3	0.73	0.82
	50~54세	3.1	4.5	2.5	3.6	0.82	0.80
	55~59세	2.4	4.0	2.4	3.0	0.97	0.75
	60~64세	2.0	4.1	2.7	3.4	1.37	0.82
	65~69세	1.6	3.0	3.2	2.9	1.93	0.94
	70~74세	1.1	2.1	2.3	2.4	2.03	1.15
	75~79세	0.6	1.4	1.2	2.7	2.03	1.94
	80~84세	0.3	1.0	0.7	2.7	2.36	2.75
85세 이상	0.1	0.5	0.3	1.8	2.16	3.56	
여성	15세 미만	9.3	5.7	9.2	4.9	0.98	0.85
	15~19세	3.0	2.1	2.7	2.3	0.88	1.13
	20~24세	3.6	2.6	2.7	2.8	0.74	1.06
	25~29세	3.9	3.3	3.0	2.7	0.77	0.82
	30~34세	4.4	3.1	4.2	2.4	0.95	0.76
	35~39세	4.5	3.2	3.8	2.3	0.85	0.71
	40~44세	4.4	3.9	3.5	3.1	0.78	0.79
	45~49세	4.2	4.0	3.4	3.2	0.80	0.80
	50~54세	3.1	4.5	2.7	3.4	0.87	0.77
	55~59세	2.5	4.0	3.2	3.4	1.27	0.84
	60~64세	2.2	4.2	3.7	4.0	1.70	0.94
	65~69세	2.0	3.2	4.2	3.8	2.08	1.17
	70~74세	1.6	2.3	3.2	4.0	1.99	1.71
	75~79세	1.1	1.8	2.0	4.1	1.83	2.33
	80~84세	0.6	1.5	1.1	4.7	1.78	3.18
85세 이상	0.4	1.1	0.7	3.7	1.80	3.37	
계	100.0	100.0	100.0	100.0	-	-	
사례 수	-	-	18,856	9,775	-	-	

주: 전체 인구에서 성·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구총조사는 일반 가구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1차 원표본을 집계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2)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집계자료," 통계청, 2025a,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36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표 2-7〉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 추가표본

(단위: %, 비율, 명)

구분	인구총조사 (A)		한국복지패널조사 (B)		(B ÷ A)		
	2011	2022	2011	2022	2011	2022	
남성	15세 미만	8.4	6.0	6.5	4.6	0.78	0.75
	15~19세	3.3	2.1	2.2	1.6	0.66	0.75
	20~24세	2.4	2.4	1.6	1.5	0.66	0.64
	25~29세	3.5	3.6	1.8	1.5	0.50	0.42
	30~34세	3.9	3.4	2.0	1.3	0.52	0.38
	35~39세	4.3	3.4	3.6	1.8	0.83	0.53
	40~44세	4.4	4.0	2.9	2.2	0.66	0.56
	45~49세	4.4	4.0	2.8	3.7	0.65	0.93
	50~54세	4.1	4.5	2.7	3.0	0.66	0.66
	55~59세	3.1	4.0	2.5	2.4	0.81	0.60
	60~64세	2.4	4.1	3.1	2.6	1.30	0.64
	65~69세	1.8	3.0	4.2	3.0	2.28	0.98
	70~74세	1.5	2.1	4.6	2.9	3.11	1.43
	75~79세	0.9	1.4	3.2	4.1	3.50	2.91
80~84세	0.4	1.0	1.2	4.0	2.90	4.12	
85세 이상	0.2	0.5	0.4	2.7	1.83	5.41	
여성	15세 미만	7.8	5.7	5.8	4.2	0.75	0.72
	15~19세	3.1	2.1	2.1	2.0	0.67	0.95
	20~24세	2.9	2.6	1.5	1.4	0.50	0.53
	25~29세	3.6	3.3	1.8	2.0	0.50	0.61
	30~34세	3.9	3.1	2.9	1.3	0.75	0.42
	35~39세	4.3	3.2	2.5	1.7	0.59	0.52
	40~44세	4.4	3.9	3.0	2.8	0.69	0.72
	45~49세	4.4	4.0	3.0	2.9	0.69	0.73
	50~54세	4.1	4.5	3.4	2.4	0.82	0.55
	55~59세	3.2	4.0	3.6	2.6	1.13	0.65
	60~64세	2.5	4.2	4.8	3.6	1.92	0.85
	65~69세	2.1	3.2	6.6	4.5	3.11	1.39
	70~74세	1.9	2.3	6.7	5.7	3.51	2.44
	75~79세	1.4	1.8	4.9	7.1	3.36	4.01
80~84세	0.9	1.5	1.6	7.5	1.87	5.06	
85세 이상	0.5	1.1	0.6	5.5	1.05	4.99	
계	100.0	100.0	100.0	100.0	-	-	
사례 수	-	-	4,018	2,456	-	-	

주: 전체 인구에서 성·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구총조사는 일반 가구원을, 한국복지패널조사는 7차 추가표본을 집계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인구총조사 2011년 집계치는 2010년, 2015년 집계치를 활용하여 선형보간법으로 추정하였다.

-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2)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집계자료,” 통계청, 2025a,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표 2-8)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17차 추가표본

(단위: %, 비율, 명)

구분	인구총조사 (A)		한국복지패널조사 (B)		(B ÷ A)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남성	15세 미만	6.3	6.0	4.4	4.1	0.70	0.68
	15~19세	2.2	2.1	1.3	1.0	0.62	0.49
	20~24세	2.6	2.4	1.4	1.2	0.54	0.51
	25~29세	3.6	3.6	1.2	1.4	0.33	0.39
	30~34세	3.3	3.4	1.6	1.4	0.49	0.42
	35~39세	3.6	3.4	2.3	2.2	0.64	0.65
	40~44세	4.0	4.0	2.3	2.4	0.59	0.60
	45~49세	4.1	4.0	2.4	2.2	0.57	0.55
	50~54세	4.4	4.5	2.8	2.7	0.64	0.60
	55~59세	4.0	4.0	2.8	2.5	0.70	0.62
	60~64세	4.0	4.1	4.4	4.2	1.11	1.03
	65~69세	2.8	3.0	5.3	5.1	1.88	1.67
	70~74세	1.9	2.1	4.5	4.6	2.32	2.24
	75~79세	1.4	1.4	4.5	4.9	3.33	3.48
	80~84세	0.9	1.0	2.7	3.2	3.16	3.35
85세 이상	0.5	0.5	1.3	1.8	2.93	3.70	
여성	15세 미만	5.9	5.7	4.1	4.0	0.70	0.70
	15~19세	2.1	2.1	1.1	1.2	0.54	0.58
	20~24세	2.8	2.6	1.1	0.9	0.40	0.34
	25~29세	3.3	3.3	1.2	1.0	0.36	0.31
	30~34세	3.0	3.1	1.4	1.4	0.47	0.44
	35~39세	3.4	3.2	1.9	1.8	0.54	0.54
	40~44세	3.9	3.9	2.1	2.1	0.54	0.52
	45~49세	4.0	4.0	2.0	2.0	0.50	0.51
	50~54세	4.4	4.5	2.8	2.4	0.64	0.54
	55~59세	4.0	4.0	3.9	3.5	0.97	0.87
	60~64세	4.1	4.2	5.9	5.4	1.42	1.28
	65~69세	3.1	3.2	6.5	6.8	2.10	2.10
	70~74세	2.2	2.3	6.4	6.5	2.88	2.79
	75~79세	1.8	1.8	6.8	6.8	3.84	3.83
	80~84세	1.4	1.5	4.9	6.0	3.57	4.05
85세 이상	1.0	1.1	2.6	3.1	2.57	2.84	
계	100.0	100.0	100.0	100.0	-	-	
사례 수	-	-	3,938	3,700	-	-	

주: 전체 인구에서 성·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구총조사는 일반 가구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17차 추가표본을 집계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eps.re.kr>

2)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집계자료," 통계청, 2025a,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38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표 2-9〉 성·연령 집단별 18차 조사 패널 생존 확률

(단위: %, 명)

구분	1차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		
	생존 확률	사례 수	생존 확률	사례 수	생존 확률	사례 수	
남성	15세 미만	31.5	1,823	47.9	261	90.1	172
	15~19세	31.9	539	33.7	89	73.6	53
	20~24세	30.5	338	35.9	64	87.5	56
	25~29세	37.4	516	48.6	72	85.1	47
	30~34세	40.2	734	58.0	81	96.8	63
	35~39세	36.2	751	60.8	143	91.1	90
	40~44세	39.5	702	53.0	117	97.8	92
	45~49세	44.5	587	42.1	114	91.4	93
	50~54세	53.1	480	62.0	108	91.0	111
	55~59세	52.1	449	64.4	101	85.6	111
	60~64세	48.3	505	63.4	123	94.9	175
	65~69세	35.9	599	59.5	168	93.8	210
	70~74세	19.4	427	48.6	183	97.7	177
	75~79세	8.9	225	29.5	129	96.6	178
	80~84세	1.5	131	24.5	49	94.4	108
85세 이상	0.0	51	0.0	15	90.4	52	
여성	15세 미만	37.7	1,727	56.2	235	95.1	163
	15~19세	29.8	504	45.2	84	93.2	44
	20~24세	30.6	510	30.5	59	73.3	45
	25~29세	35.7	568	49.3	71	85.1	47
	30~34세	38.1	791	59.8	117	98.2	56
	35~39세	40.4	712	60.4	101	90.4	73
	40~44세	47.9	657	47.1	121	92.7	82
	45~49세	55.2	636	54.2	120	84.8	79
	50~54세	63.1	512	66.9	136	91.9	111
	55~59세	68.6	599	79.5	146	94.2	154
	60~64세	62.1	691	74.7	194	94.0	232
	65~69세	49.9	790	70.2	265	95.3	254
	70~74세	25.8	600	58.0	269	97.2	252
	75~79세	9.2	368	46.2	195	97.4	266
	80~84세	1.9	211	23.1	65	97.4	191
85세 이상	0.8	123	4.3	23	92.1	101	
계	39.1	18,856	54.3	4,018	93.4	3,938	

주: 1차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 중에서 18차에 조사된 표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고령자 표본의 조사 거부로 인한 패널 탈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2-9>에는 1차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의 18차 조사 패널 생존 확률을 보고하였다. 표의 수치는 1차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 중에서 18차에 조사된 표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차 원표본 18,856명 중에서 18차에 조사된 비율은 39.1%였고, 7차 추가표본 4,018명 중에서 18차에 조사된 비율은 54.3%였으며, 17차 추가표본 3,938명 중에서 18차에 조사된 비율은 93.4%였다. 1차 원표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패널 생존 확률은 50대까지 점증하였고 60대 이후 급감하였다. 6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패널 생존 확률이 감소하는 패턴은 주로 고령자의 사망으로 인한 패널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에서 사망으로 인한 패널 탈락과 조사 거부로 인한 패널 탈락을 구분할 수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모집단보다 빠르게 표본의 고령 노인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앞선 분석 결과는 고령자의 패널 탈락이 주로 사망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50대 이하에서 대체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패널 생존 확률이 낮아지는 패턴은 청년의 패널 탈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차 추가표본에서도 대체로 50대에 비해 20~40대의 패널 생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청년에 비해 패널조사가 용이한 중고령자의 패널 탈락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표본의 고령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시계열 대표성 변화 분석

앞의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고령화가 모집단의 변화보

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표본의 구성이 모집단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더라도, 가중치를 조정하므로 시간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체계적인 패널 탈락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모집단의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후층화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결과로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단가중치 설계가 패널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잠재적인 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널 차수가 축적되면서 시간에 따라 가중치 체계의 불완전성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성, 연령,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패널 탈락 확률을 반영하여 중단가중치를 부여하지만, 성, 연령,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패널 탈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간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단가중치를 부여할 때 사망 등으로 모집단에서 이탈하는 패널 탈락과 모집단에 잔존하지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패널 탈락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사후층화로 기본적인 모집단의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한 패널 탈락과 조사 거부로 인한 패널 탈락을 구분하지 않는 중단가중치 부여 방식이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 차수가 축적될수록, 표본 손실 규모가 증가할수록, 가중치의 분산이 증가할수록, 이와 같은 가중치 체계의 잠재적인 한계가 누적될 것이다. 그런데 일정 시점 이후 표본이 추가되면, 표본 추가 시점의 모집단 특성을 잘 반영하는 추가표본이 투입되어 표본의 구성이 희석되므로, 표본 추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일정하게 회복하면서 가중치 체계의 잠재적인 한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10〉 성·연령 집단별 비율, 한국복지패널조사 전체 표본, 가중치 적용

(단위: %, 비율, 명)

구분	인구총조사 (A)		한국복지패널조사 (B)		(B ÷ A)		
	2005	2022	2005	2022	2005	2022	
남성	15세 미만	10.3	6.0	11.3	6.0	1.11	0.99
	15~19세	3.2	2.1	2.8	2.2	0.88	1.06
	20~24세	2.9	2.4	1.9	3.0	0.66	1.26
	25~29세	3.8	3.6	3.1	3.4	0.79	0.96
	30~34세	4.4	3.4	4.7	3.5	1.06	1.04
	35~39세	4.5	3.4	4.8	3.7	1.08	1.10
	40~44세	4.5	4.0	4.3	4.0	0.95	1.00
	45~49세	4.2	4.0	3.4	4.2	0.81	1.05
	50~54세	3.1	4.5	2.6	5.1	0.83	1.15
	55~59세	2.4	4.0	2.3	3.6	0.93	0.89
	60~64세	2.0	4.1	2.2	3.0	1.12	0.73
	65~69세	1.6	3.0	2.2	3.4	1.36	1.13
	70~74세	1.1	2.1	1.4	1.6	1.25	0.80
	75~79세	0.6	1.4	0.7	1.4	1.20	1.02
	80~84세	0.3	1.0	0.4	1.1	1.42	1.10
85세 이상	0.1	0.5	0.1	0.6	1.19	1.21	
여성	15세 미만	9.3	5.7	10.3	5.2	1.11	0.90
	15~19세	3.0	2.1	2.9	2.5	0.96	1.21
	20~24세	3.6	2.6	2.9	2.9	0.81	1.12
	25~29세	3.9	3.3	3.6	3.7	0.93	1.14
	30~34세	4.4	3.1	5.3	2.8	1.18	0.91
	35~39세	4.5	3.2	4.4	3.2	0.99	0.99
	40~44세	4.4	3.9	4.0	3.7	0.89	0.94
	45~49세	4.2	4.0	3.5	3.7	0.83	0.95
	50~54세	3.1	4.5	2.5	4.3	0.80	0.96
	55~59세	2.5	4.0	2.7	3.6	1.08	0.90
	60~64세	2.2	4.2	2.7	3.5	1.23	0.82
	65~69세	2.0	3.2	2.7	4.1	1.35	1.27
	70~74세	1.6	2.3	1.9	2.1	1.20	0.91
	75~79세	1.1	1.8	1.1	1.8	1.06	0.99
	80~84세	0.6	1.5	0.7	1.8	1.04	1.20
85세 이상	0.4	1.1	0.5	1.1	1.38	1.02	
계	100.0	100.0	100.0	100.0	-	-	
사례 수	-	-	18,856	15,931	-	-	

주: 전체 인구에서 성·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구총조사는 일반 가구원을,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전체 표본을 집계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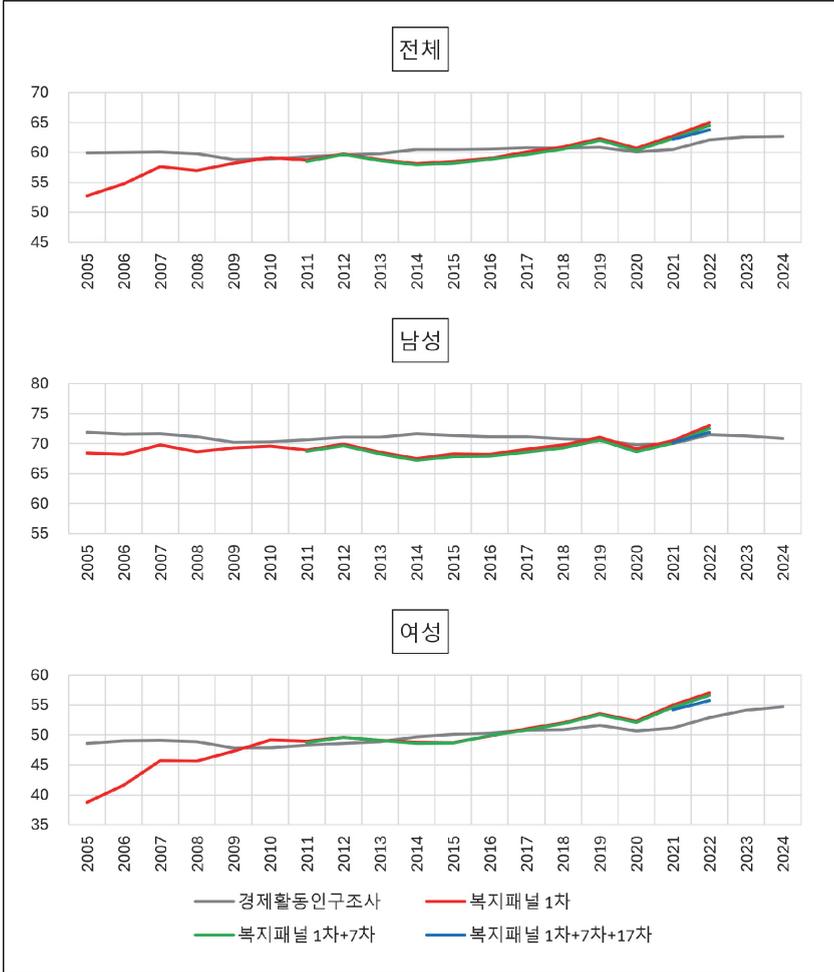
2)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집계자료," 통계청, 2025a,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이하에서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주요 서베이 데이터의 집계치와 비교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시계열 대표성을 간단하게 진단한다. 원칙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에서 표본의 주요 시계열 특성이 신뢰할 만한 외부 집계치의 추이와 대체로 일치해야 한다. 우선 <표 2-10>에는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을 모두 포함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성·연령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2-10>은 <표 2-5>의 분석에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 2-5>의 분석에서는 저소득층 과대표집에 따른 60대 이상 고령자의 과대표집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지만, 가중치를 적용한 <표 2-10>의 분석에서는 고령자의 과대표집 패턴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인구총조사와의 차이가 일정하게 관찰되었지만, 대체로 인구총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성·연령 분포에 체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그 차이가 시간에 따라 강화되지도 않았다. 전반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면 시간에 따라 모집단보다 표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패턴이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모집단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사후층화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림 2-2]에는 15세 이상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치와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2005~2007년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한국복지패널조사 여성 표본의 고용률이 낮았고 급격하게 증가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이와 같은 패턴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2005~2007년 고용률 증가량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1~2차 조사가 안정화되지 않아 초기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시계열 안정성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2-2] 15세 이상 고용률

(단위: %)



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복지패널 1차: 1차 원표본
- 복지패널 1차+7차: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
- 복지패널 1차+7차+17차: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17차 추가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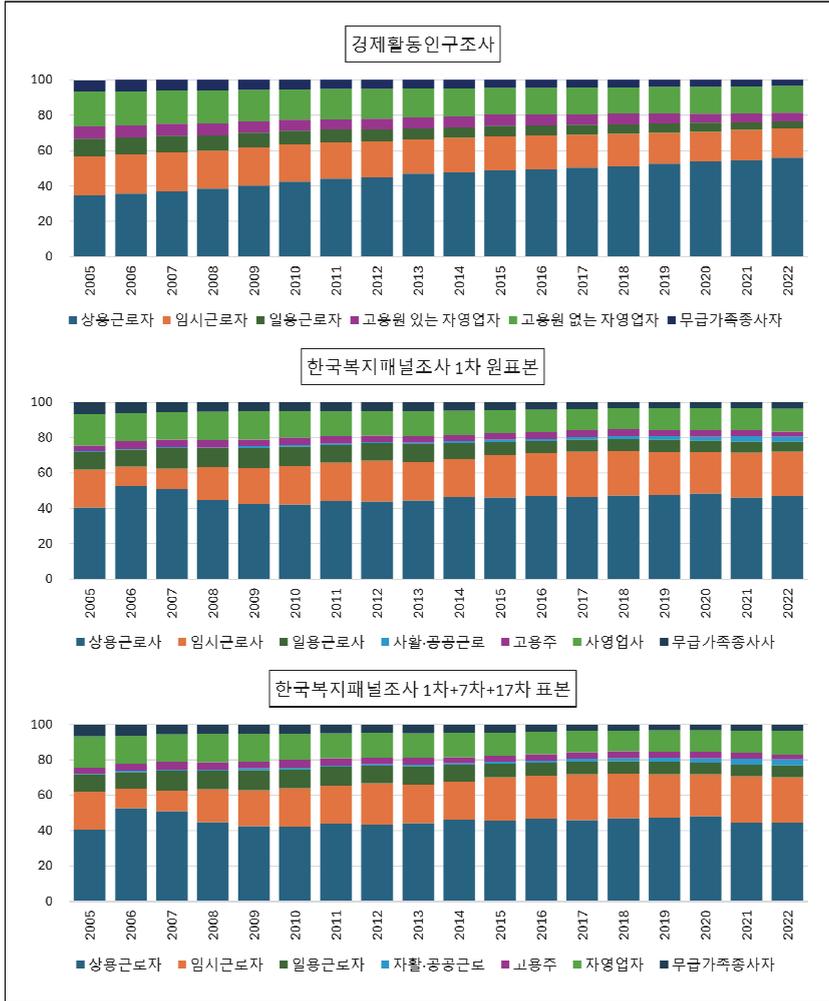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2)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통계청, 2025b,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44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그림 2-3] 1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단위: %)



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복지패널 1차 원표본: 1차 원표본

· 복지패널 1차+7차+17차 표본: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17차 추가표본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2)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통계청, 2025b,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2008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관찰되었다. 첫째, 20014~2015년 이후 고용률 증가 속도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났다. 둘째, 7차 표본 추가에 따른 고용률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17차 표본 추가에 따른 고용률 변화가 일정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17차 표본 추가로 인해 고용률 시계열에 작은 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초기의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고용률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추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에서는 1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2006년에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급감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이는 초기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불안정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2008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2020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하게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2021년 이후의 패턴은 7차 및 17차 표본을 추가한 결과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림 2-2]와 [그림 2-3]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2021년 이후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는 차이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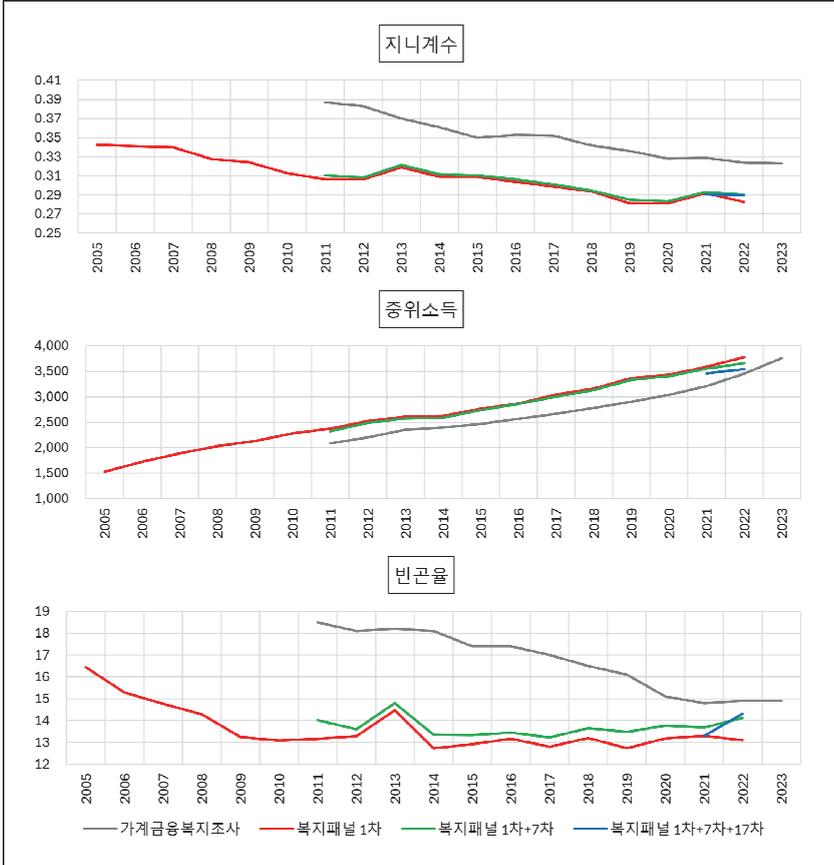
[그림 2-4]에는 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체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표 분석 방법을 준용하였으나, 극단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분석에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5억 원/년에서 탑코딩하였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은 사적 이전지출을 제외한다는 점,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은 현물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다는 점 등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 개념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집계치와 비교할 때, 대체로 2010년대의 지니계수의 감소 추이와 중위소득의 증가 추이가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으나, 2010년대의 빈곤율 감소 추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2013년에 일시적인 빈곤율 증가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7차 표본 추가에 따라 빈곤율이 일정하게 변화하였고, 17차 표본 추가에 따라 지니계수, 중위소득, 빈곤율이 일정하게 변화하였다. 이는 표본 추가에 따라 소득분배지표의 시계열이 약하게 단절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5]에서는 66세 이상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도 2010년대의 지니계수의 감소 추이, 중위소득의 증가 추이, 빈곤율의 감소 추이가 관찰되었으나, 지니계수와 빈곤율의 경우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시간에 따른 증감이 크고 불안정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또한, 7차 및 17차 표본 추가에 따라 중위소득과 빈곤율의 시계열 단절이 일정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66세 이상 빈곤율은 7차 및 17차 표본의 추가에 따라 상당히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시계열 대표성이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가 2010년대의 여성 고용률 증가, 상용근로자 비율의 증가, 중위소득 증가, 지니계수 감소 같은 사회적 변화의 패턴을 알려진 외부 집계자료와 유사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1~2차 초기 조사의 불안정성, 경제활동 상태 및 소득분배의 세부 시계열 패턴의 불일치, 표본 추가에 따른 일정한 시계열 단절이 함께 관찰되었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로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4]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분포

(단위: 포인트, 만 원/년, %)



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제곱근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음수를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은 사적 이전지출을 제외한다는 점,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은 현물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다는 점 등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 개념에 차이가 존재한다.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5억 원/년에서 탑코딩하였다.

- 복지패널 1차: 1차 원표본
- 복지패널 1차+7차: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
- 복지패널 1차+7차+17차: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17차 추가표본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통계청, 2025c,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그림 2-5] 66세 이상의 가처분소득 분포

(단위: 포인트, 만 원/년, %)



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계급군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음수를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은 사적 이전지출을 제외한다는 점,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은 현물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다는 점 등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처분소득 개념에 차이가 존재한다.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5억 원/년에서 탑코딩하였다.

- 복지패널 1차: 1차 원표본
- 복지패널 1차+7차: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
- 복지패널 1차+7차+17차: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17차 추가표본

출처: 1)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통계청, 2025c,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표 2-11〉 18차 조사 패널 생존 로짓 분석

구분		1차 원표본		7차 통합표본		17차 통합표본	
		전체	20~59세	전체	20~59세	전체	20~59세
균등화 가치분 소득 분위	1분위(기준)	-	-	-	-	-	-
	2분위	0.14	-0.04	0.15	0.19	0.06	-0.03
	3분위	0.12	0.04	0.11	0.09	0.19	-0.06
	4분위	0.02	-0.10	0.12	0.10	0.20	-0.12
	5분위	0.19+	0.10	0.17	0.13	1.22***	1.06*
	6분위	0.14	0.07	0.14	0.14	0.32	0.03
	7분위	0.02	-0.18	0.28+	0.28	-0.22	-0.53
	8분위	0.15	0.01	0.18	0.16	0.74*	0.53
	9분위	0.14	0.04	0.21	0.20	-0.38	-0.59
	10분위	-0.25+	-0.37*	-0.09	-0.00	0.07	-0.23
사례 수(명)		18,805	9,542	18,622	8,596	16,591	6,768
Wald χ^2		951.63***	380.51***	973.47***	289.35***	352.45***	111.17***

주: 1차 원표본, 7차 통합표본, 17차 통합표본을 대상으로 18차 조사 여부를 결과변수로 설정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연령(〈표 2-5〉의 범주), 지역(서울/수도권/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대전·충남·세종/강원·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도), 교육 수준(초졸 이하/중졸/고졸/전문대 졸/4년제 대졸 이상), 경제활동 상태(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공공근로/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일부 범주가 결과변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때 해당 범주의 사례가 제외되었다. 회귀계수를 보고하였다.

· 1차 원표본: 1차 원표본, 1차 개인 횡단가중치 적용, 1차 측정 설명변수 활용

· 7차 통합표본: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 7차 개인 횡단가중치 적용, 7차 측정 설명변수 활용

· 17차 통합표본: 1차 원표본+7차 추가표본+17차 추가표본, 17차 개인 횡단가중치 적용, 17차 측정 설명변수 활용

+ p<.10, * p<.05, ** p<.01, *** p<.001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시계열 대표성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하에서는 패널 탈락으로 인한 표본의 왜곡을 방지하는 종단가중치 설계의 한계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중치 체계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지역에 따른 체계적인 패널 탈락을 보정하고 있으나,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지역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패널 탈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2-11>에는 1차 원표본, 7차 통합표본, 17차 통합표본을 대상으로 18차 조사 여부를 결과변수로 설정한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종단가중치 체계에서 패널 탈락 설명변수인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지역을 통제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 종단가중치 체계에서 패널 탈락 설명변수로 활용하지 않는 균등화 가치분소득분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분위의 영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그 영향이 관찰되었다. 1차 원표본의 경우, 1분위에 비해 5분위에서 18차 조사 패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고 1분위에 비해 10분위에서 18차 조사 패널의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 7차 통합표본의 경우, 1분위에 비해 7분위에서 18차 조사 패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 17차 통합표본의 경우, 1분위에 비해 5분위와 8분위가 18차 조사 패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 20~5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분위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표본에 따라 분석 결과가 완전히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중간소득층의 패널 생존 가능성이 높고, 극빈층과 고소득층의 패널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지역 외에도 소득이나 재산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체계적인 패널 탈락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종단가중치 설계에서도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저소득층 과대표집 평가

다음으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표본 설계를 검토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층, 공공부조 수급자 등의 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1차 원표본, 7차 추가표본, 17차 추가표본을 추출할 때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다.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기 위해서는 소득 정보가 포함된 표본추출 틀이 필요한데, 1차 원표본 및 7차 추가표본 추출에서는 각각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와 2010년 차상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17차 추가표본 추출에서는 1단계 조사에서 소득을 파악하여 2단계에서 최종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저소득층 과대표집으로 인한 표본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 표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설계하였다.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장점은 저소득층 표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면 빈곤층, 공공부조 수급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 등과 같이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집단 표본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와 같은 하위집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로 이동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데이터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층과 노인 중심의 소득보장체계가 아동, 근로연령층, 중산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고, 소득보장제도의 정책 목표가 극빈 제거에서 생애소득 평탄화, 근로유인 제고, 수평적 재분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이원진 외, 2021, p. 219). 또한, 빈곤뿐만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실태에 대한 분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계량적 측면에서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영향을 간단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실태를 기술적으로 추정하는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로 기술통계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회귀분석 등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는 분석 모델 설정의 정확성을 전제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Cameron & Trivedi, 2010, pp. 111-113). 분석 모델 설정이 정확하다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추정량이 편의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치를 적용할 때 추정량의 분산이 커져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델 접근(model approach)을 따르는 연구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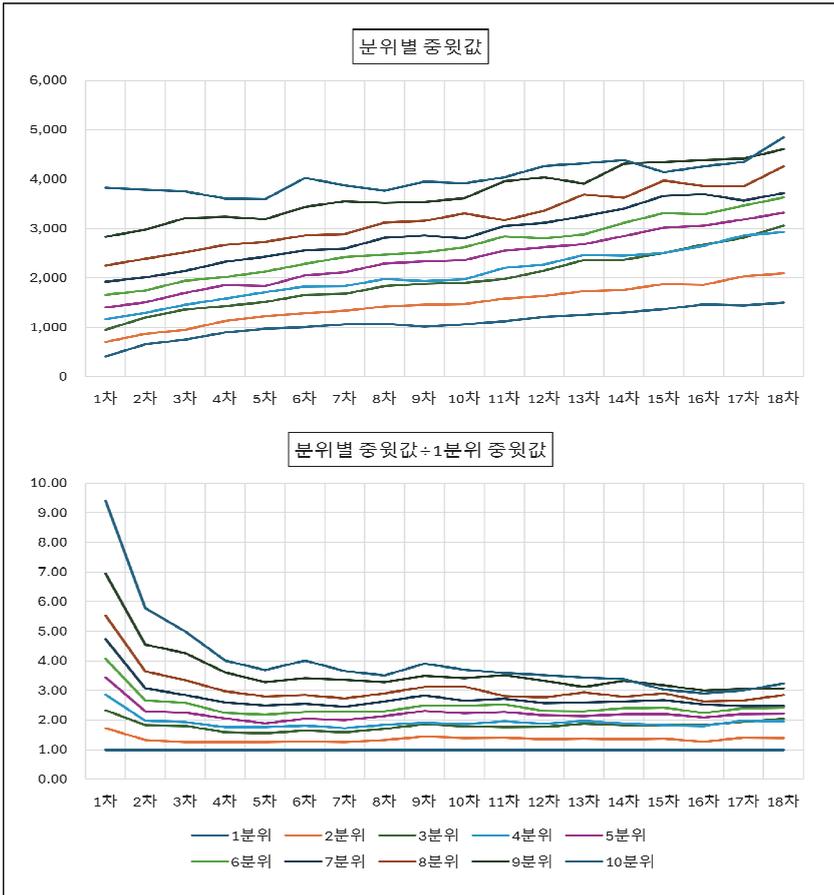
하지만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내생적 표본추출(endogenous sampling)로 인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분석 모델 설정이 정확하더라도 추정량이 불일치(inconsistent)할 가능성이 존재한다(Solon et al., 2015, pp. 309-311). 내생적 표본추출은 표본추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분석 모델의 결과변수로 사용될 때 발생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데이터에서는 소득에 따라 표본추출 확률이 달라진다. 이때 소득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인과관계 모델을 분석하면, 분석 모델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더라도 추정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같이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결과변수로 사용한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내생적 표본추출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실증적 측면에서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을 살펴본다. 소득은 교육 수준과 같이 시간에 따라 지속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적 요인의 영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시간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확률적으로 변동하므로, 표본추출 시점에 확보한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2-6] 1차 가치분소득분위별 1~18차 가치분소득 증윗값

(단위: 만 원/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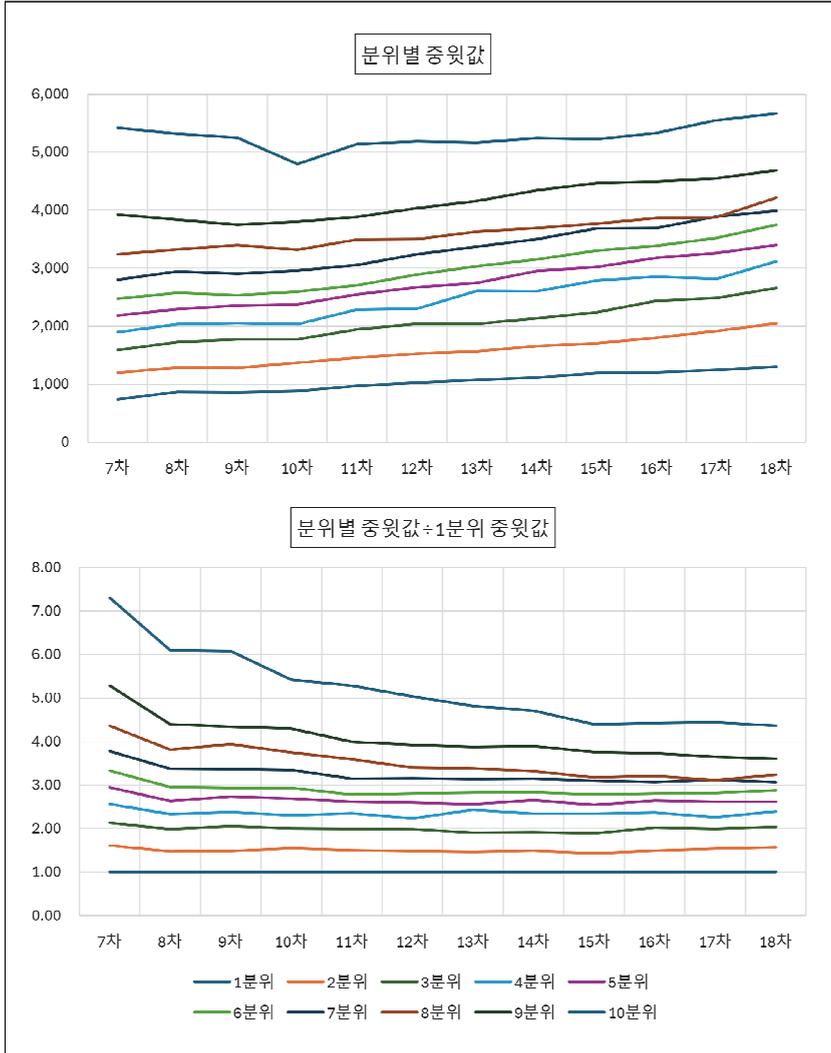


주: 1~18차 균형패널 표본을 대상으로 1차 가치분소득분위별 1~18차 가치분소득 증윗값을 계산하였다. 가치분소득에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1차 가치분소득분위는 1차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그림 2-7] 7차 가치분소득분위별 7~18차 가치분소득 증릿값

(단위: 만 원/년, 비율)



주: 7~18차 균형패널 표본을 대상으로 7차 가치분소득분위별 7~18차 가치분소득 증릿값을 계산하였다. 가치분소득에 제공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7차 가치분소득분위는 7차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그림 2-6]에는 1~18차에서 모두 조사된 균형패널 표본을 대상으로 1차 가치분소득분위별 1~18차 가치분소득 증릿값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1차 가치분소득 1분위 집단의 가치분소득 증릿값은 1차의 408만 원/년에서 18차의 1,499만 원/년으로 증가하였고, 1차 가치분소득 10분위 집단의 가치분소득 증릿값은 1차의 3,831만 원/년에서 18차의 4,851만 원/년으로 증가하였다. 분위별 증릿값을 1분위의 증릿값으로 나눈 비율을 살펴보면, 1차 가치분소득 10분위 집단의 가치분소득 증릿값은 1차에서 1분위의 9.40배였으나, 18차에서 1분위의 3.24배로 감소하였다. 즉, 1차 표본추출 당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급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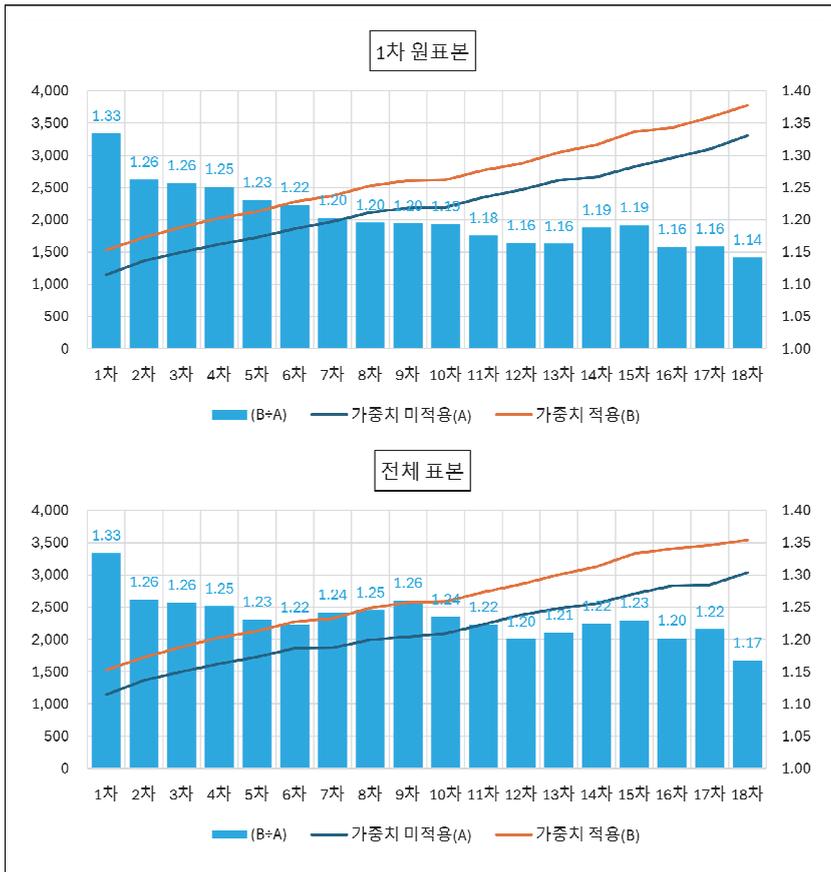
그림을 살펴보면, 소득분위 간 상대적 소득 격차는 4~5차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효용성이 4~5년이 지나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4~5년 이후에도 소득분위 간 상대적 소득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표본추출 시점에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면 시점별 저소득층 표본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크게 확보하는 효과가 일정하게 지속된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림 2-7]에서 7차 추가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그림 2-8]에는 가중치 적용 여부별 가치분소득 증릿값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1차 데이터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가치분소득 증릿값은 1,147만 원/년이었고(이하 '비가중값'), 가중치를 적용한 가치분소득 증릿값은 1,530만 원/년으로(이하 '가중값') 비가중값의 1.33배였다. 저소득층 표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득 수준이 낮게 추정되는 것이다. 이때 비가중값 대비 가중값의 비율을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잠재적인 영향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그림을 살펴

보면, 비가중값 대비 가중값의 비율은 1차 원표본의 경우 1차의 1.33배에서 18차의 1.14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라 저소득층 과 대표집의 잠재적인 영향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8] 가중치 적용 여부별 가처분소득 중윗값

(단위: 만 원/년, 비율)



주: 가처분소득에 제공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 적용 수치는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이와 같이 소득의 확률적 변동에 따라 비가중값 대비 가중값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은, 7차와 17차에 다시 저소득층이 과대표집된 표본이 추가되면서 일정하게 완화된다. 그림을 살펴보면, 7차의 비가중값 대비 가중값의 비율이 1차 원표본에서는 1.20배였지만 추가표본을 포함한 전체 표본에서는 1.24배였다. 또한, 17차의 비가중값 대비 가중값의 비율이 1차 원표본에서는 1.16배였지만 추가표본을 포함한 전체 표본에서는 1.22배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본을 추가할 때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는 선택이 전체 표본에서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효용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 7차와 17차의 표본 추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표본의 비가중값 대비 가중값의 비율이 17차에서 1.17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확률적 변동으로 인해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영향이 축소되는 현상이 여전히 관찰되었다.

제3절 소결

제2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전체 가구 및 인구를 대표하는 가구패널조사로,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여 표본을 설계하였고, 2006년 1차 조사 이후 2012년 7차와 2022년 17차에 표본을 추가하였다. 표본의 구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간에 따라 표본에서 고령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집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표본의 고령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모집단의 인구학적 변화와 성, 연령,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패널 탈락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대체로 표본의 대표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외부 집계자료와 한국복지패널조사로 관찰한 경제활동 상태 및 소득분배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편으로는 2010년대의 여성 고용률 증가,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중위소득의 증가, 지니계수의 감소 같은 사회적 변화의 패턴이 유사하게 확인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2차 초기 조사의 불안정성, 세부 시계열 패턴의 불일치, 표본 추가에 따른 일정한 시계열 단절이 관찰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시계열 대표성이 완전하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중단가중치 설계에 소득이나 재산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패널 탈락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이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것은 빈곤층, 공공부조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로 이동하고 있다. 둘째, 소득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인과관계 분석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때 내생적 표본추출로 인한 추정량 불일치가 발생한다. 셋째, 시간에 따른 소득의 확률적 변동으로 인해 패널 차수가 축적될수록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효과가 일정하게 희석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패널의 차수가 축적되고 표본의 손실 규모가 증가할수록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표본 규모가 감소하여 가중치의 분산이 증가하고 분석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표본의 고령화, 체계적인 패널 탈락 등에 따라 표본의 구성과 모집단의 불일치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표본의 왜곡을 교정하는 가중치 체계가 불완전한 한계점이 시간에 따라 누적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표본의 규모가 감소하고 대표성이 하락할 때 첫째, 약간의 시계열 단절을

감수하고 주기적으로 표본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사를 지속할 수도 있고, 둘째, 표본을 전면 재구축하여 2기 조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조사 이후 2009년, 2018년에 표본을 추가하여 조사를 지속하고 있고,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07년의 원표본과 2012년의 추가표본에 대한 1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에 2기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7년에 조사를 시작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역시 2기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1차 조사 이후 두 차례 표본을 추가하면서 20여 년간 조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패널 차수가 축적될수록 장기 종단 분석의 가능성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부터 18차까지 모두 조사된 6,587명의 균형패널 표본을 활용하면 18년 동안의 소득·경제활동 상태·건강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세대 간 이동성 등과 같은 종단 분석을 위해서는 수십 년에 걸쳐 조사된 패널조사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중치를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표본을 추가하더라도, 패널 차수가 축적될수록 표본의 시계열 대표성에 대한 한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과 사회 현상을 토대로 설계된 조사 문항의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장기 종단 분석의 실효성, 표본 대표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 새로운 조사 문항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실증적 판단에 기초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표본 재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본을 재구축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 다시 표본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과거 두 차례의 표본 추가에서는 원표본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지만, 향후 표본 추가에서는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정책적·실증적 효과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

나라, 추가표본에서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기 위해서는 2단계 조사를 위한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소득보장 조사 내용 현황 및 발전 방향

제1절 조사 항목 개편의 필요성

제2절 소득 관련 항목

제3절 부채, 이자, 재산 항목

제4절 생활비 항목

제5절 소결



제 3 장

소득보장 조사 내용 현황 및 발전 방향

제1절 조사 항목 개편의 필요성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 조사의 조사체계가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적지 않은 조사 항목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체계의 개편은 조사 수행 방식의 개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조사 항목과 내용, 배열 등 다양한 사항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조사 항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개편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항목들에 국한하여 조사 항목의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개편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소득보장 관련 항목이란 복지패널조사나 다른 가구 단위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흔히 소득보장은 제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소득보장제도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개인이나 가구가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소득, 부채, 재산(자산), 소비 등 중요한 경제적 자원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 항목들은 제도의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개개인의 중요한 생활 조건을 설명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요컨대 소득보장과 관련된 항목은 국민들의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핵심적 항목이다.

이 장에서는 소득보장 관련 항목을 크게 복지패널조사의 소득, 부채(이자 포함) 및 자산, 그리고 생활비 항목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가구 조사표에서 소득보장과 관련되어 어떤 항목들이

조사되어 왔으며 최근의 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응답 특징은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응답 결과를 근거로 조사 문항을 축소한다면 어떤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조사 항목은 조사표상의 구분과 별개로 코드북에서 구분된 항목들을 의미한다.

제2절은 소득, 제3절은 부채, 이자 및 재산, 제4절은 생활비 항목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들 순서는 복지패널조사의 조사표상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³⁾ 그러나 개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순서로 검토할 것이다.

제2절 소득 관련 항목

1. 조사 항목의 변화

복지패널의 가구 단위 조사에서 소득을 묻는 항목은 1차 조사부터 계속 포함되었다. <표 3-1>~<표 3-9>는 1차부터 18차까지 어떤 항목들이 조사되었는지 그 변화를 보여준다.⁴⁾ 이들 표에서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에 대해 해당 연도에 조사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표 3-2>에서는 몇 명의 가구원까지 소득을 물었는지를 추가로 표기하였다.⁵⁾

<표 3-1>은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활용변수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만큼 소득 항목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3) 2023년 조사표상의 순서는 생활비(VII), 소득(VIII), 부채, 이자(XI), 재산(X)이다.

4) 참고로 소득조사의 기준 연도는 각 차수의 조사가 시행된 연도의 직전 연도이다. 예를 들어, 18차 조사가 2023년에 시행되었다면, 이때 소득을 묻는 기준은 2022년이다.

5) 현실적으로 응답한 가구원의 수에 별도의 제약이 없었던 만큼 이 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소득 관련 항목의 수가 다른 조사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복지패널은 매우 많은 소득 원천들에 대해 각각 조사하고 있다.

둘째, 소득 항목의 수가 많은 것은 이전소득, 그중에서도 공적 이전소득 관련 항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적 이전소득(사회보험(〈표 3-3〉), 기타보조금(〈표 3-4〉~〈표 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표 3-7〉) 등의 대부분이 복지급여이므로 이들 관련 항목이 많은 것은 복지패널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이들 표에서 보듯이 복지패널은 복지제도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한시생계비, 자녀장려금(자녀장려세제) 등은 시행 직후 바로 해당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연중예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 조사(10차)에서는 각 제도의 급여액을 모두 조사하였다.

셋째, 자영업 가구의 소득 조사 방식이 조사 항목 수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패널에서는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을 순소득과 전입 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총매출액과 총비용을 조사한다(〈표 3-2〉). 표에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업의 경우를 보면, 우선 보유한 경지 규모를 조사하고(논, 밭, 임야,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 조사), 이로부터 발생한 작물에 대해 자가 소비액, 판매 수입, 이전소비액을 조사한다. 추가로 잡수입과 총비용을 조사한 후 위 항목들을 이용하여 순소득을 계산한다. 농림축산업 가구의 소득과 관련된 항목이 11개인 것이다. 어업가구의 소득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된다.

항목의 수가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은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연구 분석 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개개

의 정부보조금에 대해 조사할 때에 비해 이들을 정부보조금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조사하면 조사의 정확성은 달라질 것이다. 특정 급여를 얼마나 많은 가구가, 그리고 어떤 특성의 가구가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 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 항목의 절대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사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조사체계 개편을 계기로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조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항목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1〉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활용변수

조사 항목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항목	단위/ 구분																		
가치분소득	만 원																		
경상소득	만 원																		
가치분소득 및 경상소득 -Imputation 여부 (무응답 대체법 적용 여부)	미적용 /적용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 득의 중위 60% 기준) (원표본)	일반/ 저소득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 구분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 득의 중위 60% 기준) (통합표본)	일반/ 저소득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공 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 의 중위 60% 기준) (원표본+7차 추가표본)	일반/ 저소득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2〉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조사 항목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상용근로자 급여총액	4	4	4	5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임시일용근로자 급여총액	5	5	5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고용주 및 자영자 총매출액	4	4																		
고용주 및 자영자 총비용	4	4																		
고용주 및 자영자 순소득	4	4	4	4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고용주 및 자영자 전입소득		4	4	4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기타 근로소득	4	4	4	4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주: 1) 표 안의 숫자는 조사표상 조사 대상 가구원의 수를 의미함.

2) 기타 소득은 1~3차에서는 부임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3〉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조사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차수	조사 연도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자, 배당금 연간소득																			
임대료 연간소득																			
기타(자격을 대여 등) 연간소득																			
공적연금 연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 연간소득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간소득																			
보훈연금																			
개인연금																			
기타 민간보험																			
퇴직연금 연간소득																			

주: 1)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2) 1차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해당 여부를 묻고(없다/있다)로 응답 요구,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각각에 대해 연간 합계액(만 원)을 조사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4〉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정부보조금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차수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조사 항목																		
1.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2.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3. 노인교통비																		
4. 모부자가정수당/한부모가족지원																		
5.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6.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7. 보육료 지원(-사망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8. 보육료 지원-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9. 아동수당																		
10. 학비 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5〉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정부보조금 2

조사 항목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1. 학비지원-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1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급여 포함)																		
13. 농어업 정부보조금																		
14. 유류환급금																		
15. 긴급복지지원금																		
16. 기타 바우처 지원금																		
17. 기타 바우처 지원금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18. 국민취업지원제도																		
19. 근로장려세제																		
20. 한시생계비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6〉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정부보조금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차수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조사 항목	조사 연도																		
21. 자녀장려세제																			
22. 급식비 지원																			
23. 급식비 지원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24.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25. 에너지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26. 통신 감면 또는 보조(전화비, 인터넷 등)																			
27. 통신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28. 기타 보조금																			
29. 기타 보조금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30.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긴급복지지원, 청년수당 등)																			
31. 재난지원금(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7〉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 항목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급여-지출을 전제로 한 현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지출을 전제로 한 현금																				
교육급여																				
교육급여-지출을 전제로 한 현금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8〉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기타 소득

조사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차수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조사 연도																			
증여·상속																			
경조금																			
보상금																			
사고보험금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계약금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기타 소득																			
세금 환급금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9〉 한국복지패널 소득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 사적 이전소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차수	조사 연도																		
조사 항목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가구원이 아닌 부모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이 아닌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이 아닌 기타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 지 9개월 미만인 가구가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민간보조금(현금)																			
민간보조금(현물)																			
민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현금 및 현물)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2. 소득 항목의 응답 특성 검토

조사 항목을 줄이면서도 정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제외하고 제외된 항목을 다른 어떤 항목에 포함시킬지(또는 다른 어떤 항목으로 대체할지) 판단해야 한다. 우선 조사에서 제외할 항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의미한 응답이 적은 문항을 파악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 조사에서 응답 결과가 0⁶⁾보다 큰 가구의 비율을 살펴볼 것이다. 즉 해당 항목의 소득이 없다고 대답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 비율을 살펴볼 것이다. 이 비율이 낮은 항목은 조사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응답률이 낮아 관측치가 적게 되면 표준오차가 커지고 해당 항목의 평균에 대한 통계적 신뢰성이 낮아진다.

물론 양수의 소득값을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조사 항목의 다른 유용한 특성들을 검토하거나 응답의 장기적 경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하의 검토 내용은 조사 항목을 개편(축소)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3-10〉~〈표 3-13〉은 주요 소득 항목에 대해 소득값이 0보다 크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3-10〉과 〈표 3-11〉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응답의 표본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율이고, 〈표 3-12〉와 〈표 3-13〉은 가구 횡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율이다. 이들 표에는 〈표 3-1〉의 항목이나 〈표 3-2〉의 근로소득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항목은 응답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외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주 및 자영자의 전입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들이나 농림축산업 가구, 어업 가구의 소득과 관련된 항

6) 소득 항목의 단위는 만 원/연이다.

목들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 3-10〉~〈표 3-11〉과 〈표 3-12〉~〈표 3-13〉을 비교해보면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비율이 낮게 나오는 소득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표 3-10〉 및 〈표 3-11〉을 살펴보자. 18차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공적 이전 항목에 한정해서 보면 가정위탁금, 긴급복지지원금, 급식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부모 가족 지원, 교육급여, 산재보험 등은 그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제도를 포함하여 양육수당, 자녀장려세제, 학비 지원, 고용보험, 특수직역연금, 보훈급여, 보육료 지원 등의 제도적 수혜 가구 비율은 5% 미만이다.

사적 이전소득 항목 가운데에서도 가구원이 아닌 기타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 가구 진입 9개월 미만 가구원의 보조금, 증여나 상속 소득 항목의 응답 비율은 1%에 못 미친다. 9개월 미만 생활한 후 분가한 가구원의 보조금, 동산 및 부동산 매매차익, 경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응답 비율은 5% 미만이다.

〈표 3-10〉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1(가중치 미적용)

(단위: %)

소득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이자, 배당금 연간소득	26.8	28.3	28.8	29.6	27.3	30.0	30.2	32.0
임대료 연간소득	14.2	15.0	14.9	15.6	15.3	15.4	14.7	15.0
기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소득	0.3	0.2	0.2	0.3	0.2	0.4	0.3	0.5
공적연금 연간소득	30.0	30.9	32.5	33.4	34.8	35.8	39.3	40.4
- 국민연금				29.0	30.5	31.7	35.1	37.2
- 특수직역연금				5.7	5.9	5.7	5.9	4.1
고용보험 연간소득 (미가입자 포함)	3.3	3.1	3.2	3.4	3.3	4.5	4.5	3.7
산재보험 연간소득	0.6	0.6	0.8	0.7	0.6	0.8	0.6	0.7
개인연금 연간소득	1.2	1.6	2.1	2.4	2.8	3.0	3.4	3.9
퇴직연금 연간소득	0.0	0.0	0.0	0.0	0.1	0.1	0.1	0.1
장예수당(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7.1	7.1	7.2	6.9	7.1	7.1	6.6	6.6
기초연금	41.7	42.0	42.9	43.5	43.5	44.7	47.2	48.4
한부모가족지원	0.2	0.1	0.2	0.2	0.3	0.2	0.3	0.5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0.1	0.1	0.1	0.1	0.1	0.0	0.0	0.0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1	3.0	2.5	2.3	2.0	2.1	1.6	1.3
보육료 지원 (i-사랑카드, 아이즐거웁카드)	7.4	7.2	6.8	6.3	5.9	5.2	5.1	4.7
아동수당				6.3	6.8	7.1	6.5	7.0
학비지원(농림부지원 포함)	5.5	5.5	5.2	4.5	4.9	5.6	2.8	3.0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보훈급여 포함)	2.7	2.6	2.5	2.7	2.7	2.8	3.0	4.3
농어업 정부보조금	9.7	9.5	9.3	9.4	9.1	9.7	10.6	10.8
긴급복지지원금	0.2	0.2	0.1	0.2	0.2	0.4	0.3	0.2
기타 바우처 지원금	8.3	9.6	11.0	11.3	11.7	11.9	12.8	16.6
국민취업지원제도								0.4
근로장려세제	3.4	4.5	5.3	5.2	11.1	11.6	12.0	12.9
자녀장려세제	3.4	3.2	3.5	3.1	2.8	2.2	1.8	1.4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11〉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미적용)

(단위: %)

소득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급식비 지원	2.9	2.6	2.1	1.4	1.7	2.6	0.2	0.3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전기료, 가스비 등)	16.7	17.2	17.6	18.4	18.2	18.3	17.5	19.1
통신 감면 또는 보조(전화비, 인터넷 등)	20.2	20.3	19.4	19.6	23.9	27.9	27.4	29.5
기타 보조금	17.9	19.8	20.0	20.2	20.4	38.6	19.8	18.2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긴급복지지원, 청년수당 등)				2.5	7.5	8.0	14.5	
재난지원금(코로나19 관련 지원금)						99.8	97.0	56.0
증여·상속	0.6	1.0	1.0	1.0	0.9	0.7	0.8	0.6
경조금	4.1	3.9	3.9	3.2	3.0	2.7	2.6	2.7
보상금	1.7	3.0	2.2	1.7	2.3	2.4	1.8	3.9
사고보험금	8.7	11.5	11.3	11.9	10.7	12.1	11.7	13.6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6.6	7.0	7.1	7.6	6.1	7.3	6.1	5.9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2.0	1.7	2.0	1.6	1.5	2.0	1.9	1.4
기타 소득	95.6	97.9	93.7	95.8	96.2	95.2	81.7	95.8
세금 환급금	17.2	18.0	19.4	19.6	21.2	21.5	20.2	21.7
가구원이 아닌 부모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1.5	22.6	21.4	20.5	17.7	19.0	19.1	18.3
가구원이 아닌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53.9	54.0	54.8	55.0	54.9	55.3	58.1	58.4
가구원이 아닌 기타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0.1	0.0	0.1	0.1	0.0	0.1	0.0	0.0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1.5	1.5	1.7	1.0	1.2	1.3	1.0	1.0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 지 9개월 미만 된 가구원이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1.0	1.1	0.8	0.6	0.6	0.6	0.5	0.4
민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현금 및 현물)	97.3	98.3	98.7	98.3	97.3	98.4	48.9	72.2
생계급여 총액	9.8	9.9	9.7	9.5	8.8	8.8	9.1	9.7
주거급여 총액	9.8	9.9	9.7	9.5	8.8	8.8	9.1	9.7
교육급여 총액	9.8	9.9	9.7	9.5	8.8	8.8	9.1	9.7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12〉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1(가중치 적용)

(단위: %)

소득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이자, 배당금 연간소득	27.1	27.3	28.9	29.0	27.3	30.1	31.6	31.8
임대료 연간소득	13.5	14.3	14.5	15.2	15.2	15.6	14.6	14.3
기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 소득	0.3	0.2	0.3	0.2	0.2	0.4	0.3	0.5
공적연금 연간소득	24.5	25.4	26.8	27.2	28.0	29.6	30.3	35.1
- 국민연금				23.1	24.0	25.7	26.4	32.3
- 특수지역연금				5.3	5.3	5.3	5.5	3.6
고용보험 연간소득 (미가입자 포함)	4.6	3.9	4.3	4.7	4.6	6.2	6.8	4.7
산재보험 연간소득	0.6	0.6	0.9	0.6	0.5	0.8	0.7	0.5
개인연금 연간소득	1.5	2.0	2.7	3.1	3.6	3.9	4.3	4.5
퇴직연금 연간소득	0.0	0.1	0.0	0.0	0.1	0.1	0.2	0.1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5.4	5.5	5.7	5.5	5.8	5.7	5.0	5.5
기초연금	24.0	24.5	24.5	25.2	24.6	26.3	27.0	37.8
한부모가족지원	0.1	0.2	0.1	0.1	0.2	0.3	0.3	0.5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0.1	0.1	0.0	0.0	0.0	0.0	0.0	0.0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4	3.7	3.2	2.8	2.1	2.6	2.3	1.9
보육료 지원 (i-사랑카드, 아이즐거웁카드)	9.0	8.6	8.2	7.5	7.3	6.7	7.2	6.6
아동수당				7.4	8.3	9.1	9.2	9.7
학비지원(농림부지원 포함)	5.8	5.8	5.6	5.0	5.7	6.6	3.6	3.1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보훈급여 포함)	1.4	1.4	1.3	1.4	1.5	1.6	1.7	3.0
농어업 정부보조금	4.6	4.8	4.5	4.8	4.8	5.0	4.9	6.5
긴급복지지원금	0.1	0.2	0.1	0.2	0.1	0.4	0.2	0.3
기타 바우처 지원금	8.1	9.2	10.0	9.9	10.4	10.9	10.5	14.7
국민취업지원제도								0.6
근로장려세제	3.3	4.4	5.0	4.6	10.0	10.4	10.3	12.2
자녀장려세제	3.5	3.2	3.7	3.2	2.9	2.2	2.1	1.7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13〉 소득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적용)

(단위: %)

소득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급식비 지원	2.5	2.3	2.1	1.4	2.0	2.7	0.3	0.2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전기료, 가스비 등)	14.6	15.3	15.5	16.4	16.4	16.5	15.2	17.9
통신 감면 또는 보조(전화비, 인터넷 등)	16.7	17.0	16.2	16.3	18.6	20.9	20.9	26.7
기타 보조금	14.9	16.2	15.9	16.1	16.3	28.6	16.5	17.4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긴급복지지원, 청년수당 등)					1.7	4.6	4.9	9.6
재난지원금(코로나19 관련 지원금)						99.8	95.3	50.1
증여·상속	0.6	1.4	1.6	1.3	1.3	0.9	1.3	0.6
경조금	4.7	4.6	3.8	3.6	3.3	3.4	3.2	2.6
보상금	1.6	2.8	2.2	1.6	2.0	2.0	1.9	3.4
사고보험금	11.2	13.8	14.0	14.6	13.4	15.8	16.8	16.5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9.2	9.3	9.4	10.2	8.1	9.3	8.4	6.7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2.5	2.2	2.4	1.9	1.8	2.4	2.5	1.5
기타 소득	95.1	96.8	93.3	95.3	95.2	93.5	82.2	94.4
세금 환급금	25.0	26.6	28.7	29.0	31.3	32.4	31.8	30.1
가구원이 아닌 부모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30.3	32.0	30.3	29.4	25.9	27.8	30.1	24.8
가구원이 아닌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40.0	40.0	41.2	41.4	40.3	41.5	41.9	47.9
가구원이 아닌 기타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0.1	0.0	0.1	0.1	0.1	0.1	0.1	0.0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1.5	1.4	1.6	0.8	1.1	1.5	1.1	0.9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 지 9개월 미만 된 가구원이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1.3	1.5	1.1	0.7	0.9	0.9	0.7	0.5
민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현금 및 현물)	97.1	97.9	98.2	97.9	96.8	98.2	54.8	76.0
생계급여 총액	7.6	7.6	7.5	7.5	7.0	7.1	6.9	8.6
주거급여 총액	7.8	7.7	7.7	7.8	7.7	8.0	7.5	9.0
교육급여 총액	1.3	1.2	1.0	0.9	1.0	0.8	0.6	0.5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특정 소득 항목의 값이 관측되는 가구의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 항목의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제도 자체가 포괄 범위(coverage)가 낮게 설계되어 있어 해당 급여액이 0보다 큰 응답 가구 비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운영의 현실과 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은 별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가 소수의 인구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면 복지패널조사에도 그 제도의 수혜자가 적게 관측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성이 유효표본의 수가 적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한편 특정 소득이 관측되는 표본 가구 수가 적은 경우라도 해당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특정 소득원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소수의 대상자에서 관측되는 소득이지만 그 가구의 소득에서 해당 소득원이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 소득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4〉는 〈표 3-10〉~〈표 3-13〉에서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1% 이하인 소득 범주에 대해 해당 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18차를 기준으로 보면, 증여와 상속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0.6%에 불과하지만(〈표 3-13〉), 증여와 상속이 있는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증여와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1%나 된다. 산재보험이나 퇴직연금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두 소득이 관측되는 가구에서 산재보험은 경상소득 대비 약 38%의 비중으로, 퇴직연금은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급식비 지원이나 가구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 교육급여 총액 등은 이 소득이 관측되는 가구에서도 경상소득의 5%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차지한다.⁷⁾

〈표 3-14〉 가구 경상소득 대비 비중(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1% 이하인 항목)

(단위: %)

소득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기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소득	5.6	7.9	10.3	7.2	8.4	11.8	8.2	14.1
산재보험 연간소득	43.1	42.0	34.4	46.0	50.6	37.6	42.2	37.9
퇴직연금 연간소득	12.2	15.4	3.9	10.3	21.7	15.4	15.4	20.0
한부모가족지원	6.3	2.2	5.1	6.4	9.2	7.7	9.7	11.3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8.2	3.9	11.9	8.4	13.6	3.3	18.6	10.8
긴급복지지원금	15.2	12.2	13.3	10.9	11.2	8.2	7.2	10.8
국민취업지원제도	4.8
급식비 지원	3.2	2.9	3.0	3.1	1.7	1.4	4.2	2.6
증여·상속	136.2	124.5	269.3	334.5	185.4	279.5	311.9	210.7
가구원이 아닌 기타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	33.6	0.6	2.4	2.4	0.4	11.7	1.0	4.7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 지 9개월 미만 된 가구원이 제공한 보조금	13.4	11.0	51.9	15.6	11.5	22.1	21.6	8.9
교육급여 총액	2.0	3.1	3.4	3.9	4.6	2.7	1.7	2.1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마찬가지로 〈표 3-15〉는 〈표 3-10〉~〈표 3-13〉에서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5% 이하인 소득 범주에 대해 해당 소득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동산이나 부동산의 매매차익은 경상소득의 약 280%이다(18차 기준). 특수직역연금이나 국가유공자보조금 등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이들 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각각 경상소득의 58.1%, 27.5%에 이른다. 반대로 양육수당이나 자녀장려세제를 받는 가구에서도 이들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상소득의 5%에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

7) 국민취업제도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4.8%이나, 이 제도는 조사된 것이 처음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표 3-15〉 가구 경상소득 대비 비중(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5% 이하인 항목)

(단위: %)

소득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	.	.	58.6	57.3	55.5	54.3	58.1
고용보험 연간소득 (미가입자 포함)	10.9	10.6	10.8	12.5	13.2	18.5	15.1	13.3
개인연금 연간소득	13.0	10.0	10.8	11.6	10.8	11.0	11.2	13.6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3.4	3.2	0.7	3.1	2.4	2.2	2.5	2.7
보육료 지원(i-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6.1	5.9	5.6	5.7	5.2	5.2	5.8	5.1
학비지원(농림부지원 포함)	6.6	6.5	5.7	5.6	4.6	5.0	6.5	6.4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급여 포함)	15.1	13.3	14.8	15.7	14.2	13.5	11.9	27.5
자녀장려세제	1.5	1.7	1.4	1.5	2.0	2.0	2.0	1.8
경조금	50.1	46.4	46.2	50.5	40.0	30.9	36.2	33.9
보상금	34.3	23.0	19.6	40.4	18.7	22.2	8.1	7.8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188.6	354.9	214.1	321.5	180.5	1176.9	750.4	280.0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20.8	35.1	34.4	16.7	11.4	24.7	156.6	26.4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극히 일부의 가구에서만 관측되는 소득원일지라도 해당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기 다르다. 증여, 상속이나 부동산의 매매차익 같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에 국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복지패널의 소득 조사 항목을 조정할 경우 특정 소득 항목이 관측되는 가구의 비율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서 해당 소득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조사 항목

한국복지패널조사에는 다양한 공적 이전소득이 조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적 이전소득 항목과 달리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8차 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과 관련된 조사 항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3-16>과 같다.

<표 3-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관련 조사 항목 개요(18차 조사 기준)

조사 항목	비고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여부 지난 1년간 신청 여부 가구 생성 이후 신청 여부	-11차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각 급여에 대해 조사 -11차에는 통합 급여와 육구별 급여 모두 조사
2. 신청 여부	
3. 선정 여부	
4. 생계 문제 해결 방법	
5. 수급 경험 지난 1년간 가구 생성 이후 수급 주기(차수)별 수급 기간	-1, 2, 3차 수급에 대해 주기별 질문 -12차부터 시작, 종료 시점 상세 질문
6. 수급 이유	
7. 급여 수준 평가	
8. 수급 탈피 예상 기간	
9. 탈피 이유	
10. 탈피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주: 번호는 구분 편의상 부여한 것임.

출처: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과 관련된 조사는 크게 신청 이력, 수급 경험, 탈피 예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청과 수급 이력은 각각 조사 대상인 지난 1년간의 경험과 가구 생성 이후의 경험을 별개로 조사한다.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을 기점으로 11차 조사부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각각에 대해 위 조사를 수행한다.⁸⁾

조사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표 3-16>과 같

은 내용의 조사는 1차 조사부터 지속되어 왔다. 복지패널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2006년의 시점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몇 안 되는 제도였으며, 공공부조제도의 수급 실태를 파악할 자료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와 같은 상세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 저소득층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복지급여가 계속 신설, 확충되어 왔다는 점(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아동수당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관해서만 별도의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조사 항목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최초 조사 시점과 달리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제를 전제로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문항의 대표적인 예로는 <표 3-16>의 항목 5 중 '수급 주기별 수급 기간'을 들 수 있다. <표 3-17>은 17차, 18차 조사에 한하여 관련 문항에 응답한 가구의 수를 보여준다. 조사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개 급여 가운데 한 개 이상의 급여를 받은 가구는 100가구가 넘지만 수급 주기(각 차수의 수급 개시 연도)에 대해 응답한 가구의 수는 3가구 이하이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수급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한 가구가 없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것은 2015년 7월부터이다. 2015년 소득에 대해 조사한 11차 조사에서는 6월 이전까지의 통합 급여와 7월 이후의 개별 급여에 대해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표 3-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주기별 응답 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17차	18차
조사 가구	7,865	7,654
1개 이상 급여 수급 가구(전년도)	119	102
1개 이상 급여 수급 가구(가구 생성 이후)		2
생계급여 첫 번째	1	2
두 번째	0	0
세 번째	0	0
의료급여 첫 번째	3	1
두 번째	0	0
세 번째	0	0
주거급여 첫 번째	1	2
두 번째	0	0
세 번째	0	0
교육급여 첫 번째	1	0
두 번째	0	0
세 번째	0	0

주: 각 주기별 수급 시작 연도를 응답한 가구 수임.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7~18차.

이러한 결과가 실제 조사 대상 가구의 수급 경험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응답 가구의 응답 회피나 부정확한 응답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조사 결과만으로는 반복 수급 실태에 대한 분석이나 반복 수급 유형별 가구 특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초보장 수급의 동태적 특성 같은 정보는 이미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문항들을 계속 조사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09년의 소득에 대해 조사한 4차 조사부터 복지패널의 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 11차 조사부터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각각 조사하고 있다. 관련된 조사 항목을 정리하면 〈표 3-18〉과 같다.

〈표 3-18〉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조사 항목(18차 조사 기준)

조사 항목	비고
1.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근로, 자녀 세제 각각 질문
2. 신청 여부	
3. 수령	'1개 이상 수급' 응답 가구=1,026
4. 급여액 사용 현황	
5. 도움 정도	
6.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7. 수급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주: 번호는 구분 편의상 부여한 것임.

출처: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3.

이 조사 문항 역시 복지패널조사의 초기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포함되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도 도입 당시에 관심사였고, 그 점이 조사 문항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와 달리 〈표 3-18〉의 문항에 대한 응답 가구 수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사를 근로(장려)세제에 국한하여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인식, 신청 여부, 수령 여부, 급여액의 사용현황 등 〈표 3-18〉의 질문들은 다른 모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특별히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해서만 이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이후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부채, 이자, 재산 항목

1. 조사 항목의 변화

〈표 3-19〉는 복지패널조사에서 부채와 이자 관련 항목의 조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⁹⁾ 부채 및 이자 항목은 소득 관련 항목에 비해 그 수도 적고 변화도 많지 않다. 5~6차 조사에 한해 금융기관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 금액이 별도로 조사되었고, 이자액은 2차 조사 이후로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와 기타 이자로 나뉘어 조사되고 있다. 재산의 경우는 재산 항목에 비해 더욱 변화가 없다.¹⁰⁾ 조사 항목은 부채에 비해 많지만 1차 조사 이후로 18차 조사까지 항목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9) 이자 부담은 생활비와 같이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조사의 편의상 부채와 함께 조사되고 있다.

10) 재산 관련 조사 항목은 〈표 3-21〉 참조.

〈표 3-19〉 한국복지패널 부채 및 이자 조사항목의 차수별 변화

조사 항목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대출-이 중 담보대출																			
일반 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 돈)																			
외상, 미리 탕 깎돈																			
기타 부채																			
지출한 이자액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기타 이자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2. 조사 항목의 응답 특성 검토

〈표 3-20〉~〈표 3-23〉은 부채, 이자 및 재산 항목 조사에서 응답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이다.¹¹⁾ 앞의 소득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3-20〉~〈표 3-21〉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표 3-22〉~〈표 3-23〉은 가구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표 3-10〉을 보면, 부채의 경우 일반 사채, 외상(미리 탄 켄돈), 기타 부채 등에 응답한 가구 비율은 5% 미만이다. 부채와 관련된 이자 지출 항목을 보면 교육, 의료, 빚 갚음 등의 항목이 모두 2%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1〉은 재산 관련 조사 항목이 매우 다양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 가구에 비해 농여가의 재산 항목이 매우 많다. 그런데 농여가의 비율 자체가 낮은 만큼 농여가 관련 자산 항목의 응답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차 조사를 기준으로, 각종 가축들과 콤바인 같은 농기계 항목의 응답 비율은 1% 미만이고, 여타 농기계의 응답 비율도 5%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자산 가운데는 켄돈, 기타 금융재산 등의 응답 비율이 5% 미만이다. 기타 재산 가운데 운동클럽 회원권 등의 응답 비율도 1%가 채 되지 않는다.

응답 비율이 낮은 항목들은 다른 차수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복하여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항목들을 경우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1) 부채 및 재산 항목의 단위는 만 원, 이자 항목의 단위는 연간 만 원이다.

〈표 3-20〉 부채 및 이자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가중치 미적용)

(단위: %)

부채 및 이자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금융기관 대출	29.5	29.7	29.8	30.5	30.2	32.2	30.1	30.8
일반 사채	2.3	2.1	1.5	1.4	1.5	1.5	1.0	1.2
카드빚	2.8	2.7	3.3	3.7	3.7	3.5	4.7	5.6
전세보증금(받은 돈)	11.3	11.3	11.0	11.8	12.4	12.3	11.4	11.9
외상, 미리 탄 켄돈	3.0	3.1	2.4	2.7	2.2	0.9	0.4	0.3
기타 부채	5.4	4.7	4.5	5.2	3.9	3.6	3.4	3.1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17.6	18.7	18.8	19.1	18.9	19.7	18.5	18.6
기타 이자	17.3	15.6	16.2	17.5	17.2	17.7	16.1	16.9
생활비(생계비)	.	10.8	10.6	11.2	.	9.8	11.0	11.6
주택 관련 자금 (전세보증금 포함)	.	24.3	23.0	24.0	.	25.4	23.9	24.4
교육(학자금 마련 포함)	.	2.1	1.5	1.7	.	1.5	1.0	1.4
의료비	.	0.7	0.9	0.9	.	0.7	0.8	0.8
빚 갚음	.	0.9	1.0	0.9	.	0.7	0.9	0.8
기타	.	16.3	18.0	19.0	.	18.9	16.6	17.3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21) 재산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미적용)

(단위: %)

재산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소유 부동산-주택	8.9	9.0	9.1	9.6	10.1	10.2	9.9	10.5
-주택 외 건물	3.6	4.3	4.2	4.3	4.6	4.6	4.7	5.5
-토지	20.8	20.7	20.3	20.5	19.7	20.7	21.2	21.3
점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준 것	6.8	6.9	7.1	6.8	7.1	7.1	6.8	6.4
-기타(권리금 등)	7.9	7.2	7.0	7.0	6.8	7.7	7.8	7.8
금융자산-예금	92.9	95.4	92.5	94.1	92.5	93.9	94.0	95.3
-적금	40.4	41.8	42.7	42.8	42.2	40.7	37.9	40.2
-주식·채권	13.6	13.6	14.6	15.0	14.2	18.0	20.6	22.5
-갯돈(타기 전)	0.7	0.6	0.7	0.8	0.5	0.5	0.6	0.5
-기타	3.1	4.0	4.5	3.9	3.4	3.3	3.5	3.4
농기계-동력탈곡기	0.2	0.2	0.1	0.2	0.2	0.2	0.2	0.2
-경운기	5.6	5.4	5.1	4.8	4.5	4.7	4.2	4.0
-콤바인	0.7	0.6	0.7	0.7	0.6	0.7	0.6	0.7
-트랙터	2.2	2.4	2.2	2.4	2.2	2.3	2.4	2.5
-기타 농기계	5.8	5.8	5.5	4.8	4.2	5.1	5.5	4.9
-소	1.1	1.0	1.0	1.0	1.0	0.9	0.8	0.9
-돼지	0.0	0.0	0.0	0.0	0.0	0.0	0.0	0.0
-닭	0.2	0.2	0.4	0.3	0.1	0.3	0.3	0.3
-재고 농산물	0.7	0.7	0.6	0.6	0.4	0.2	0.3	0.7
-기타 농축산물	2.2	2.6	2.4	1.9	1.8	1.7	1.9	2.0
자동차-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	43.6	44.4	44.9	45.5	45.5	45.4	45.9	46.2
-소유한 자동차의 가격	43.6	44.4	44.9	45.5	45.5	45.4	45.9	46.2
기타 재산-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0.1	0.1	0.2	0.2	0.1	0.2	0.1	0.2
-운송 및 생계수단 차량	10.3	10.2	10.5	9.9	9.6	9.6	9.7	9.6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17.2	15.4	15.9	14.9	12.3	13.0	14.9	13.9
-기타	0.5	0.7	0.7	0.8	0.7	0.7	0.7	0.7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22〉 부채 및 이자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가중치 적용)

(단위: %)

부채 및 이자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금융기관 대출	36.0	36.4	37.8	38.3	37.8	41.3	39.8	37.7
일반 사채	2.5	2.5	1.5	1.4	1.8	1.7	1.3	1.4
카드빚	3.3	3.1	4.1	4.4	4.7	4.6	6.6	7.1
전세보증금(받은 돈)	13.5	13.3	13.1	14.3	15.5	15.4	14.2	13.5
외상, 미리 탄 켓돈	3.9	3.9	2.9	3.1	2.8	1.1	0.5	0.4
기타 부채	6.0	5.5	5.4	6.5	4.8	4.5	4.1	4.0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22.2	23.6	24.5	24.6	25.2	26.6	26.1	23.5
기타 이자	20.8	18.7	20.1	21.4	20.7	22.3	21.0	20.0
생활비(생계비)	.	12.2	11.9	12.4	.	11.6	14.1	14.3
주택 관련 자금 (전세보증금 포함)	.	29.1	28.3	29.5	.	32.9	31.8	29.8
교육(학자금 마련 포함)	.	3.3	2.4	2.6	.	2.5	1.6	1.9
의료비	.	0.7	0.9	1.1	.	0.8	0.9	0.9
빚 갚음	.	1.0	1.3	1.0	.	0.9	1.1	1.0
기타	.	20.6	22.9	23.8	.	24.2	21.7	20.1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23) 재산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2(가중치 적용)

(단위: %)

재산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소유 부동산-주택	11.4	11.3	11.7	12.7	13.6	13.4	13.3	12.0
-주택 외 건물	4.6	5.5	5.3	5.5	5.9	5.9	6.1	6.1
-토지	16.5	16.0	16.3	16.7	15.8	17.1	16.5	17.3
점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준 것	9.5	9.2	8.9	8.4	8.8	9.2	9.4	7.6
-기타(권리금 등)	9.4	8.6	8.3	8.3	8.3	9.0	9.8	8.4
금융자산-예금	92.6	95.5	92.2	94.2	92.6	94.2	93.8	95.6
-적금	53.2	53.9	56.1	56.1	56.6	54.0	52.8	49.5
-주식·채권	13.4	13.1	14.2	15.0	14.9	19.8	23.8	23.5
-캐드(타기 전)	1.0	0.7	1.0	1.1	0.6	0.5	0.7	0.6
-기타	4.2	5.4	6.3	5.4	5.2	4.4	5.0	4.2
농기계-동력탈곡기	0.2	0.1	0.0	0.1	0.2	0.1	0.1	0.1
-경운기	2.8	2.7	2.6	2.5	2.6	2.6	2.0	2.5
-콤바인	0.5	0.4	0.5	0.3	0.3	0.5	0.3	0.4
-트랙터	1.5	1.4	1.4	1.7	1.4	1.7	1.4	1.7
-기타 농기계	3.3	3.2	3.2	2.9	2.3	3.4	3.0	3.5
-소	0.7	0.7	0.6	0.6	0.6	0.6	0.4	0.5
-돼지	0.0	0.0	0.0	0.0	0.0	0.0	0.0	0.0
-닭	0.3	0.2	0.2	0.3	0.1	0.2	0.3	0.3
-재고 농산물	0.3	0.4	0.4	0.3	0.2	0.1	0.2	0.4
-기타 농축산물	1.3	1.4	1.4	1.2	1.2	1.2	1.2	1.5
자동차-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	54.5	54.9	55.9	57.1	57.4	57.4	58.2	53.6
-소유한 자동차의 가격	54.4	54.9	55.9	57.1	57.4	57.4	58.2	53.5
기타 재산-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0.3	0.2	0.3	0.3	0.2	0.3	0.2	0.2
-운송 및 생계수단 차량	9.8	9.7	10.5	10.0	9.5	9.3	9.7	8.7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21.2	20.0	19.7	17.7	15.6	16.8	18.4	16.6
-기타	0.5	0.6	0.8	0.9	0.6	0.6	0.6	0.7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한편 <표 3-24>는 <표 3-20>과 <표 3-22>에서 5% 미만을 보인 부채 항목에 대해 해당 부채가 가구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경상소득 대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3-22>에서 일반 사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1.4%인데, 일반 사채가 있는 경우 그것이 가구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채의 규모 또한 경상소득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조사된 해가 많았다. 외상이나 미리 탄 깃돈, 기타 부채 등도 이들 부채 항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60%대를 보였다. 이와 같이 관측 확률은 낮지만 관측 되었을 때 그것이 가구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 항목이 관측되는 가구의 경우 다른 신용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24> 특정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항목의 부채 비중

(단위: %)

부채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총부채 대비 비중								
일반 사채	59.3	57.8	64.9	64.8	62.0	60.9	58.4	51.6
외상, 미리 탄 깃돈	48.3	48.0	46.3	51.0	43.0	44.1	47.2	62.5
기타 부채	56.0	59.6	64.9	64.6	64.2	67.0	62.8	62.6
경상소득 대비 비중								
일반 사채	201.1	94.6	5905.6	110.4	141.6	116.9	80.4	108.3
외상, 미리 탄 깃돈	21.9	20.1	21.6	20.2	20.0	14.0	22.9	93.2
기타 부채	76.0	68.4	77.4	274.4	92.7	236.1	83.3	84.4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마지막으로 <표 3-25>는 <표 3-21>과 <표 3-23>에서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5% 미만인 자산 항목들에 대해 총자산 대비 비중과 경상소득 대비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깃돈(타기 전)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18차 조사의 경우 0.6%에 불과했으나(〈표 3-23〉), 이 항목이 있는 가구에서 껌돈은 총자산의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 해도 있다(11차와 13차). 껌돈의 경상소득 대비 비율 역시 10% 안팎으로 나타난다. 농기계와 농축산물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부분 그 보유 비율이 5% 미만이지만 자산의 가치는 항목에 따라 매우 다르다. 소를 갖고 있는 가구에서 소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20~26%에 이른다. 경상소득 대비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탈곡기나 경운기, 기타 농기계, 닭, 기타 농축산물 등은 총자산 대비 비중도 작고 경상소득 대비 비율도 높지 않다. 자산 관련 조사 항목을 정비할 때에는 특정 자산 항목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는 가구의 비율과 함께 해당 자산의 비중도 동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25〉 특정 자산이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항목의 자산 비중

(단위: %)

자산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총자산 대비 비중								
금융자산-갯돈(타기 전)	10.5	8.2	11.1	9.2	8.6	6.4	5.7	6.9
-기타	34.1	37.4	36.8	35.8	35.1	39.6	34.4	36.1
농기계-동력탈곡기	0.3	0.7	1.9	1.7	0.9	3.5	1.7	0.7
-경운기	1.2	1.0	1.7	1.0	1.9	0.4	0.4	1.1
-콤바인	3.5	4.2	5.1	3.9	2.4	3.4	3.8	3.2
-트랙터	5.1	6.3	4.5	3.8	5.6	4.1	4.0	4.4
-기타 농기계	1.5	1.5	2.0	1.7	1.4	1.1	1.8	1.9
농축산물-소	25.3	15.0	21.7	24.5	23.1	24.4	25.7	19.2
-돼지	.	2.4	0.1	.	7.7	11.9	.	0.2
-닭	1.6	0.4	0.6	1.0	0.2	0.6	1.2	0.3
-재고 농산물	7.0	0.9	1.8	1.7	1.6	5.9	1.9	1.6
-기타 농축산물	7.7	5.3	5.7	3.8	4.8	6.1	5.4	4.7
기타 재산-운동클럽 등 회원권	7.6	6.5	4.0	9.5	9.1	4.0	3.6	4.7
-기타	9.7	12.2	14.6	9.9	7.5	11.1	11.4	7.8
경상소득 대비 비율								
금융자산-갯돈(타기 전)	9.4	9.9	9.2	11.0	10.0	11.0	7.0	9.5
-기타	92.8	151.0	174.5	169.5	200.7	219.0	967.8	160.8
농기계-동력탈곡기	2.1	4.3	14.3	3.0	7.3	13.9	9.0	5.1
-경운기	2.8	1.9	3.2	2.5	2.9	1.9	2.2	2.9
-콤바인	13.7	19.3	14.1	19.7	15.2	24.4	28.9	12.9
-트랙터	25.0	22.1	28.2	20.4	32.6	26.5	32.6	32.7
-기타 농기계	7.9	5.2	9.1	8.2	7.5	8.6	12.3	8.9
농축산물-소	508.0	-126.6	284.0	114.5	444.8	540.0	76.7	196.3
-돼지	.	41.1	0.0	.	166.0	-86.8	.	3.6
-닭	4.3	4.3	1.3	2.7	0.6	3.8	3.0	0.9
-재고 농산물	27.9	5.6	3.0	6.2	9.2	48.9	8.4	10.4
-기타 농축산물	43.7	-37.6	46.9	30.3	21.2	50.3	38.2	30.9
기타 재산-운동클럽 등 회원권	36.6	24.4	30.8	61.4	88.7	49.3	26.2	24.0
-기타	29.7	5705.1	28.2	21.5	17.8	36.7	14.5	17.1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제4절 생활비 항목

1. 조사 항목의 변화

마지막으로 생활비 관련 항목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표 3-26>~<표 3-29>는 1~18차 조사를 통해 생활비 조사 관련 항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생활비 조사 항목은 그 수도 많지만 변화도 많은 편이었다.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의 대분류 항목은 적어도 6차 조사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기타 소비지출은 13차에도 항목이 추가되었고,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은 4~6차에만 조사되었다(<표 3-27>). 주관적 생활비와 관련된 문항은 변화를 보이다가 1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제외되었다(<표 3-29>).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과 주관적 생활비를 제외하면 최근 들어 생활비 관련 항목은 특별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비 항목의 응답 특성 역시 최근의 조사를 중심으로 다음 소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표 3-26〉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항목	차수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식료품비																				
-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광열수도비-난방비																				
가구가사용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육료비																				
피부신발비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27〉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2

조사 항목	1 '06	2 '07	3 '08	4 '09	5 '10	6 '11	7 '12	8 '13	9 '14	10 '15	11 '16	12 '17	13 '18	14 '19	15 '20	16 '21	17 '22	18 '23
조사 항목																		
보건의료비 지출금액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경조비																		
-종교 관련비(십일조)																		
-비영리단체 이천지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비용																		
-장기요양 비용																		
-노인 비용																		
-장애인 비용																		
-아동 비용																		
-기타 비용																		

주: 새질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28〉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3

조사 항목	1 '06	2 '07	3 '08	4 '09	5 '10	6 '11	7 '12	8 '13	9 '14	10 '15	11 '16	12 '17	13 '18	14 '19	15 '20	16 '21	17 '22	18 '23
차수 조사 연도																		
세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사회보장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표 3-29〉 한국복지패널 생활비 조사 항목의 차수별 변화 4

조사 항목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한 보조금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부모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자녀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기타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 적정생활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최소생계비																				

주: 색칠된 부분은 해당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8차.

2. 생활비 항목의 응답 특성 검토

〈표 3-30〉~〈표 3-33〉은 생활비 관련 조사 항목에서 응답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3-30〉과 〈표 3-31〉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표 3-32〉와 〈표 3-33〉은 가구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¹²⁾

생활비 항목 가운데 응답 가구의 비율이 5% 미만인 항목은 많지 않다. 가구가사용품비 중 보육료, 이전지출 중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송금, 그리고 세금 중 부동산세가 5% 미만의 응답률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생활비 항목 가운데 응답률 기준을 근거로 조사에서 제외해야 할 항목은 많지 않을 것이다.

〈표 3-30〉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소비자지출(가중치 미적용)

(단위: %)

생활비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식료품비-가정식비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외식비	93.8	94.2	94.3	94.5	93.5	89.0	89.7	91.8
-주류·담배비	44.7	45.0	43.2	44.0	42.4	43.7	42.7	41.3
주거비-월세	20.9	21.3	21.2	21.5	20.5	21.1	20.5	20.5
-주거관리비	72.1	74.1	72.8	71.7	70.7	73.9	71.9	72.0
광열수도비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난방비	99.0	99.0	99.3	99.2	99.4	99.5	99.5	99.7
가구가사용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99.6	99.6	99.1	98.9	99.4	99.2	99.4	99.2
-보육료비	5.8	5.7	5.3	4.9	4.9	4.2	4.2	3.6
피복신발비	96.0	96.5	96.5	95.4	95.1	92.8	94.1	94.0
보건의료비	96.7	97.9	97.4	97.5	97.4	99.8	99.3	99.2
교육비-공교육비	22.6	22.3	21.2	20.2	18.9	16.1	14.0	14.2
-사교육비	19.9	19.6	18.2	17.9	16.3	14.8	13.5	13.5
교양오락비	99.2	99.4	99.5	99.6	99.1	99.0	99.2	98.9
교통비	98.9	98.8	98.3	97.9	97.4	96.2	96.6	96.8
통신비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8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12) 생활비 관련 항목들은 월평균 지출액으로 조사되며, 단위는 만 원이다.

〈표 3-31〉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이전지출(가중치 미적용)

(단위: %)

생활비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기타 소비지출	100.0	100.0	99.8	100.0	99.9	100.0	100.0	100.0
-경조비	80.8	79.1	78.9	76.3	73.0	69.0	73.7	74.8
-종교 관련비(십일조)	45.6	45.5	43.3	43.8	37.7	34.5	36.3	38.5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	57.4	57.4	52.7	42.0	40.7	48.3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5.4	5.4	5.5	5.2	4.8	4.4	3.7	4.1
부모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33.5	33.8	32.7	32.4	29.7	32.3	29.0	28.9
자녀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30.9	32.5	31.3	30.2	30.4	33.5	34.6	36.3
기타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25.6	26.9	27.5	22.4	17.0	18.1	17.2	17.5
세금	86.0	92.7	92.7	92.9	94.4	94.7	94.2	95.1
-소득세	32.5	33.8	35.7	36.5	38.2	39.0	37.4	37.3
-재산세	60.2	60.7	60.9	61.6	62.4	62.9	63.5	63.6
-자동차세	44.3	45.4	45.5	46.4	46.6	46.3	47.0	47.1
-종합소득세	5.7	6.3	6.4	6.6	6.8	8.1	7.5	10.0
-부동산세	0.3	0.4	0.5	0.4	0.6	0.9	1.1	1.2
사회보장부담금	60.6	61.0	60.5	61.1	61.3	61.6	60.7	61.5
-국민연금보험료	42.4	42.9	43.3	43.5	43.3	42.9	39.9	40.2
-건강보험료	59.0	59.4	58.7	59.7	60.0	60.2	59.6	60.2
-고용보험료	34.9	35.7	36.4	36.5	36.7	36.8	35.3	35.4
총생활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32〉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소비지출(가중치 적용)

(단위: %)

생활비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식료품비-가정식비	99.9	99.8	100.0	99.9	99.9	99.9	100.0	100.0
-외식비	96.2	96.5	97.0	96.9	96.2	94.1	94.6	95.2
-주류·담배비	51.1	51.7	50.4	52.3	49.9	52.3	51.8	48.4
주거비-월세	22.5	23.0	23.5	23.7	22.7	22.7	22.2	24.0
-주거관리비	79.7	81.5	80.3	80.3	79.3	81.4	80.7	78.0
광열수도비	100.0	99.9	100.0	99.9	100.0	100.0	100.0	99.9
-난방비	99.5	99.4	99.6	99.5	99.7	99.6	99.5	99.6
가구가사용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99.8	99.7	99.3	99.3	99.7	99.4	99.4	99.4
-보육료비	6.9	6.7	6.4	6.0	6.1	5.6	6.1	4.9
피복신발비	97.1	98.0	97.9	97.1	97.0	95.4	96.5	95.3
보건의료비	96.5	98.0	97.4	97.4	97.0	99.8	99.2	99.4
교육비-공교육비	26.8	26.3	25.1	24.3	23.6	20.0	18.7	17.5
-사교육비	23.5	22.7	21.4	21.1	19.5	17.7	17.4	17.5
교양오락비	99.5	99.4	99.5	99.7	99.2	99.1	99.1	98.8
교통비	99.3	99.2	98.8	98.7	98.5	98.2	98.2	98.0
통신비	99.9	100.0	99.9	100.0	99.9	99.9	99.9	99.9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33〉 생활비 조사 항목별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 - 이전지출(가중치 적용)

(단위: %)

생활비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기타 소비지출	100.0	100.0	99.8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조비	85.4	84.6	84.6	82.2	79.6	76.6	80.6	78.9
-종교 관련비(십일조)	43.0	43.4	40.7	41.5	35.8	32.7	33.9	36.8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	66.2	65.5	61.7	53.2	50.5	52.6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7.2	6.9	6.8	6.3	5.9	5.9	5.1	4.6
부모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46.9	47.6	46.7	46.4	42.9	47.0	46.4	38.5
자녀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25.0	26.3	26.3	25.2	25.6	29.0	28.5	32.4
기타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비	26.8	29.4	31.7	25.5	18.5	22.2	22.4	20.4
세금	88.7	93.9	94.2	94.5	96.2	96.5	96.1	95.9
-소득세	46.2	47.7	50.7	51.4	54.2	54.4	55.7	49.5
-재산세	59.6	60.1	60.1	61.4	62.4	63.2	63.1	62.1
-자동차세	55.1	55.7	56.7	57.9	58.6	58.4	59.1	54.1
-종합소득세	7.8	8.4	8.5	8.8	8.8	11.2	10.5	12.7
-부동산세	0.4	0.6	0.9	0.6	1.0	1.4	1.9	1.6
사회보장부담금	74.7	75.8	75.4	76.4	77.2	77.5	78.5	72.4
-국민연금보험료	57.3	57.9	58.7	59.1	60.0	58.9	59.3	52.5
-건강보험료	73.2	74.3	74.0	75.3	76.0	76.1	77.4	71.3
-고용보험료	47.3	48.4	50.1	50.0	51.0	50.9	52.0	46.3
총생활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표 3-34〉 특정 생활비 지출이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항목의 지출 비중

(단위: %)

생활비 항목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총생활비 대비 비중								
보육료비	9.4	9.4	9.7	9.7	8.9	8.9	9.1	8.7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송금	11.6	11.3	11.7	10.9	10.9	10.8	11.0	11.9
부동산세	2.2	5.9	1.7	2.2	2.2	1.8	2.9	3.4
경상소득 대비 비율								
보육료비	0.7	0.7	0.7	0.7	0.6	0.6	0.7	0.6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송금	1.0	0.9	0.9	0.9	0.8	0.8	0.9	0.9
부동산세	0.2 (0.3)	0.7 (1.1)	0.1 (0.5)	0.2 (0.4)	0.2 (0.5)	0.2 (0.6)	0.2 (1.6)	0.2 (1.5)

주: 괄호는 세금 총액 대비 비중.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1~18차.

마지막으로 〈표 3-34〉는 〈표 3-30〉~〈표 3-33〉에서 지출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5% 미만인 항목에 대해, 해당 지출의 총생활비 대비 비중과 경상소득 대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보육료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료 지출이 있는 가구에서도 보육료가 총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가 가구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한다.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송금이 총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안팎에 불과하고 부동산세의 경우는 3.4%(18차 조사)였다. 부동산세의 경우 전체 세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지출이 관측되는 표본 수가 적고 그 경우에도 전체 지출 중 비중이 크지 않다면 그 항목의 조사를 지속해야 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 중인 소득, 부채, 자산, 생활비 관련 항목 중 향후 조사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조정은 조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조사 수행체계가 바뀔에 따라 항목 조정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해질 경우 어떤 항목을 우선 제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항목의 값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11차~18차 조사에서 그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5% 미만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0보다 큰 값이 관측되는 경우는 적지만 일단 해당 항목이 관측된 경우 그 항목의 경제적 중요성이 큰 가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0보다 큰 값이 관측된 가구에 한하여 해당 항목이 총소득(소득 항목)이나 총부채(부채 항목의 경우), 총자산(자산 항목의 경우), 총생활비(생활비 지출 항목의 경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항목을 살펴본 결과, 소득에서는 급식비 지원, 가구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 양육수당, 보육료, 자녀장려세제 등이 우선적 검토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자산의 경우 탈곡기, 경운기 등 농기계와 돼지나 닭 같은 농축산물 일부 항목이 관측되는 경우도 적고 자산 내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 가운데에는 보육료, 부동산세 등이 우선적인 검토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조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결정할 때에는 관측 빈도나 전체 소득(또는 자산이나 지출) 대비 비중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측 빈도가 적더라도 다년간의 조사를 연결하여 분석할 경우 유의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하위 항목을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위 항목에 대한 조사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 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조사체계의 개편에 따라 조사 항목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에서 제외할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표본 수의 부족에 따른 통계 분석의 유의성 결여와 분석의 유용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측 표본 수의 부족이나 가구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별개의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할 항목들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이력과 관련된 문항이나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및 근로의욕 관련 문항들이 그 예이다. 이 문항들은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 등과 관련된 시기적 특성에 따라 조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복지제도에 비추어 특별히 이 두 제도에 대해서만 관련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 또한 제도의 시행 이후 행정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조사 자료보다는 행정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많은 경우도 있다. 조사 항목을 재정비할 경우 이들 항목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사회서비스 조사 내용 현황 및 발전 방향

제1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검토 방향

제2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변화 및 현황

제3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쟁점

제4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발전 방향



제 4 장

사회서비스 조사 내용 현황 및 발전 방향

제1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검토 방향

한국복지패널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소득·자산이나 고용 분야에 비해 중요도가 높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될 당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역동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상태나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은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이전인 탓도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사업은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2011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정의되었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의 정책 대상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을 벗어나 크게 확장되고 있어,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18년에 걸친 한국복지패널의 역사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는 강화되거나 확장되었다기보다는 초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이 사회보장 정책·학술 연구에서 활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조사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에서 사회서비스 영역 조사의 내용과 구조를 진단하고, 18년에 걸친

한국복지패널의 역사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조사에서의 쟁점을 도출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변화 및 현황

이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조사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에 더해, 일반 가구,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로 구분된 조사표 순서대로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사회서비스 조사의 구조

한국복지패널의 사회서비스 분야 조사는 가구용 조사표의 네 가지 파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파트와 함께,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복지서비스 이용 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 가구,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 각각에 대해 복지서비스 항목별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외에 가구의 복지서비스에서는 바우처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대해, 아동가구 복지서비스에서는 신규 아동(자녀)과 사교육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서비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파트가 모두 사회서비스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 생계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같이 소득보장 현금급여

이용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내용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로 볼 수 있는 이들 파트에서 조사 단위는 대부분 가구이다. 가구용 조사표에서도 가구원별 상태를 모두 조사하는 개인 단위 문항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체로 가구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예외적으로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파트에서는 신규 아동(자녀)의 건강 상태와 사교육보육기관 이용에 대해 가구 내 아동 개인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1〉 한국복지패널의 사회서비스 조사 구조

조사 파트	조사 내용	조사 단위	조사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가구 복지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장기요양보험급여	가구	가구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가구	가구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신규 아동(자녀)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가구/개인	가구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가구	가구용

주: 18차 조사 기준이며, 문항 수는 수반형 질문을 포함하여 집계함.

출처: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3, pp. 37-45.

가장 최근인 18차 기준의 조사 내용 구성이 처음부터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1차 조사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해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장애인가구에 대해 장애인 생활·보호의 어려움을 질문하였다가 2차 조사부터 삭제하였다.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파트에서 바우처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급여 조사 내용은 해당 사업의 시행·확산에 따라 2009년 4차 조사부터 포함되었다. 또한 신규 아동(자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은 1차

조사부터 유지되다가 2020년 15차 조사에서 삭제되었고, 이후 16차 조사에서 다시 복원되었는데, 15차 조사에서 일시적으로 누락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조사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여유진 외, 2020, pp. 23-24).

〈표 4-2〉 한국복지패널의 사회서비스 조사 내용 변화

조사 파트	1차	2~3차	4~14차	15차	16~18차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가구 복지서비스				
	-	-	바우처 서비스		
	-	-	장기요양보험급여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양육 어려움	-	-	-	-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신규 아동(자녀)			-	신규 아동(자녀)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장애인 생활보호 어려움	-	-	-	-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가구의 복지서비스 파트의 조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복지서비스 항목별 이용 실태이다. 파트별로 복지서비스는 성격에 따라 11~14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이러한 복지서비스 항목에 대해 필요성 정도, 이용 여부,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만족도의 네 가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 필요성 정도를 삭제하였고, 7차 조사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 8차 조사부터는 이용 만족도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8차 조사부터 가장 최근의 18차 조사까지는 복지서비스 항목에 대해 1년간 이용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다.

〈표 4-3〉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 조사 내용 변화

1차	2~6차	7차	8~18차
필요성 정도	-	-	-
이용 여부			
서비스 제공기관		-	-
이용 만족도			-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가구 복지서비스 파트에 있는 바우처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조사도 시간이 갈수록 간소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바우처 서비스의 경우 처음으로 도입된 4차 조사에서 이용 여부와 이용 만족도를 질문하다가 7차 조사에서는 본인부담금 문항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8차 조사부터는 이용 만족도와 본인부담금 문항을 삭제하고 이용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항목별로 이용 여부를 바로 질문하는 복지서비스 문항과 달리, 바우처 서비스는 전체 이용 여부를 질문한 후,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세부 사업 항목별 이용 여부를 질문한다는 것이다. 즉 여과형 질문(filter question)과 수반형 질문(contingency question)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부족한 응답 가구의 경우에는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표 4-4〉 바우처 서비스 조사 내용 변화

4~6차	7차	8~18차
이용 여부(전체-항목별)	이용 여부(전체-항목별)	이용 여부(전체-항목별)
이용 만족도(항목별)	이용 만족도(항목별)	-
-	본인부담금(항목별)	-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장기요양보험 급여 조사 또한 처음 도입된 4차 조사에서는 이용 여부, 본인부담금, 이용 만족도를 질문하였으나 8차 조사부터 이용 만족도 질문을 삭제하였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경우에도 전체 이용 여부를 질문한 후 세부 급여 항목별 이용 여부를 질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바우처 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단일 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과형-수반형 질문 구조로 인한 응답 누락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급여 항목별로 질문하지 않고 총액으로 질문하고 있다.

〈표 4-5〉 장기요양보험급여 조사 내용 변화

4~7차	8~18차
이용 여부(전체-항목별)	이용 여부(전체-항목별)
본인부담금(총액)	본인부담금(총액)
이용 만족도(항목별)	-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2. 가구 복지서비스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파트에서 복지서비스 항목은 대체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1개 항목으로 시작되었고 가장 최근의 18차 조사는 구분 항목 수는 11개로 동일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의 다섯 개 항목은 1차 조사부터 18차 조사까지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조사부터 포함된 ‘가정봉사 서비스’ 항목은 16차 조사부터 ‘가사지원 서비스’로 변경되었는데, 항목 명칭 변경과 함께 예시로 ‘안

전지원서비스'가 추가되어 포괄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업 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항목도 1차 조사부터 이어지다가 11차 조사에서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로 변경되었는데, 자활근로가 앞에 제시된 고용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포괄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는 1~7차 조사에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8차 조사부터는 이를 상담서비스로 통합하였다.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항목은 각각 5차, 8차, 15차 조사부터 추가되어 최근 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우처 서비스의 항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개별 바우처 서비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복지패널의 바우처 서비스 항목도 변화하였다. 처음 조사가 시작된 4차 조사에서 바우처 서비스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18차 조사에는 1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사업들이 추가되어 왔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비만아동 건강 관리서비스 사업은 사업 형태 전환으로 인해 중도에 삭제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외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같이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세부 항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처음 조사가 시작된 4차 조사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구분은 18차 조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다.

(표 4-6) 가구 복지서비스 향목의 변화

1~4차	5~7차	8~10차	11~14차	15차	16~18차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안전지원서비스 등)		
식사(혹은 밀반찬) 배달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지활근로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서비스		
약물(알코올)상담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용자				
-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	-	-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주: 포괄 범위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용어 수정은 항목의 변화로 간주하지 않음.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표 4-7) 바우처 서비스 항목의 변화

4차	5차	6~9차	10~11차	12차	13~14차	15차	16~18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	-	-	-
비만아동 건강 관리서비스				-	-	-	-
-	-	-	-	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	임신출산 진로비지원제도						
-	-	-	-	-	-	-	아이돌봄지원
-	i사랑 보육서비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	-	언어발달지원사업					
-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	-	-	-	-	-	
-	-	-	-	에너지바우처			
기타 바우처서비스							

주: 포괄 범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용어 수정은 항목의 변화로 간주하지 않음.

출처: "한국복지매널조사 기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2.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노인가구 복지서비스는 대체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10개 내외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원’과 같이 기능에 따른 구분이 아닌 특정 사회보장급여가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항목 중에서 기초연금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는 1~18차 조사에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원은 처음에 경로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이후에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기능 면에서 동일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노인 무료 급식’의 경우 10차 조사까지 본인부담금이 없는 완전 무료인 경우로 한정하다가, 11차 조사에 ‘노인 급식’으로 변경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하지만 다시 12차 조사부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무료인 경우만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11차 조사에 한해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한국복지패널에서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완전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복지서비스로 보지 않는 것인데, 급식 지원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과 완전 자부담을 구분하기 어려워 발생한 혼선으로 판단된다.

세부 내용이 추가되면서 포괄 범위가 변한 항목이 많다.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는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로, ‘주간보호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로, ‘교통수단 지원’은 ‘이동편의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는 ‘사회참여 서비스’로 포괄 범위가 확장되었다.

〈표 4-8〉 노인기구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

1~2차	3차	4차	5~10차	11차	12~15차	16~18차
기초연금 지원(경로연금 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원 → 기초연금 지원)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노인 급식(무료 및 일부 본인부담금 포함)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주간보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	-	-	-
노인일자리사업						
-	-	-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사회참여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나들이, 자조모임 등)						

주: 포괄 범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용어 수정은 항목의 변화로 간주하지 않음.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3.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아동가구 복지서비스는 1차 조사에서 10개 항목으로 구분되었는데, 18차 조사까지 변화 없이 유지된 항목은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학비 지원’, ‘문화활동’ 3개에 불과하다. 그만큼 변화가 많았던 영역이다. 또한 대체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아동수당과 같이 특정 사회보장급여가 항목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항목의 변화 중 보육시설이 ‘어린이집’(1~2차)에서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3~6차), 이후에 ‘공공어린이집’(7~18차)으로 바뀐 것은 포괄 범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복지서비스’의 정의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어린이집’도 공공의 성격을 가진 경우만 조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복지패널 조사표에서 ‘공공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3~6차 조사의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은 이보다 포괄 범위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의 명칭 변경으로 포괄 범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더 있다. ‘방과후 지도’는 6차 조사부터 ‘방과후돌봄 서비스’로 포괄 범위가 확장되었고, ‘가정봉사 서비스’는 8차 조사부터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로 포괄 범위가 확장되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언어치료, 놀이치료)’은 4차 조사부터 삭제되었는데, 장애인가구 영역에서 포괄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유아보충식품지원’은 해당 분야의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7

차 조사부터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괄호 안에 제시된 예시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포괄 범위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시의 변화가 단순 수정일 뿐 포괄 범위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의 예시로 4차 조사부터 ‘독서 지도’가 포함된 것이 해당한다. ‘학비 지원’에 3차 조사부터 ‘장학금 등’의 예시가 삭제된 것, 그리고 ‘문화활동’에 4차 조사부터 ‘영화’ 예시가 추가된 것도 포괄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예시의 변화가 포괄 범위에 차이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예체능 교실’에서 4차 조사부터 ‘영어’가 삭제된 것은 포괄 범위에 차이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영어 교육은 예체능 교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예시로 제시한 1~3차 조사는 그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체능 교실’에서 이후 예시로 ‘음악’과 ‘체육’이 추가된 것은 포괄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료급식’에 ‘반액급식’이 예시로 추가된 것은 포괄 범위의 변화에 해당한다. 다만 이후 ‘반액급식’이 ‘급식지원’으로 변경된 것은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 항목에 5차 조사부터 ‘양육수당’이, 6차 조사에서 ‘출산장려금’ 예시가 추가된 것은 포괄 범위의 변화에 해당한다. 출산장려금 예시는 7차 조사부터 다시 제외되었는데, 6차 조사에 출산장려금이 포함된 것은 일시적 혼선으로 판단된다.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파트에 있는 신규 아동(자녀)에 대한 조사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조사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후에 제시되는 사교육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조사는 보육 영역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다. 다만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육 영역이 혼재되어 있고, 문항과 보기 항목들이 다른 파트에 비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표 4-9〉 아동기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13차	14~18차
-	-	-	-	-	-	-	-	이동수당
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언어치료, 놀이 치료)								
방과후 지도(공부방 등)								
무료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무료급식(학교)								
학비 지원								
예체능 교실(컴퓨터, 영어, 미술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	-	-	-	-	-	-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	-	-	-	-	-	-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주: 포괄 범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용어 수정은 항목의 변화로 간주하지 않음.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4.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의 항목도 다른 파트와 같이 대체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같이 소득보장 현금급여는 사업별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6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8차 조사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항목의 변화가 상당히 많았다.

소득보장 현금급여 중 장애아동수당은 중도에 명칭 변경(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아동수당)만 있었을 뿐 포괄 범위에 변화는 없었으나, 2010년에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어 기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새로운 장애수당으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1~5차에서의 장애수당과 6차 조사 이후의 장애수당은 항목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에서는 항목의 통합이 크게 이루어졌다. ‘재활 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과 ‘의료재활서비스’는 8차 조사부터 ‘의료재활서비스’로 통합되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와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등 사업권’이 4차 조사부터 ‘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로 통합되었다. ‘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지만 한국복지패널에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와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등 사업권 제공 등”으로 정의하여 1~3차 조사에서의 두 개 항목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3개 항목을 4차 조사부터 ‘사회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로 통합하였다. 이후 8차 조사부터는 ‘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를 ‘사회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에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1~3차 조사에서의 5개 항목이 8차 조사에 이르러 1개 항목으로 통합되었다.

〈표 4-10〉 장애인기구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

1~3차	4~5차	6차	7차	8~14차	15~16차	17~18차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장애이동부양수당 → 장애이동수당)						
생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장애인보장구 할인 포함)				의료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포함)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등 사업권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					사회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이동 보육비 지원	장애이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장애자녀 교육비 및 학습지원 서비스	장애이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등					
자동차 관련 지원						
-	-	-	-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주: 포괄 범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용어 수정은 항목의 변화로 간주하지 않음. 6차 조사에서 기존의 장애수당과 개편된 장애수당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모두 조사하였으나 간명함을 위해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기구용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1~18차 조사표를 토대로 정리함.

반대로 항목이 분화된 경우도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4차 조사부터 ‘가정봉사 서비스’와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로 분화되었다. 이후 ‘가정봉사 서비스’는 ‘가사지원 서비스’로,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는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최근 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동편의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자동차 관련 지원’ 항목은 1차 조사부터 최근 조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익보장 지원’도 15차 조사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과 ‘장애자녀 교육비 및 학습지원 서비스’는 4차 조사부터 각각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포괄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쟁점

1. 조사 단위

사회서비스 영역 조사에서 우선 쟁점 사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조사 단위의 문제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를 대체로 가구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회보장 영역의 연구는 대체로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사 단위는 개인 혹은 가구라고 볼 수 있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로 쟁점을 요약할 수 있을 것

이다.¹³⁾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조사 대상이 발생·작동하는 단위와 조사의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 단위에 따라 조사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보면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문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대체로 개인 단위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회 서비스 욕구에서 가구 혹은 가족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가사나 주거에 대한 지원은 함께 동거하는 가구 구성원의 집단적인 욕구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출산 초기에 발생하는 돌봄과 건강에 대한 욕구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가족관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욕구도 가족을 단위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욕구의 발생 단위에 따라 제대로 설계되었다면 앞에서 제시된 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작동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상 단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상 단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대상자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등 많은 사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3) 사회서비스 욕구 발생 혹은 이용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경우, 가구 외에도 가족, 세대, 가정, 부부 등 유사 단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가구'로 통칭하여 논의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역시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가구 단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와 같이 지원 대상을 ‘가정’이나 ‘세대’로 설정한 사업도 일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조사 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의 활용성과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먼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구 조사가 개인 조사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한국복지패널 표본은 18차 조사 기준 7,654가구에 가구원 15,931명으로(이태진 외, 2023, pp. 61-62), 동일한 조사 문항 및 항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 조사에 비해 개인 조사는 2배가 넘는 양이다. 게다가 가구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구 단위 조사에 비해,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개인 단위 조사는 단순한 조사 케이스의 증가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활용성 측면에서는 가구 조사에 비해 개인 조사가 확실히 우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대체로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개인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단위 조사가 활용성이 높다. 또한 개인 단위로 조사하면 가구 단위로 집계는 가능하지만, 가구 단위로 조사하면 개인 단위로 환원할 수 없는 불가역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가구 내에서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원을 특정할 수 없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조사했다 하더라도 가구 내에 아동, 노인, 장애인이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이용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

2.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구분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3조 제4호)로 정의된다. 하지만 법률적 정의로 그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학술적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해 합의된 개념 정의를 찾기는 어려우며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하나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안수란 외, 2018).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축이 있다면, 하나는 민간과 공공 사이에서 사회서비스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기능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미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한 ‘복지서비스’의 개념에 드러나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라는 정의는 제공기관과 자원 둘 중 하나의 측면에서 공공의 성격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정의는 향후에 사회서비스 범위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서비스의 기능적 범위와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에서 18년간 복지서비스 항목의 변화가 매우 빈번했던 것을 고려하면 보편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기능적 분류 체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분류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일 것이다.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의 기

능을 성인돌봄, 아동돌봄, 건강,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의 8대 대분류로 구분하였고 18개의 중분류로 세분화하였다(안수란 외, 2021). 서비스의 이용 욕구와 경험은 18개 중분류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물론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또한 이러한 분류 체계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2019년 조사 이후에는 대체로 안정화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표 4-1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서비스 영역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성인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교육	아동 교육지원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성인 교육지원 서비스
	기타 성인 돌봄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아동돌봄	출산지원 서비스	고용	고용서비스
	보육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창업지원 서비스
건강	신체건강 서비스	문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주거	주거지원 서비스
	재활 서비스	환경	환경 서비스

출처: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안수란 외, 202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능적 분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과제가 있다. 학술·정책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복지패널에서 생산한 사회서비스 분야 데이터는 기능적 분류에 따른 조사 결과 외에도 사업이나 제공기관 단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다. 특정 서비스나 시설 이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주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복지패널에서 바우처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해 별도의 사업 단위 조사를 하는 것이 이러한 연구 수요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과 같이 제공기관 이용 자체가 연구의 관심 대상인 경우도 많다. 사

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서는 18개 기능 중분류에 시설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서비스, 재가 방문서비스, 현물 제공서비스, 기타 서비스라는 서비스 제공 형태 분류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안수란 외, 2021). 이러한 구분이 기능별 분류의 포괄성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지만 사업 및 제공기관 수준의 연구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기능적 분류에 따른 조사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 및 제공기관 단위 조사가 부가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3. 조사 내용

사회서비스에 관한 욕구는 다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이 앞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 영역의 어떠한 조사 내용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 초기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조사되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활용성 문제로 인해 삭제되고, 현재 이용 경험 중심의 조사 내용만 남은 것을 고려하면, 조사 내용 확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 내용의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측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복지서비스 항목별 욕구 문항이 1차 조사 이후 바로 삭제된 것을 고려하면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1차 조사에 포함되었던 욕구 측정 문항은 필요성 정도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서 “아주 필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록 하는 단순한 형태의 문항이었다. 이렇게 욕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욕구의 충족 정도 같은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좋으나, 사회서비스 이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학술연구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욕구는 필요성 정도로 직접 측정할 수도 있지만 생활 여건 및 삶의 질과 관련한 개인 상태를 통해 측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개인에게 필요도를 질문하여 파악할 수도 있지만, 건강 상태 자체를 욕구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욕구와 관련된 생활 여건 및 삶의 질 관련 문항을 최대한 풍부하게 측정하는 것이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조사 내용의 확대 방향은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회서비스의 이용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는데, 초기 조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과 이용 만족도, 본인부담금을 질문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정보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이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복원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 중 학술·정책 연구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을 검토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넘어 절차, 서비스 질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거나 향후 지속 이용 의향을 조사할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므로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동 접근성을 조사할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의 기간, 빈도, 시간 등 서비스의 양을 측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 해결 정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 사회서비스 이용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4. 인구학적 구분

한국복지패널의 사회서비스 영역 조사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우선 조사하고,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 욕구가 강한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조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더해 청년, 중장년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가구 복지서비스에서는 ‘가사지원 서비스’에, 노인가구 복지서비스에서는 ‘가사지원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에,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에도 ‘가사지원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분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구학적 구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노인, 장애인, 아동의 구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일반 가구 외에 특정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일반 가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특정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별도의 기능 분류 체계로 조사하는 것이 해당 인구의 특성을 잘 포착하는 방법이 된다. 둘째, 가구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원을 식별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 내에 노인, 장애인, 아동이 2명 이상 있을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 가구에 대한 조사보다는 측정 단위가 정밀해진다. 이때 두 번째 이유는 한국복지패널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조사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면 그 필요성이 해소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의 분류 체계가 노인, 장애인, 아동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에 따라 추가 분류 체계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사 파트를 유지할 경우,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인구집단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지역별로 청년센터가 설립되고 있고,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작되는 등 새로운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청년, 중장년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집단이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서비스 분류 체계가 필요할 정도의 정책 대상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기능 분류 체계에서 최근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를 반영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4절 사회서비스 조사의 발전 방향

이상과 같은 분석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국복지패널에서 사회서비스 조사의 발전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론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욕구가 대체로 개인 단위에서 발생하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다수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개인 단위로 조사가 가능

하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연구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복지패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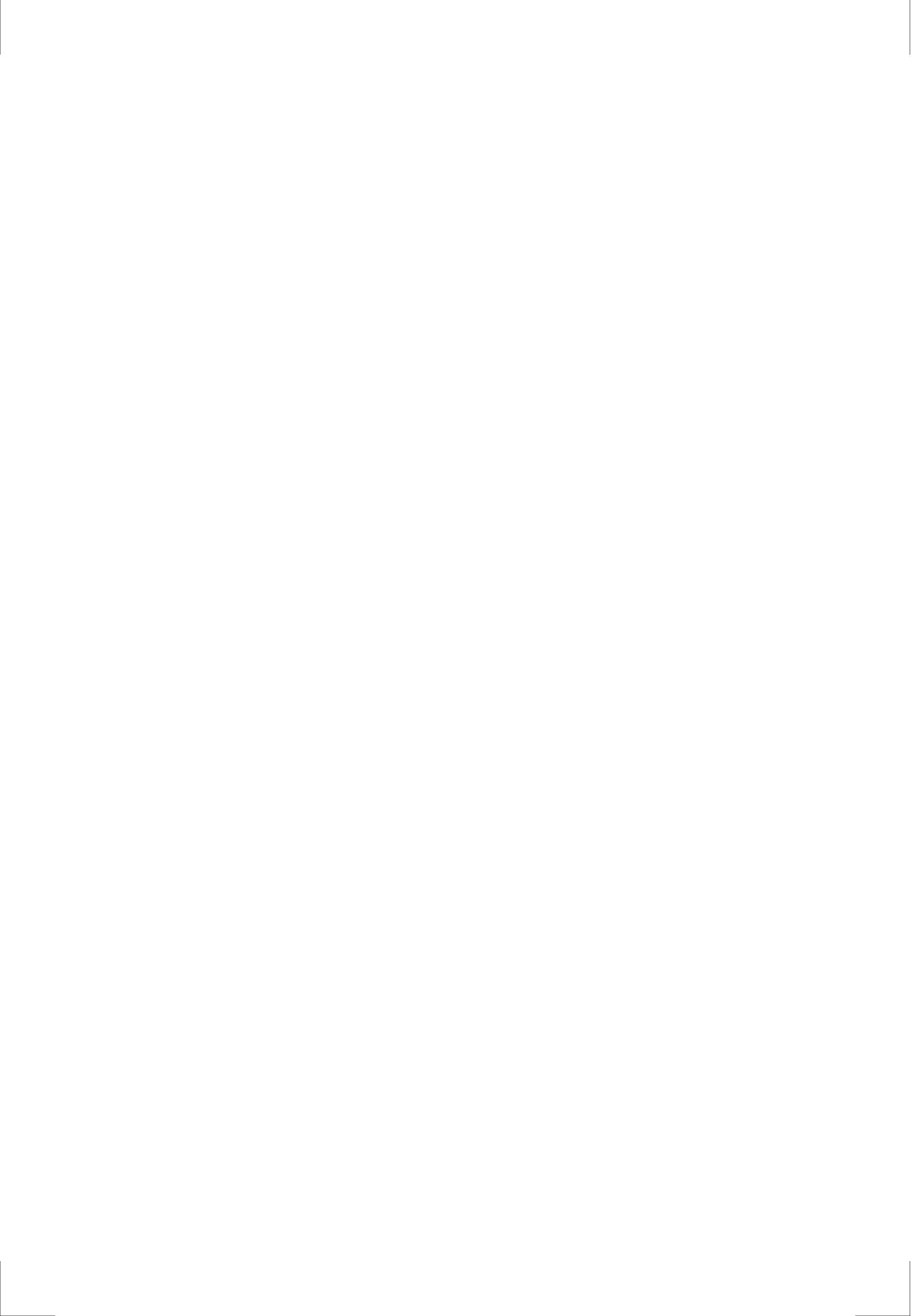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둘째,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구분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기능별 조사와 사업 및 제공기관 단위의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회서비스 기능별 조사는 보편적 활용도를 고려하여 기능 항목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기능별 조사만으로는 누락될 우려가 있는 사업 및 제공기관 단위의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모가 크면서 수급자가 특정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역할도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연구 수요 측면에서도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기존에 '복지서비스'라는 이름하에 포함되었던 일부 현금급여 사업들은 삭제하고 소득 영역에서 포괄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 내용에서는 이용 경험을 기본으로 하고, 기능별 사회서비스 항목, 사업별 조사, 제공기관 단위 조사에서 필요한 이용 경험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 이용 만족도, 본인부담금 등 과거에 조사에 포함했다가 누락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용 효과성 등 실제 연구에 활용될 만한 구체적인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 항목의 특성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사 파트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기능별 조사, 사업 및 제공기관 단위로 조사를 병행한다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조사 파트를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질문한다면 이러한 이용 경험은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네 가지 발전 방향 중 첫째와 둘째 내용은 조사표의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셋째와 넷째 내용은 현행 조사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부 수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시계열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내용이 한국복지패널에서 사회서비스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방향을 현실화한다면 조사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며, 1~18차에 걸친 사회서비스 조사의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므로 시계열 단절에 따른 손실과 새로운 조사 내용으로 인한 연구 수요 대응성을 비교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패널 운영 국내외 사례 검토

제1절 국내 패널 운영 사례

제2절 해외 패널 운영 사례

제3절 패널 운영 효율화 방향



제 5 장 패널 운영 국내외 사례 검토

이 장에서는 국내외 패널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운영 체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 운영 체계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운영 현황은 연구원 내부자료 및 보고서를 통해 파악했다. 국내 패널의 사례는 해당 패널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패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해당 패널의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패널의 조사 운영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최근의 패널 데이터 생산과 관련한 주요한 경향을 파악하여 한국복지패널의 개선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제1절 국내 패널 운영 사례

국내의 패널 운영 사례는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 단위의 대표적인 패널 조사인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재정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패널 중 상당수는 개인 단위의 조사(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청년패널조사: YP)거나 특정 연령층(예, 고령화연구패널: KLosa)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성인 대상 패널조사이며 가구 및 개인 단위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와 유사한 점이 있어 검토했다.

〈표 5-1〉 패널별 조사 목적과 표본 단위

패널명	구분	조사 목적	데이터 제공 기간	조사 주기	표본 단위
한국복지패널조사 (KoWePs)		지역, 연령, 계층별 생활실태 및 삶의 질 변화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기여	2006(1차) ~ 2025(20차)	1년	가구 및 개인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과 가구의 경제상태 변화를 파악하여 노동시장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1998(1차) ~ 2025(28차)	1년	가구 및 개인
재정패널조사 (NaSTaB)		가계의 조세 부담과 정부 지원에 대한 조세 및 재정 관련 정책과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	2008(1차) ~ 2025(18차)	1년	가구 및 개인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여성의 삶과 가족 구조, 가족생활과 가치관, 일자리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관련 자료제공	2007(1차) ~ 2025(10차)	2년	가구 및 개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2003~2008 (1기) 2010~2016 (2기) 2018~2024 (3기)	1년	개인
청년패널조사 (YP)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로를 파악하여 청년 대상 고용정책 수립 위한 기초 자료 생산과 학술연구 자료 제공을 통한 정책 개발에 기여	YP2001(~2006) YP2007(~2020) YP2021	1년	개인
고령화연구패널(KLosa)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 및 학술연구에 기여	2006(1차) ~ 2025(20차)	2년	가구 및 개인

출처: “2021년 한국복지패널조사분석 보고서,” 정은희 외, 2021; “한국의 가계와 개인의 경제활동 실태: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자료 분석,” 방하남, 안주엽, 장지연, 박은경, 호정화, 정혜원, 1999;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조선미, 김은정, 이동성, 한진영, 이진숙, 이연규, 손창균, 김근태, 계봉오, 2023; “재정패널조사 소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황진구, 김윤희, 정윤미, 2023; “청년패널2021 2차(2022)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권제혁, 박승훈, 조창법, 김필, 김성훈, 2024; “2022 고령화연구패널 (KLosa) 기초분석 보고서,” 김경희, 박진아, 홍석현, 김민혜, 2024.

이 절에서는 먼저, 개별 패널별 표본 구성과 표본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운영 및 데이터 품질관리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별

표본 구성과 표본관리 현황은 개별 패널과 관련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조사 운영 및 데이터 품질관리 현황의 경우 패널조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 연구자 및 관련 패널조사에 최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진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통해 파악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해당 패널조사 사업에 가장 최근에 일회성 참여가 아닌, 2년 이상 참여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섭외하고자 했다. 2024년도에만 참여한 연구진도 별도로 인터뷰했는데, 이는 해당 패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최근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전담팀에서 최근까지 5년 이상 관련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 1인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7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담팀에서 관련 사업 책임 연구자 1인을 섭외하여 2024년 5월 9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세재정패널데이터는 해당 사업 책임연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연구자와 2024년도 현재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 2인을 섭외하여 2024년 7월 12일과 5월 22일에 각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패널데이터의 관리 전략, 패널조사의 운영 구조 및 패널데이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1. 표본 구성 및 관리

아래 표는 패널별 조사 대상과, 표본 특징 및 신규 표본 추가 이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모두 전국 단위의 가구 조사임과 동시에 해당 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재정패널조사와 여성가족패널조사도 전국 단위의 가구 조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조사 대상인 개인의 의미는 다르다.

조사 대상인 개인을 보면, 재정패널조사는 15세 이상 소득이 있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이며,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9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패널의 조사 목적의 차이에 기인한다. 재정패널은 조세 정책이 가계와 개인 단위의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으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p.2), 그에 따라 소득신고 대상자 및 해당 가구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여성의 삶과 가족에 대한 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으로 여성이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이다(조선미 외, 2023, p.4).

〈표 5-2〉 패널별 표본 구성 및 관리

패널명	구분	조사 대상	표본 특징	추가표본
한국복지패널조사 (KoWeps)		제주도 포함, 전국 단위의 가구 및 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저소득층 과대표집을 위해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을 전체 표본의 50%로 할당하여 최초 원표본 7,072가구 조사	표본 마모로 인해 2012년(7차) 1,800가구, 2022년(17차) 2,012가구 추가했음 2023년 18차 조사 유효표본은 7,654가구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제주도 포함, 전국 단위 가구 및 15세 이상 개인	최초 원표본은 도시 거주 5,000가구로 시작, 2009년에 전국 단위로 모집단 확대	전국 단위 대표성 확보 및 표본 마모로 인해 2009년(11차)1,415가구, 2018년(20차) 5,044가구 추가했음 2023년 26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10,655 가구
재정패널조사 (NaSTaB)		제주도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15세 이상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거주 가구 300가구씩 과대표집하여 최초 원표본 5,014가구로 시작, 제도 및 정책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표본 추가	표본 마모 대응 및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2021년(14차) 4,035 신규 표본 추가, 2023년 26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9,263가구

패널명	구분	조사 대상	표본 특징	추가표본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및 해당 가구	최초 원표본 9,068가구로 시작, 표본 마모로 인해 신규 표본 추가. 가족 변동 및 정책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2기 여성가족패널 신규로 구축 예정	표본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2,163 신규 표본 추가 2023년 9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10,855가구

출처: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태진 외, 2023; “한국노동패널조사 조사개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2024. <https://www.kli.re.kr/menu.es?mid=a40201000000>, 2024. 12. 20. 인출;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조선미, 김은정, 이동성, 한진영, 이진숙, 이연규, 손창균, 김근태, 계봉오, 2023; “1~16차 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패널 사례는 모두 패널 특성상 표본 마모로 인해 추가표본을 구축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최초의 원표본 구축 당시 7,072가구로 시작했다. 그러나 원표본 유지율이 2011년 6차 조사 때 약 75%로 하락하여(정은희 외, 2021, p.13), 2012년에 1,800가구 신규 표본을 추가했다. 2012년 추가표본은 2021년 조사 당시 표본 유지율이 약 68%로 하락했으며(정은희 외, 2021, p.35), 원표본 가구 또한 같은 해에 약 54%로 하락하여 추가적인 신규 표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에 2,011가구를 추가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최초로 구축한 원표본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로 시작했기 때문에 표본 마모뿐 아니라 데이터의 전국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사 모집단을 도시에 한정하는 것은 도시 이외의 지역별 통계 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표본의 마모로 인해 분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김재광, 2009, p.1). 이에 2009년에 1차 추가표본 1,415가구를 구축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 이탈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2018년에 5,044가구를 추가로 구축했다.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 5,014가구로 시작하였으나 표본 유지율이

75%대로 하락함에 따라(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p.13),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4차 조사 때 4,035가구를 추가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16년 6차 조사 때 원표본 유지율이 68.6%로 하락(조선미 외, 2024, p.36)하여 2017년에 2,163가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패널은 최근의 가족관계 변화 및 일·가정의 생애사적 다양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정책 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사 설계 및 조사 문항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조선미 외, 2024, pp. 40~43).

종합해 보면, 패널데이터에서 표본 마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며, 유효표본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분석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추가표본은 표본의 대표성과,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패널조사는 조사 대상과 조사 문항의 안정적인 유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동일한 조사 대상에게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와 조사 문항의 유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원표본의 단절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원표본과 신규로 추가한 표본을 통합한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널조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환경과 정책적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조사 대상과 조사 문항을 변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사 설계 및 문항 변경의 과정은 일정한 패널 단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기 여성가족패널과 같이 새로운 표본 구축을 고려하기도 한다.

2. 조사 방식과 운영 구조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여성가족패널은 전문 조사업체에 조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전문 기관이 아닌 조사원과

일대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숙련된 조사원 모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은 오래된 장기 패널조사로 2024년 현재 19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2006년 구축 초기부터 투입되어 장기간 조사를 담당해온 숙련된 조사원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어 신규 조사원 발굴이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가 구축될 당시에 비해 현재는 다양한 패널조사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숙련된 조사원 확보 및 새로운 조사원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에 대한 높아진 민감성으로 조사 난이도가 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조사 환경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5-3〉 패널별 조사 방식과 운영 구조

패널명	구분	조사 수행 방식	패널 운영 조직	비고
한국복지패널조사 (KoWePs)		개별 조사원에게 위탁	- 패널협의회에서 연구진 구성 - 데이터 조사관리팀 - 서울대학교와 컨소시엄	- 숙련된 조사원 활용 - 개별 조사원과 일대일 계약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전문 조사업체 (한국리서치)	패널데이터 연구실 내 노동패널팀 전담 인력	-조사 수행 관련 전문 인프라 활용 가능 -패널조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조직) 운영
재정패널조사 (NaSTaB)		전문 조사업체 (입소스) 1~11차: KANTAR 12차: 닐슨코리아 13차 이후: 입소스	재정패널팀 전담 인력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전문 조사업체 (한국리서치)	전담 연구자가 담당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조사원과 일대일로 계약하는 방식은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에 비해 조사관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복지패널은 조사원 관리 운영을 데이터 조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다. 이는 다른 패널조사에 비교하면,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조사전문업체 위탁 방식은 조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원 관리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여성가족패널은 조사원 관리를 위한 인력이 없으며, 조사 설계 및 분석을 위한 연구 전담 조직 혹은 인력만 활용하고 있다.

패널별로 연구진 운영 방식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제외하면 전담조직을 두거나 전담 인력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패널데이터 연구실에 노동패널팀과 사업체패널팀을 두고 있으며, 실장이 두 개 패널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진행하는 노동패널팀에는 팀장 1인과 팀원 3인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돼 있다. 재정패널조사 또한 조세재정전망센터에서 센터장 1인과 센터원 2명이 재정패널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또한 조사 책임 전담 인력 1인을 배치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또한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이 존재한다. 다만, 표본추출 및 가중치 설계 같은 조사 설계 업무 일부와 조사원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3~4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조사총괄 및 조사 설계와 분석에는 전담 인력이 없으며, 한국복지패널원내협의회가 책임 연구자 1인과 연구원 4인을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책임연구자는 2년, 연구원은 3년 단위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패널데이터는 조사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전담 인력이 3인 정도지만 한국복지패널조사는 8명에서 9명에 이른다.

종합하면,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타 조사에 비해 조사 운영을 위한 인력

이 약 2~3배 정도 많다. 개인 위탁 방식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수급의 어려움과 조사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은 한국복지패널의 현재 조사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조사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 없이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조사 운영 방식을 타 조사 패널과 같이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되, 개인 위탁 방식의 장점을 취하면서 업체위탁 방식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해외 패널 운영 사례

1. 미국의 PSID¹⁴⁾

가. 표본의 구성 및 유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는 1968년 미국 5,000가구에 거주하는 약 18,000명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운영해 온 가구 패널 조사이다. 미국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추진한 빈곤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미국 경제기획국(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OEO)에서 1966년 미국 통계청(the US Census Bureau)에 의뢰한 경제기회조사(the 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 SEO)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김태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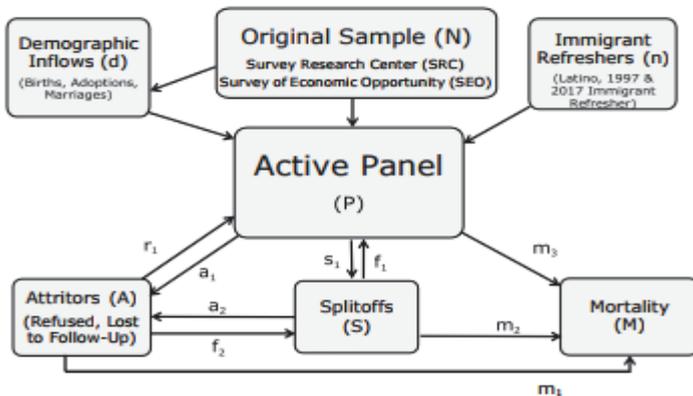
14) PSID 홈페이지(<https://psidonline.isr.umich.edu/Guide/default.aspx>에서 2024.12.15.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18, p.57), 경제기획국(OEO)은 빈곤 관련 역동성 파악을 목적으로 표본 중 저소득 가구로 구성된 하위 표본조사를 지속하고자 미시간대학 조사연구센터(The Survey Research Center, SRC)에 저소득 표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당시 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였던 제임스 모건(James Morgan)은 미국 전체 인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 가구 표본에 미시간대학 조사연구센터에서 실시하는 비빈곤 가구 표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PSID를 구성했다(김태완 외, 2018, pp.57-58). PSID는 한국복지패널과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분가 가구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표본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이다. 더불어 1997/1999년과 2017/2019년에 이민자 표본을 추가하여 미국 인구의 대표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PSID는 임금 및 소득, 고용, 지출, 재산, 연금, 교육, 건강, 가족 구조 등 다방면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며,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PSID 홈페이지, PSID 개요).

PSID는 1968년부터 1997년까지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이후 2년마다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중장년층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있어 이탈률이 낮은 장점을 가지며,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1968년 약 5,000가구에서 2021년 기준 9,200가구 이상, 가구원 2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까지 약 84,000명 이상의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표본 가구에서 최대 7세대까지 출현했다(PSID 홈페이지, PSID 개요;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8). 즉, 원표본 가구의 가구원들이 분가하여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할 경우, 표본 가구원의 자녀도 추적 조사를 함에 따라 표본의 보충, 전국 대표성 확보, 세대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태완 외, 2018).

PSID의 활동패널(Active Panel, P)로 유입되는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5-1]과 같다. 1968년 원표본(N)과 1968년 이후 유입된 이민자 대표성 확대를 위해 추가한 1997년, 2017년 이민자 표본(n), 마지막으로 기존 가족의 출산 및 결혼으로 원표본에서 발생한 추가표본(d)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대 간 요소로는 성인이 되어 독립된 가족을 형성하여 분가함에 따라 추가표본(S)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활동패널(P) 표본 수에 영향을 미치는 증가 요인, 감소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증가 요인으로는 추적 상태에 대한 규칙(f_1 , f_2)으로 인해 추가 신규 가구를 발굴하는 경우(f_1 , f_2 흐름의 증가), 표본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a_1 , a_2) 및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이전 차수에서 조사되지 못한 가구에 재접촉(r_1)하는 것 등을 고려한다. 반대로 활동패널(P), 추가표본(S), 손실된 표본(A)으로부터의 사망(m_1 , m_2 , m_3) 등을 표본 감소의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p.9-10).

[그림 5-1] PSID의 패널의 흐름도



출처: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SID-2021 Main Interview User Manual: Release 2023.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June, 2023, pp.9-10.

이러한 측면에서 원표본의 약 5,000가구에서 분가 가구의 생성으로 표본이 증대되면서 PSID의 30주년이 되는 1997년에 원표본의 2배로 증가하였다. 표본 증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면서 표본 감축을 결정하였고, 원표본 중에서 경제기획조사(SEO)의 저소득 과대표본(low-income oversample)의 일부를 제외하였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12). 또한 PSID 최초 원표본 자체에 1968년 이후 유입된 이민자를 포괄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약 2,000가구의 라틴계 표본(Latino Sample)을 추가하였다. 이들은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쿠바 등의 주요 이민자 그룹을 대표하지만, 1968년 이후 모든 이민자를 완전히 대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비용 부족으로 1995년 이후의 라틴계 표본은 제외되었다. 이후 1997년에 약 500명, 2017년에 615가구의 신규 이민자 샘플을 추가하였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p.10-11).

PSID는 장기간의 패널, 분가 가구를 허용하는 설계를 통해 세대 및 생애과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대 및 생애과정 데이터(Generational and life course data)'도 제공한다. 여기에는 각 가구가 쌍(Paired)을 이루도록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자녀 쌍 약 4,300가구, 형제 쌍 약 5,200가구, 조부모-부모-자녀 쌍 약 1,000가구 등이 포함된다(PSID 홈페이지, PSID 개요).

나. 조사 방식

PSID는 기존 CATI 방식(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동 방식은 전화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고, 컴퓨터를 통해 보조하는 방식으로, 1993년부터 PSID에서 사용되었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22). 2015년에 CATI 조사 방식에서 웹 인터뷰(Web Interview) 방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두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조사 시간, 응답 시 문제점 등 운영 문제와 함께 데이터 품질 및 비용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McGonagle, Freedman, & Griffin, 2017, p.3). 2015년에 PSID의 전화 조사 기반의 설문을 웹용으로 변환하고, 1단계 외부패널을 대상으로 웹 도구를 테스트하고, 2단계로 기존 PSID 응답자 중 협조적인 샘플(All-Stars)을 대상으로 웹 도구를 평가하였다(McGonagle, Freedman, & Griffin, 2017, p.4). 응답률은 71.2%로 웹 기반 방식(82분)은 CATI(72분)보다 응답 시간이 약 10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cGonagle, Freedman, & Griffin, 2017, p.7). 또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의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인식 등 민감한 항목에서는 CATI에 비해 웹 기반 설문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McGonagle, Freedman, & Griffin, 2017, p.15). 시간 제약이 적고 문서를 확인하면서 응답 가능하다는 점에서 웹 방식을 경험한 응답자의 97%는 웹 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cGonagle, Freedman, & Griffin, 2017, p.14).

현재 PSID는 응답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웹 방식과 전화 방식 중 선호하는 조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혼합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 응답률을 높이고자 했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홈페이지, n.d.). 2021년 현재 PSID는 웹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대상자 비율이 전체의 40% 정도로 나타난다. 웹 방식은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여, 협조적인 응답자에게 더욱 용이한 조사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전화 면접 조사 대비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는 등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인터넷 접근성 문제로 노인층과

소수 인종(예: 비히스패닉 흑인)의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이라 특정 계층의 응답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자가 직접 설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해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도움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단점 또한 존재한다(McGonagle, Freedman, Griffin, & Dascola, 2017).

다. 패널 운영 구조

PSID는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SR)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데이터 수집 부서인 조사연구운영팀(Survey Research Operations, SRO)을 두고 있다. 조사연구운영팀은 데이터 처리팀(data Processing Team), 조사도구 관리팀(Instrument Development & Production Management Team), 교육·홍보·데이터 활성화 팀(Education, Outreach, and Data Promotion Team), 애플리케이션 개발팀(Applications Development Team)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팀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검수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도구 관리팀은 설문지 개발, 표본 설계부터 실사까지 담당한다. PSID는 조사연구운영팀 내에 실사를 위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문 조사원(professional field interviewers)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은 조사 및 데이터 관리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과 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홍보·데이터 활성화팀은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제공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 등을 워크숍, 세미나, 교육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홈페이지, n.d.).

설문조사 문항 개발은 조사 전 연초부터 시작되며, 제안된 새로운 내용

들을 검토하고 기존 질문을 삭제 및 수정한다. 새로운 문항 추가 같은 내용 변경 사항은 PSID 감독위원회(Board of Overseers)에서 검토한다. 감독위원회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미국 전체의 학계, 연구자 혹은 정책 입안자로 구성된 연구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하였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홈페이지, n.d.). 또한 UM(University of Michigan)팀은 PSID의 데이터 품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표성을 평가한다. 조사 결과는 5개의 외부 데이터와 비교하게 되며, 소득, 자산, 지출, 시간 사용 및 건강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PSID 웹사이트에 공유된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68). PSID의 기존 자금 지원 기관은 미국 상무부의 경제 기회 사무소였다. 현재까지도 이 연구는 연방 정부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는 그 밖의 기관들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노화연구소,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국립 아동 건강 및 인간 발달 연구소,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가족 자선 학교, 농무부 경제연구국(Economic Research Service) 등(PSID 홈페이지, n.d.)이 있다.

라. 데이터 관리

PSID는 각 활동에 대한 요약 통계와 함께 일반 웹사이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데이터는 PSID Data Center(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연구자에게 공개된다.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SAS, Stata, SPSS, Excel 등)으로 제공된다. 2022 회계연도에 PSID 웹사이트에 총 480만 건 이상의 조회가 발생했으며, 137,320명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난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다양

한 유형과 연도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맞춤형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zip 패키지로 압축된 전체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70).

자료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 check)를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이중 체크, 조사원 체크리스트(Check List) 등의 보조적 자료를 활용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PSID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PSID 연구센터와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연구 결과물을 공식 웹사이트에 제공한다(김태완 외, 2018,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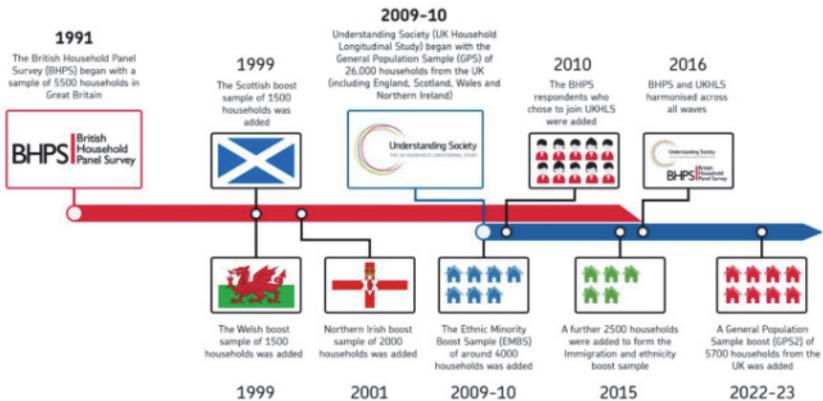
또한 표본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패널 가구를 관리한다. 패널 가구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조사답례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정보(예를 들어, 변경된 주소지 정보 등) 제공에 대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김태완 외, 2018, pp.72-73).

2. 영국의 Understanding Society(구 BHPS)

영국 가구 종단 연구(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인 Understanding Society는 영국 전역에서 약 25,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단 조사이다(Lynn, 2009, p.1). 이전 프로젝트인 ‘영국 가구 패널 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이후 BHPS)’를 기반으로 한다(Understanding Society, 2024, p.11). 1991년부터 시작된 BHPS는 전국의 약 5,500가구와 영국 250개 지역의 16세 이상 1만 300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김태완 외, 2018, p.34). 1999년에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각 1,500가구에 대한 추가표본이 주요 표본에 추가되었고, 2001년에는 북아일랜드에서 2,000가구가 추가되어 동 패널은 영국

전체 인구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김태완 외, 2018, p.34). 2009~2010년의 경우 일반 인구 표본(General Population Sample, GPS)을 활용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약 24,000가구와 2009년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약 2,000가구의 단순 무작위 표본을 설계하여 조사하였으며, 소수민족 부스트 표본(Ethnic Minority Boost Sample, EMBS) 약 4,000가구를 선정하여 설계하였다(Understanding Society, 2024, p.10). 이후 2015년 6차에 추가된 이민자 및 소수민족 부스트 표본(Immigrant and Ethnic Minority Boost Sample, IEMBS)을 활용하여 2015년에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역을 선택하여 약 2,900가구를 추가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2022~2023년 14차 조사에서는 일반 인구 표본(GPS2)을 활용하여 약 5,700가구를 추가하기도 하였다(Understanding Society, 2024, p.10).

[그림 5-2] Understanding Society 패널의 흐름도



출처: “Main Survey User Guide”, Understanding Society, 2024, p.11.

Understanding Society의 조사 대상은 선정된 가구 내 모든 가구원으로 0~9세 아동에 대한 일부 정보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수집하며, 10~15세의 가구 구성원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간단한 청소년 대상 설문지를 작성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은 개별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Understanding Society, 2024, p.13).

본 조사의 목적은 건강, 일, 교육, 소득, 가족 및 사회생활 같은 주제에 대한 종단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과 영국 인구의 일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정책 개입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Overview). 이러한 배경을 참고하여 Understanding Society의 조사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표본의 구성 및 유지

Understanding Society 주요 설문조사 표본은 대규모 일반 인구 표본(GPS)과 다른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소수 민족 부스트 표본(EMBS), 전 영국 가구 패널 조사 표본(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Sample, BHPS), 이민자 및 소수민족 부스트 표본(IEMBS)으로 구성되어 있다(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2009~2010년, 초기에는 일반 인구 표본(GPS)을 대상으로 표본이 구성되었다. 먼저 (i) 2009~2010년 영국에 거주하는 약 24,000가구의 클러스터화 및 계층화 확률 표본과 (ii) 2009년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약 2,000가구의 단순 무작위 표본(영국 부분의 두 배의 선택 확률로 선택)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소수민족 부스트 표본(EMBS) 약 4,000가구를 포함하였다. 2차 조사(2010년) 때 BHPS 표본에서 약 8,000가구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후 6차 조사

(2015년)에는 2015년에 소수민족이 많이 집중된 지역에서 추출된 약 2,900가구를 이민자 및 소수민족 부스트 표본(IEMBS)에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영국 밖에서 태어났거나 소수민족 그룹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후 최근인 2022-2023년 일반 인구 표본(GPS2)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약 5,700가구로 영국에 클러스터링되었지만 북아일랜드에 클러스터링되지 않은 표본(영국 부분과 동일한 선택 확률로 선택)이다(Understanding Society, 2024, p.10).

나. 조사 방식

BHPS(3차 조사부터)와 Understanding Society의 처음 6차 조사 시까지는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BHPS의 3차 조사와 Understanding Society의 3차 조사부터는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수행하였고, 7차 조사부터는 웹 조사 방식이 도입되었다. 7차 조사에서는 6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8차 조사부터는 7차 조사에 참여한 일부 가구의 성인도 웹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본의 20%는 대면 조사를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40%는 온라인 설문을 완성하도록 초대하였고, 나머지 40%의 대상에게는 직접 온라인 설문을 제공하였다. 이후 2020년 조사까지 온라인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표본의 비율은 최대 70%로 증가했다. 온라인으로 완료하도록 초대 받았지만 처음 5주 동안 참여하지 않은 조사 대상의 경우 참여하도록 조사원이 직접 연락을 시도한다(Understanding Society, 2024, p.13). 다음 표는 웹 기반 조사와 컴퓨터 기반 대면 조사와 전화 인터뷰 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표 5-4〉 조사 방식별 장단점¹⁵⁾

조사 방식	장점	단점	비중
웹 기반 설문조사 (CAW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효율적 - 응답 편의성 높음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속도 빠름 - 인구통계학적 정보, 일상 생활 패턴과 같은 간단한 질문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근성이 없는 응답자 배제 가능성 - 복잡한 질문에 대한 설명 어려움 - 응답자의 집중도 저하 가능성 	Understanding Society: 79%
대면 인터뷰 (CA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질문에 대한 설명 가능 - 응답자와의 라포 형성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관찰 가능 - 심층적인 개인 경험과 의견 및 생체 측정 데이터 수집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비용 - 시간 소요 - 인터뷰어 편향 가능성 	Understanding Society: 21%
전화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어려운 응답자 포함하여 지리적 제약 극복에 유리 - 비용 절감 - 빠른 데이터 수집 - 간단한 후속 질문이나, -응답률 제고를 위한 보완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질문 처리의 어려움 - 응답자의 집중도 저하 가능성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관찰 불가 	보완적 사용

출처: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Wave 11 technical report,” KANTAR, 202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대면과 온라인의 혼합 방식과 대면 조사 방식에는 참여율, 표본의 구성, 비용 절감에 차이가 있다(Bianchi, Biffignandi & Lynn, 2017). 혼합 방식과 대면 방식 간 누적 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혼합 방식 참여율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혼합 방식과 대면 방식에서 표본 구성의 차이는 미미하였지만, 온라인 조사에 응답 선호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혼합 방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

15) 조사 실시(fieldwork)는 사회경제연구소에서 전문 조사업체(칸타: Kantar Public)와 넷센사회조사(NatCen Social Research)에 위탁하고 있음(KANTAR, 2021, p.1).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웹-대면 혼합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장기 패널 조사의 참여율과 표본 구성에는 큰 영향을 변화가 없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Bianchi, Biffignandi & Lynn, 2017).

조사에 대한 답례금은 1인당 지급되며,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조건 없이 지급된다. 수년에 걸쳐 응답률을 개선하기 위해 구축한 인센티브 제도의 현재 설계 방식에 따라 마지막 조사에 참여한 모든 성인 가구 구성원과 현재 조사에서 16세가 된 구성원에게 설문조사 완료 초대장에 £20 상품권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16세가 된 응답자는 iPad를 받을 수 있는 경품 추첨에 참여하는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성인 설문조사에 초대된다. 모든 10~15세는 종이 자체 완성 설문지와 함께 조건 없이 £10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구에 새로 들어온 성인을 포함하여 이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 샘플 구성원의 경우 현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20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조건부). 웹 기반 가구의 성인에게는 5주 이내에 설문 조사를 완료하면 보너스 £10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도 한다(조건부)(Understanding Society, 2024, p.15).

다. 패널 운영 구조

Understanding Society는 에식스 대학교(University of Essex)의 사회 경제 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팀이 이끌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Topic Champions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에 소개된 해당 조사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 담당하는 연구자 그룹과, 조사 설계와 자료 생산에서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팀과 협

업하고 있다. 연구 전반을 관리하는 인력을 제외하면, Understanding Society는 방법론팀(Methodology), 혁신팀(Innovations), 향상팀(Enhancement), 데이터 연계팀(Data Linkage), 설문지 개발팀(Questionnaire Development), 설문조사팀(Surveys), 데이터관리팀(Data), 아웃리치(Outreach), 파트너십팀(Policy and Partnerships), 의사소통팀(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프로젝트 관리팀과 조사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Meet the team¹⁶⁾).

방법론팀은 설문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가중치 및 가중치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혁신팀은 혁신 패널(Innovation Panel)과 Understanding Society와 관련된 실험을 관리한다. 향상팀은 조사 방법(survey method)과 조사 내용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며, 데이터 연계팀은 영국 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Understanding Society와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발을 담당하며, 설문지 개발팀은 조사 문항 설계와 설문 개발에 참여하며, 설문 조사팀은 실사는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조사업체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여한다. 데이터관리팀은 데이터 처리와 공개뿐 아니라, 데이터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한다. 아웃리치팀은 이용자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며, 파트너십팀은 생산된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팀은 데이터 생산과 이용에 관계된 모든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관리팀은 조사의 실무와 재정관리에 관여하며, 조사 영역별 전문가는 가족과 아동, 건강, 소득, 소수민족, 이민자와 관련된 연구 영역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해당 영

16)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팀 소개(Meet the team),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about/team/?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4.12.17.인출.

역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여한다(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Meet the team¹⁷⁾).

이 외에 Understanding Society 조사는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와 전략감독위원회(Strategic Oversight Board) 및 정부 부처 공동 후원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감독된다. 전략감독위원회는 Understanding Society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데, 이들은 연구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개발 및 강화되는지를 포함하여 연구의 전략적 방향과 운영에 대해 조언하며, 연구의 진행 상황과 위험을 검토한다. 전략감독위원회는 또한 참가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참가자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가 공익을 위해 관리 및 극대화되도록 하고 연구의 주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Understanding Society의 접근 방식에 대해 조언한다.

라. 데이터 관리

Understanding Society는 UK Data Service¹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Understanding Society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데이터 세트를 신청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전에 영국 데이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 사용하려는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공개적인지에 따라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1)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EUL), 2) 특별 라이선스(Special Licence, SL), 3) SL 지리적 로케이터이다. 먼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17)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팀소개(Meet the team)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about/team/?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4.12.17.인출.)

18) UK Data Service(<https://beta.ukdataservice.ac.uk/datacatalogue/series/series?id=2000053>)

(EUL) 버전은 생년월일 및 월 변수, 자세한 생년월일 변수, 자세한 출생 국가 변수, 자세한 직업 코드, 그리고 정부 사무소가 있는 ‘지역’ 수준 이하의 지리적 로케이터와 같이 공개 위험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제공된다. EUL 버전에서 제외된 변수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세트의 SL 버전에 접근해야 한다. 영국 데이터 서비스(UK Data Service)를 통해 특별 라이선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UK Data Service는 웹 사이트에서 SL 데이터를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연구 목표를 명시하고 프로젝트에 특별 라이선스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양식을 제출한 후, 신청이 승인된 후에만 데이터 세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이하의 지리적 정보를 활용하려면 Understanding Society의 SL 버전에서 본인 확인을 한 후 활용할 수 있다(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Access Understanding Society data¹⁹⁾).

3. 시사점

미국의 PSID와 영국의 Understanding Society는 장기간 축적해온 대표적인 패널조사 사례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향후 운영관리에 참고를 위한 사례로 살펴보았다. 두 패널 모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패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196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PSID는 가구 패널 조사로, 복지패널과 유사하게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이후 패널의 지속적인 보충을 위해 분가 가구를 추적하는 방식, 예컨대 원표본의 분가 가구, 표본 가구원

19)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데이터 접근(Access Understanding Society data)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documentation/access-data/>에서 2024.12.17. 인출.)

의 자녀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표본의 보충, 전국 대표성 확보, 세대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시점마다 이민자 표본을 추가하는 등 미국 인구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조사 방식의 변화를 통해 패널 유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전화 조사(CATI)에서 웹 기반 조사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른 응답률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종단조사인 Understanding Society는 일반 인구 표본 외에도 소수민족과 이민자 표본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 계층을 반영하는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면 조사와 온라인 조사(웹 기반 설문)의 혼합 방식을 도입하여 응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 성인 응답자에게 조건 없이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등 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운영한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지속 가능성과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복지패널 역시 현재 분가 가구를 추적 조사하고 있지만, 원표본의 분가 가구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PSID의 경우 원표본의 분가 가구뿐만 아니라 표본 가구원의 자녀도 추적 조사를 함에 따라 표본의 보충, 전국 대표성 확보, 세대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도 표본 소실에 대한 대응 및 세대 간 연구 등 패널조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가 가구의 추적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방식의 다변화는 패널 유지율과 조사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조사는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고령층 같은 특정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혼합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

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조사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웹 조사 방식에 알맞는 조사 문항 수준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 데이터와의 시계열 변화, 상이한 조사 방식의 두 집단 간의 데이터 차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패널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사 문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패널 운영 효율화 방향

1. 표본 구성 및 관리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은 저소득 계층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유효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일반 가구와 같은 비율로 층화한 저소득층 과대표집 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표본 설계는 저소득층 대상 연구 대한 안정적인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이는 한국복지패널뿐 아니라 PSID나 Understanding Society의 경우에도 유효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 과대표집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특정 집단에 대한 충분한 유효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집단을 과대표집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패널조사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대표집 방식의 표본 구성은 과대표집된 집단이 분석 대상 집단이 될

때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분석 시 충분한 표본 확보로 해당 집단의 세부 분석에 용이하며,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에 유용하다. 그러나 과대표집 방식은 인구비례 표본 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첫째, 과대표집 방식은 전국 대표성을 위해 과대표집을 고려한 추가적인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중치 체계가 복잡해진다. 표본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표본을 반복적으로 구축하게 될 경우 과대표집 방식의 가중치 체계는 더욱더 복잡해진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 과대표집 방식을 반영하여 추가표본을 구축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득 정보 파악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 대상 사회정책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사회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산 제약하에 저소득층 과대표집 방식은 일반 계층의 표본 규모를 작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정책의 범위와 대상자가 일반 계층으로 확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패널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조사 설계 조정과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5〉 저소득층 과대표집과 인구비례 표본 방식 비교

구분	표본 구성	저소득층 과대표집	인구비례 표본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과대표집으로 전체 인구 대표성을 위해 표본에 대한 가중치 적용이 필요 - 표본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표본 구축 시 가중치 체계가 복잡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표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가중치 체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음
비용과 운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과대표집은 표본관리 비용이 증가함 - 표본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표본 구축 시 사전에 소득 정보 파악을 위해 추가표본 구축이 비용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집 절차가 단순함 - 추가표본 구축 시 사전에 소득 정보 파악 필요 없음

구분	표본 구성	저소득층 과대표집	인구비례 표본
분석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생활실태와 역동성(빈곤, 격차, 세대 간 이동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용이 - 취약계층 대상 정책 모니터링에 강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이슈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효과성 파악에 용이함 - 특정 소수 집단 분석 시 충분한 표본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역동성과 취약계층 대상 정책 모니터링에 초점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 대상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생활실태와 역동성 및 정책 모니터링에 초점을 둠

출처: 저자 작성

패널조사에서 패널 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패널 이탈이다. 표본 이탈은 표본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편향을 야기할 수 있어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패널조사는 패널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실사 과정에서는 조사원의 질, 응답자와 조사원과의 라포 형성,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 향상, 응답 부담 완화 등과 같이 다양한 전략을 취한다. 그럼에도 참여자의 노화, 질병, 사망 같은 자연 이탈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사 등으로 인한 패널 소실 위험도 존재한다.

패널 이탈률이 낮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에 편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지만, 일반적으로 20%를 넘게 될 경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30%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 결과의 편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Babic, Tokalic, Silva Cunha, Novak, Suto, Vidak, Miosic, et al., 2019, p.7; Deng, H illygus, Reiter, Si, & Zheng, 2013, p.238).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은 국내 패널의 경우 가중치를 통해 일부 보완하고, 패널 유지율이 70% 전후로 낮아지게 될 때 표본을 추가하여 표본 이

탈에 대응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유사한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통해 패널 이탈에 일부 대응하지만 이보다는 해당 국가의 인구집단이 변화하므로 표본의 대표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표본을 구축한다. 즉, 소수민족이나 이민자 가구의 표본을 과대표집하여 추가하거나, 해당 국가 전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응답률이 낮은 지역을 과대표집하여 추가표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가중치 적용과 추가표본 구축은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보다 국내외 패널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패널조사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해외 패널과 달리 국내 패널조사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응답자가 선호하는 웹 조사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PSID나 Understanding Society는 모두 조사 항목과 응답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웹 조사 방식과 기존의 전화 면접이나 대면 조사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응답 편의성을 높여 조사 대상자의 참여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패널데이터에서 표본 구성은 조사 목적과 비용효율성, 분석의 유용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표본은 실사 과정과 통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을 통해 관리한다. 특히 패널조사는 동일 대상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이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패널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동시에 패널조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학술적, 정책적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구성과 관리 방식은 조사의 유용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구비례 방식에 비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 방식과 운영 구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패널 중에 한국복지패널조사와 PSID를 제외하면 모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PSID와 한국복지패널은 전문 조사원을 실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직접 모집한다. 전문 조사원을 직접 모집하고 실사 관리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패널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1) 숙련된 조사원 확보에 유리 2) 조사 수행 관련 노하우 축적 등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1) 안정적인 조사원 확보와 2) 비용과 인력관리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복지패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문 조사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숙련된 전문 조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 조사업체 위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업체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조사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는 조사업체 선정 시 패널 경험이 많은 숙련된 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조사 완료 이후 조사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해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우려할 점은 조사 수행 노하우가 업체에 축적된다는 점인데, 기관에 축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복지패널이 개인 위탁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기관에 쌓인 조사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조사 수행 방식별 장단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5-6〉 조사 수행 방식별 장단점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해당 조사	비고
전문 조사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된 조사원 활용으로 조사의 질 확보에 유리 - 조사 수행과 관련한 노하우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된 조사원 안정적인 확보 어려움 - 조사 수행 위한 관리 인력 및 투입 비용 높음 	-PSID와 복지패널은 전문 조사원을 직접 모집하고 조사실사 관리를 조직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점 보완을 위해 안정적인 조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비용과 인력을 줄이기 용이하지 않음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 활용 - 조사관리 인력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수행 관련 노하우가 업체에 축적되어 업체에 의존하게 됨 - 조사업체 관리업무 필요 	- 검토한 국내 패널과 영국의 Understanding Society는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점 보완을 위해 조사 수행 노하우가 기관에 축적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숙련된 조사원 확보를 업체에 요구 - 조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 필요 - 조사업체 관리 인력 확보

출처: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및 제언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단기 및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 표본의 대표성, 2) 조사 문항의 적절성, 3) 조사 운영의 효율성이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은 2022년에 신규 표본을 추가한 이후 기존의 패널과 추가된 패널을 통합한 가중치에 대한 표본 대표성과, 전국 단위의 다른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과의 비교를 통한 횡단 대표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표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가 모집단의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상태에 따른 패널 탈락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외부 집계 자료와 비교하여 횡단적 대표성을 검토해보았다. 이 두 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로 관찰한 경제활동 상태 및 소득분배 추이를 비교한 결과, 2010년대 여성 고용률의 증가, 상용근로자 비율의 증가, 중위소득 증가와 지니계수 감소 같은 사회적 변화의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차 초기 조사에 불안정성이 있고, 일부 영역에서 세부 시계열 패턴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표본 추가로 인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의 시계열 대표성이 완전하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현재의 종단가중치가 소득이나 재산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패널 탈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대표성과 횡단면 대표성의 검증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표본 설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표본 설계는 저소득층 과대표집으로 빈곤층, 공공부조 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소득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인과관계 분석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때 내생적 표본추출로 인한 추정량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 시간에 따른 소득의 확률적 변동으로 인해 패널 차수가 축적될수록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효과가 일정하게 희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유용성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표본 설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원내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 문항의 적절성은 응답 부담과 연구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영역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토했다. 소득보장 관련 조사 항목과 관련한 특징은 1) 소득 관련 항목의 수가 다른 조사에 비해 많고 2) 특히 공적 이전 항목에 대한 항목의 수가 많으며 3) 자영업 가구의 소득 조사 방식이 조사 항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방식은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조사 문항은 응답자에게 응답 부담을 높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소득보장 관련 조사 문항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다. 아래 표는 소득보장 영역 문항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1〉 소득보장 영역 조사 문항 검토 결과

조사 항목	구체 항목	주요 관찰/검토 결과	고려 사항
소득 관련 문항	- 급식비 지원, 가구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보조금, 양육수당, 보육료, 자녀장려세제	- 해당 항목들은 관측 빈도가 낮고, 가구의 전체 소득, 자산, 지출 대비 비중도 낮음	- 분석 대상 관측치가 작아 분석의 우위성 결여 여부 - 가구의 전체 소득, 자산, 지출 등과 비교하여 해당 항목의 비중 정도 - 한 하위 항목을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위 항목에 대한 조사의 일관성을 저해하는지 - 다른 데이터에 비해 비교 우위
자산 관련 문항	- 농기계(탈곡기, 경운기 등), 농축산물(돼지, 닭 등)		
지출 관련 문항	- 보육료, 부동산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력 관련 문항	- 관련 항목 전체	- 특별히 이 두 제도에 대해서만 관련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치 않음 - 제도의 시행 이후 행정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조사 자료보다는 행정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함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및 근로의욕 관련 문항			

출처: 저자 작성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 문항의 적절성은 조사의 활용 가능성과 연구 수요 측면을 기준으로 조사 단위,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구분, 조사 내용, 인구학적 구분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 문항 검토 결과, 다음의 네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사회서비스 영역의 문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 단위를 개인 단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 개인 단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연구 수요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기능별 조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기능별 조사에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별 조사와 제공기관 단위의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 외에 복지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는 일부 현금급여 사업은 소득보장 영역에서 포괄할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

인 단위의 조사 개편이나, 사업별, 제공기관 단위로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은 현재의 조사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조사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 사회서비스 항목, 사업별 조사, 제공기관 단위 조사에서 필요한 이용 경험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구학적 구분을 유지할 경우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 더해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인구집단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사업별, 제공기관 단위로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구학적 구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

종합하면,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 문항의 검토 방향은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응답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조사의 활용 가능성과 연구의 수요 대응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이용 경험 외에 기능별, 사업별, 제공기관별 이용 경험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청년과 중장년 등 새로운 인구집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응답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조사 운영 체계의 효율성은 조사원 수급의 지속 가능성과 조사관리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실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조사원을 직접 모집하여 일대일로 개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 위탁 방식은 숙련된 전문 조사원을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인 위탁을 위한 인력과 비용 또한 현재의 방식을 지속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패널조사가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

분의 패널조사는 조사원 수급의 용이성과 조사 실사 관련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 또한 존재한다. 먼저, 모든 조사 문항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 서비스 영역과 관련한 문항만을 검토했으며, 그 외 경제활동과 건강 같은 다른 영역에 대한 조사 문항은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조사 문항과 관련해 응답 부담이나 조사 문항의 효용성 외에, 조사 목적에 맞는지, 문항 배치의 원칙을 잘 따르는지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데이터와 연계를 시도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 강신욱, 손창균, 남상호, 김계연, 손기철, 신재동, ..., 조상은. (2010).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권제혁, 박승훈, 조창법, 김필, 김성훈. (2024). **청년패널2021 2차(2022)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경희, 박진아, 홍석현, 김민혜. (2024). **2022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미곤, 여유진, 손창균, 김계연, 김문길, 서봉균, ..., 윤민석. (2006). **2006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미곤, 여유진, 손창균, 김문길, 유현상, 서봉균, ..., 지은정. (2007).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미곤, 손창균, 여유진, 김계연, 유현상, 오지현, ..., 김혜진. (2008). **2008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문길,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신재동, 정희선, ..., 함선유. (2016). **2016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재광. (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추가 연구 용역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 신유미.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태완, 오미애,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 김정욱.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태완, 이병재, 이주미, 최준영, 김기원, 박수지, 송치호, 주찬희.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 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호, 최현수, 전지현, 신재동, 정희선, 이경진, ..., 변금선. (2011). **2011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방하남, 안주엽, 장지연, 박은경, 호정화, 정혜원. (1999). **한국의 가계와 개인의 경제활동 실태: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 자료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손창균, 김미곤, 이봉주, 강신욱, 김계연, 오지현, ..., 이원진. (2009).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안수란, 강혜규, 전진아, 유재연, 하태정, 김혜승, 조현성, 남재욱, 송아영, 송나경. (2018).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수란, 이주민, 서윤경, 김윤희, 어유경, 정세정, 박세경. (2021).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오미애, 이병재, 최준영, 이주미, 김근혜, ..., 김정욱.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여유진, 신재동, 이병재, 우선희, 한겨레, 정다운, ..., 임은정. (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류진아, 강예은, 남윤재, 신재동, 정주성, ..., 김태형. (2024).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태진, 이봉주, 하은솔, 류진아, 김지원, 신재동, ..., 김건. (2023). **2023년 한**

- 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태진, 정해식, 정은희, 오미애, 전지현, 박형준, ..., 이혜림. (2014). **2014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현주, 노대명, 오미애, 전지현, 신재동, 정희선, ..., 이혜림. (2013).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정은희, 신재동, 한겨레, 우선희, 하은솔, 김지원, ..., 임은정. (2021).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정은희, 신재동, 우선희, 하은솔, 김지원, 박나영... 김건. (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조선미, 김은정, 이동성, 한진영, 이진숙, 이연규, 손창균, 김근태, 계봉오. (2023).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수, 이현주, 손창균, 전지현, 신재동, 정희선, ..., 조영주. (2012).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2024). **한국노동패널조사 조사개요**. <https://www.kli.re.kr/menu.es?mid=a40201000000>. 2024.12.20.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별첨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2023). 2006~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https://www.koweps.re.kr:442/data/survey/list.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3). **2023년 한국복지패**

넬조사 가구용(유형1) 조사표. <https://www.koweps.re.kr:442/data/survey/list.do>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1~16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재정패널조사 소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황진구, 김윤희, 정윤미. (2023).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abic, A., Tokalic, R., Amílcar Silva Cunha, J., Novak, I., Suto, J., Vidak, M., ... & Puljak, L. (2019). Assessments of attrition bias in Cochrane systematic reviews are highly inconsistent and thus hindering trial comparability.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9, 1-10.
- Bianchi, A., Biffignandi, S., & Lynn, P. (2017). Web-face-to-face mixed-mode design in a longitudinal survey: effects on participation rates, sample composition, and costs.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33(2), 385-408.
- Cameron, A. C., & Trivedi, P. K. (2010).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Stata Press.
- Deng, Y., Hillygus, D. S., Reiter, J. P., Si, Y., & Zheng, S. (2013). Handling attrition in longitudinal studies: The case for refreshment samples.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2023). PSID-2021 Main Interview User Manual: Release 2023.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June, 2023.
- KANTAR. (2021).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Wave 11 technical report.
- Lynn, P. (2009). Sample design for understanding society. *Underst. Soc. Work. Pap. Ser.*, 2009.
- McGonagle, K. A., Freedman, V., Griffin, J., & Dascola, M. (2017). 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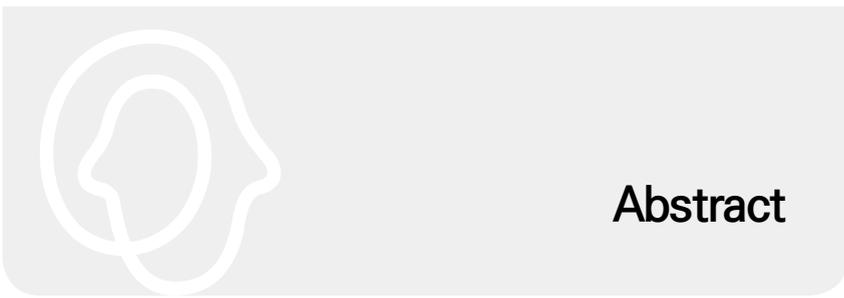
- Development in the PSID: Transition and Testing of a Web Version of the 2015 PSID Telephone Instrument. Technical Series Paper, 17-02.
- Solon, C., Haider, S. J., & Wooldridge, J. M. (2015). What are we weighting fo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2), 301-316.
- Understanding Society. (2024). Main Survey User Guide,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wp-content/uploads/documentation/user-guides/6614_main_survey_user_guide.pdf에서 2024.12.17. 인출.
- PSID 홈페이지. <https://psidonline.isr.umich.edu/Guide/default.aspx>에서 2024.12.15. 인출
-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연혁(Survey timeline).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documentation/mainstage/survey-timeline/>에서 2024.12.17. 인출.
-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개요(Overview).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documentation/mainstage/>에서 2024.12.17. 인출.
-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팀소개(Meet the team).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about/team/?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4.12.17. 인출.
- Understanding Society 홈페이지. 데이터 접근(Access Understanding Society data).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documentation/access-data/>에서 2024.12.17. 인출.
- 통계청. (2025a).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집계자료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 통계청. (2025b).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 통계청. (2025c).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데이터 세트]. 국가

통계포털. 2025. 1. 31. 검색, <https://kosis.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데이터 세트]. 2025. 1. 31. 검색, <https://www.koweps.re.kr>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2021).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 Focusing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Project Head: Jung, Eun Hee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in three areas—sample representativeness, survey questionnaire adequacy, and survey operational efficiency—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view revealed that, although representativeness is generally maintained through weighting adjustments that account for population changes and panel attrition, several issues emerged when cross-sectional analyses were conducted against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sets such a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the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 For instance, instability in the initial surveys, discontinuities in time seri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samples, and potential biases from long-term weighting calculations that do not adequately consider socio-economic factors like income and wealth were observed.

The current sample design oversamples low-income groups to facilitate detailed analysis of these populations. However, as social security policies expand to encompass the entire pop-

Co-Researchers: Kang, Shin-Wook · Lee, Wonjin · Oh, Ukchan · Shin, Jae-Dong · Lee, Jumi

ulation, including the middle class, there is a risk of endogenous sample selection bias when income is used as an outcome variable without appropriate weighting.

With respect to survey questions, the continuous addition of items to promptly reflect policy changes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respondent burden. In particular, while items related to income security have been significantly expanded, those pertaining to welfare services have been relatively reduced.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prioritizing the review of items with low response frequency and minimal impact, and identifies items with lower competitiveness—compared to other data sources in terms of accuracy and usefulness—as candidates for improvement. In the welfare services domain, measures such as converting the survey unit to the individual level, reorganizing items by function, and incorporating detailed information on service usage experience were examined to better meet research demand. Moreover, the need to reexamine demographic classifications in order to better capture emerging population groups was also highlighted.

Finally, the current survey operation system, which relies on contracts with individual researchers, has contributed to maintaining data quality through systematic training; however, its sustainability is threatened by an aging workforce, difficulties in recruiting new personnel, and increasing administrative burde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proposes out-

sourcing survey operations to a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ion, drawing on best practice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nel surveys.

In summary, this study aims to present concrete improvement strategies that refine the sample design, survey questionnaire structure, and operational framework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reby continuously enhancing the qual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its data.

Key words: Koweps Sample representativeness, survey questions